

2014년 한중좌담회/2014年 中韩座谈会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 비전 韩半岛和平统一进程与中韩合作展望

2014.5.22(목) 09:30~18:00, 북경대 보야 국제호텔

2014.5.22(周四) 09:30~18:00, 北大博雅国际酒店

주최 主办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北京大学韩半岛研究中心

韩半岛问题论坛

[2014년 한중좌담회]

구분	내용
대주제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 비전
공동 주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경대학한반도연구센터, 한반도문제포럼
일자/장소	2014년 5월 22일 (목) 09:30~18:00, 북경대 보야 국제호텔
제1회의 9:30~12:00	[한반도 통일 비전과 쟁점] • 사 회: 박명규 (서울대) • 발표1: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망 / 박영호 (통일연구원) • 발표2: 한반도의 “통일필망론”과 “속통론”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 / 천평진 (북경대) • 발표3: 한중북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극복해야 할 과제 / 가오하오롱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 토 론: 중국측, 박창희 (국방대), 송영훈 (서울대),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찬: 12:00~14:00	
제2회의 14:00~16:30	[협력적 지역질서 형성 과제와 전망] • 사 회: 진징이 (북경대) • 발표1: 미중-신형대국관계 평가와 전망 / 신성호 (서울대) • 발표2: 중국의 한반도정책 관련 중요문제 분석 / 차오스공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 • 발표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전망 / 한센둥 (중국정법대학) • 토 론: 중국측, 오승렬 (한국외대), 장용석 (서울대)
휴식 (10분)	
종합토론 16:40~18:00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중 협력 과제] • 사회: 김경일 (북경대), 박명규 (서울대) • 토론: 참가자 전원
만찬 18:00~20:00	

[2014年 中韩座谈会]

区分	내용
题目	韩半岛和平统一进程与中韩合作展望
主办	首尔大学 统一平和研究院, 北京大学韩半岛研究中心, 韩半岛问题论坛
日期/地点	2014年5月22日 (周四) 09:30~18:00, 北大博雅国际酒店
第1会议 9:30~12:00	[为了统一韩半岛的展望与焦点] 主持: 朴明圭 (首尔大学) 发表1: 韩半岛统一愿景与展望 (统一构想) / 朴英镐 (统一研究院) 发表2: 韩半岛 “统一必亡论” 与 “速统论” 均不可取 / 陈峰君 (北京大学) 发表3: 中韩朝三方经济合作的可能性和需要克服的障碍 / 高浩荣 (新华社世界问题研究中心) 讨论: 中方, 朴昌熙 (国防大学), 宋映勋 (首尔大学), 权栗 (对外经济政策研究院)
午餐 12:00~14:00	
第2会议 14:00~16:30	[如何形成协助的地区秩序: 课题与展望] 主持: 金景一 (北京大学) 发表1: 对美中新型大国关系的评价及其前景展望 / 辛星昊 (首尔大学 国际大学院) 发表2: 中国朝鲜半岛政策有关焦点问题的解析 / 曹世功 (中国国际问题研究基金会) 发表3: 朝鲜半岛信任进程: 认识与展望 / 韩献栋 (中国政法大学) 讨论: 中方, 吴承烈 (韩国外语大学), 张容硕 (首尔大学)
休息 (10分钟)	
综合讨论 16:40~18:00	[最近韩半岛情势与中韩协力课题] 主持: 金景一 (北京大学), 朴明圭 (首尔大学) 讨论: 所有与会者
晚餐 18:00~20:00	

[목 차]

제1회의 : 한반도 통일 비전과 쟁점 第1会议: 为了统一韩半岛的展望与焦点

• 발표 1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망 09 박영호 (통일연구원)	09
• 要約 翻译	韩半岛统一愿景与展望 27 朴英镐 (统一研究院)	27
• 发表 2	韩半岛“统一必亡论”与“速统论”均不可取 29 陈峰君 (北京大学)	29
• 비공식 번역	한반도의 “통일필망론”과 “속통론”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 38 천평진 (북경대)	38
• 发表 3	中韩朝三方经济合作的可能性和需要克服的障碍 51 高浩荣 (新华社世界问题研究中心)	51
• 비공식 번역	한중북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극복해야 할 과제 62 가오하오룽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62

제2회의 : 한반도 통일 비전과 쟁점 第2会议: 为了统一韩半岛的展望与焦点

• 발표 1	미중-신형대국관계 평가와 전망 77 신성호 (서울대)	77
• 要約 翻译	对美中新型大国关系的评价及其前景展望 88 辛星昊 (首尔大学 国际大学院)	88
• 发表 2	中国朝鲜半岛政策有关焦点问题的解析 91 曹世功 (中国国际问题研究基金会)	91
• 비공식 번역	중국의 한반도정책 관련 중요문제 분석 102 차오스공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	102
• 发表 3	朝鲜半岛信任进程: 认识与展望 117 韩献栋 (中国政法大学)	117
• 비공식 번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전망 124 한센둥 (중국정법대학)	124

제1회의: 한반도 통일 비전과 쟁점
第1会议: 为了统一韩半岛的展望与焦点

• 발표1 / 发表1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망

박영호 (통일연구원)

韩半岛统一愿景与展望 (统一构想)

朴英镐 (统一研究院)

• 발표2 / 发表2

韩半岛 “统一必亡论” 与 “速统论” 均不可取

陈峰君 (北京大学)

한반도의 “통일필망론”과 “속통론”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

천평진 (북경대)

• 발표3 / 发表3

中韩朝三方经济合作的可能性和需要克服的障碍

高浩荣 (新华社世界问题研究中心)

한중북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극복해야 할 과제

가오하오룽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망¹⁾

박영호 (통일연구원)

1. 문제 제기

2015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 반면에 독일은 통일 25주년을 맞는다. 예멘과 베트남도 각각 통일 25주년과 40주년을 맞는다. 베트남과 예멘, 그리고 독일은 분단된 지 최소 22년 최대 41년 만에 통일이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도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971년 남북 적십자 간 접촉이 시작되고, 1972년에는 당국 간 비밀접촉을 통해 통일 3원칙이 담긴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정상회담, 총리급 고위회담, 장관급회담 등 2014년 5월 현재 총 634회의 회담을 개최하였다.²⁾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채택하였다. 1988년 7.7선언으로 남북 간 교류와 교역의 물꼬를 튼 이후, 인적 물적 교류가 꾸준히 증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서해에서 남북 해군 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대북 지원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정치 군사적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92년 2월에 발효되었던 남북기본합의서에는 경제 등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 실시,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실현 등이 담겼다. 또 상대방의 체제 인정 존중, 군사정전협정의 준수, 분쟁문제의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실현 문제 협의 추진 등을 담았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남북관계의 현실은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이행 실천된 것이 없다. 남북기

1) 본 논문은 필자의 소속기관과는 무관한 개인의견임.

2) "회담통계" <<http://dialogue.unikorea.go.kr/home/talk/statistics/list>> (2014. 5. 10 검색)

본합의서 자체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한은 각각의 통일방안 아래 통일정책을 펼쳤다. 남한의 경우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제시되고 김영삼 정부에서 보완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정립되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단계로 설정한 '3단계 통일방안'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총선거에 의해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역대 남한 정부의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다. 반면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고려연방제)을 통일방안으로 유지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국가라는 모자를 씌움으로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통일국가를 성립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은 외세의존정책 포기, 미군철수, 합동군사훈련 중지, 미국의 핵우산 포기 등을 내세웠다.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이 1990년대 이후 다소의 변용을 보였으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또한 전제조건인 경우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결국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접근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교류 협력에 보다 초점을 맞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아래서 남한의 통일정책은 대북정책으로 축소되었다.³⁾ 두 정부 아래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유지되기는 하였으나 정책의 주안점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대북정책 차원을 넘어 통일정책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남북관계의 악화로 정책은 구상에 머무르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통일 정책'을 명시적으로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2014년도 국정운영의 2대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은 대박'을 언급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할 것임을 천명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을 넘어 통일정책으로의 복귀로 평가할 수 있다.⁴⁾

그러나 통일정책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외 정세나 남북관계의 현실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전략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북한체제의 불안정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 중 간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미 러 대립과 중 러 협력, 한 일 갈등, 중 일 갈등 등

동북아정세도 유동적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배경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 통일 접근에 입각한 단계적 통일추진 구도를 제시하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설정한 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2. 단계적 통일추진 구도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 필요성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통일대박'의 구현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남북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관계 발전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과 그 아래의 여러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된 이후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 각각의 국력 변화는 물론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제환경의 변화 등이 진행되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남한과 북한이 각각 타방의 실체에 대하여 이제는 유엔회원국으로서 '국가성'의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도 현실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조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첫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 실용적 요구를 반영하고, 둘째, 한국 사회의 다원화 현상을 수용하는 개방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며, 셋째,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국민 정체성'을 확립하며, 넷째,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한 간 합의들의 정신을 되살리고 상황에 맞도록 조정 실천하기 위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21세기의 한반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를 가칭 '남북공동체 통일

3) 박영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과 남북관계" 『전략연구』 제21권 제1호 (2014년 1월), p. 271.

4) 위의 논문, pp. 272~273.

방안'이라고 부른다.⁵⁾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의 비전은 자유 민주 복지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공동체 사회의 구현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통일한국은 공동체적 자유가 향유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구현되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2)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 구도

(가) 기본 방향

남북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구상인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한의 점진적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의 중 장기적 발전 및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경로를 구체화한다. 3단계 통일의 논리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각 단계로의 이행과 통일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이래 지난 20여년의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등 안보 현실, 한국의 국력 성장과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주안점을 고려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에서 3대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 만성적 경제난이 지속되며 핵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바탕으로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통일 프로세스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은 3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제1단계는 평화 협력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당국 관계의 제도화, 교류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동시에 북한의 안정적 변화여건을 조성한다. 그리고 남북 간 신뢰를 조성하면서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 평화를 구현한다. 제2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남북연합기구를 구성 가동하고 경제공동체와 사회공동체의 형성·발전시킴으로써 남북공동생활권을 구현한다. 이 단계에서 통일의 기반과 여건을 충분히 다진 후 법적 제도적 통일 과정에 진입함으로써 제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진입한다. 이러한 단계적 통일은 북한의 체제변화 및 역량 성숙을 통해 통일로 인한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5) 필자의 '남북공동체 통일방안' 제안은 한반도포럼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서울: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012)의 제5장 "통일-남북공동체 통일을 실현하자"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그 제안을 다소 수정 보완하였다.

(나) 추진 전략

□ 평화 협력 단계

평화 협력단계의 목표는 남북 간 신뢰축적을 통한 평화공존과 공영이다. 평화 협력단계의 이행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b 평화증진과 협력의 가속화(남북관계 정상화) b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3단계 과정을 통해 구현한다.

첫 단계에서의 주요 실천과제들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 간에 기 합의된 제반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행 실천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 기존 합의서들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남북관계기본합의서'(가칭)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다양화 활성화, 초보적 군사적 신뢰구축, 인도문제 해결, 북한의 개혁 개방 추진, 남북 간 평화협정 논의 등을 추진한다. 또 북핵문제의 해결 방향에 합의하고 기존 합의를 준수 이행한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장을 유보하며 적극적인 비핵화 실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과정이 성숙되면 남북 간 평화가 증진되고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 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한다. 평화체제의 포괄적 틀에 합의하고, 남북대화 및 협력이 일상화 제도화되며,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진전시키며 국제사회의 합리적 일원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는 핵폐기가 이행되고 검증이 실시된다.

이후 남북 간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 보장한다. 남북 간에는 공동시장이 형성되고,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다. 북핵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되며, 북한은 개혁 개방의 본격화를 통해 체제의 전환과정에 진입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여 각종위원회의 진행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단계에 이르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연합헌장'을 채택한다. '남북연합헌장'은 남북연합을 위한 정치기구 구성, 경제공동체 및 사회공동체 형성, 군비통제 군축 및 검증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정한다. '남북연합헌장'의 발효와 동시에 한반도는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하며,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 남북연합 단계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는 남북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다. 남북연합 단계의 이행은 연합체제 형성 ⇒ 경제·사회공동체 실현 ⇒ 제도통일(정치공동체) 준비의 단계로 구현된다.

평화 협력 단계가 남북연합 단계로 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국내환경, 남북관계, 국제환경의 다양한 차원에서 여건조성이 필수적이다. 3통(통행 통상 통신)협정 및 남북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이다. 특히 남북 차원에서는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의 전면적인 이행체제를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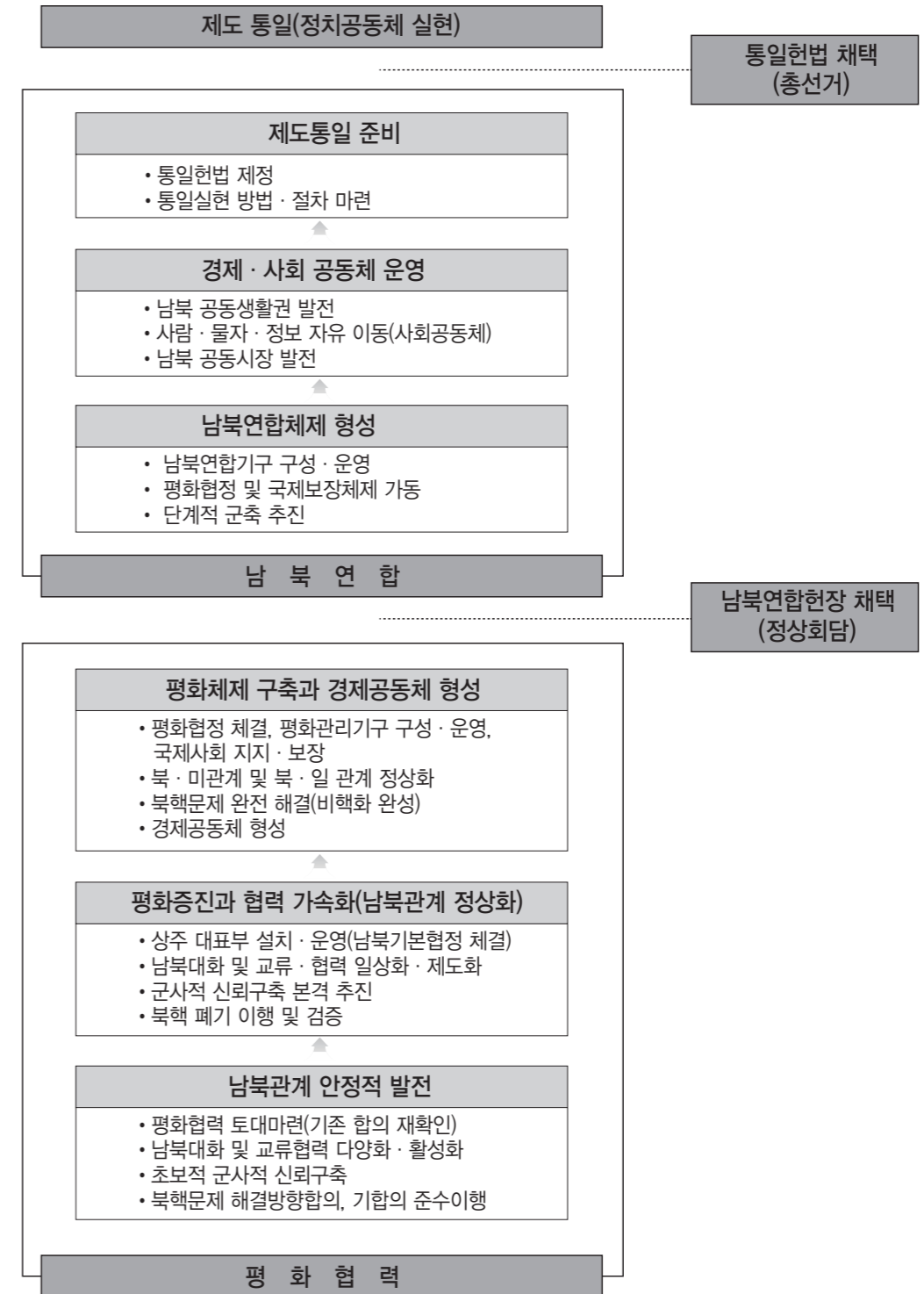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주요 실천과제로는, 남북연합기구의 구성과 운영, 남북평화협정 및 국제보장체제의 가동, 단계적 군축의 추진을 통해 남북연합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또한 남북 간 경제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하나의 생활권과 공동시장을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통일을 준비한다.

□ 통일국가 완성 단계

남북연합 단계가 성숙하면 남북 간에 법적·제도적 통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 합의로 통일헌법을 만들고, 이에 기반하여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한다. 통일헌법의 기본 이념과 가치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에 기반해야 한다. 계가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부문별 조직과 제도를 통합하여 통일국가의 체제를 정비한다. 다만,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는 국민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단계적 통일추진 구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단계적 통일추진 구도



3. 통일한국의 미래상⁶⁾

대립과 갈등의 남북관계, 대내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북한체제의 내구성, 미 중 G2시대의 부상과 역내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 등 제반 요소들을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로 다가서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민족의 입장에서 통일은 근대 민족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 일제강점과 이어진 타의에 의한 분단은 한민족의 근대 민족국가완성을 미완성의 과제로 남겨 놓았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의 지속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둘째,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소모적 비용을 생산적 비용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정착됨으로써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안보위협 요인이 해소되고 평화로운 환경 아래서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북핵 등 안보문제가 해결된 통일한국은 경제통합으로 경제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및 공동 번영의 새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만든다.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 3성, 극동러시아지역으로 연계된 동북아시아지역의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제공한다.

평화로운 통일이 달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할 때, 통일한국과 한반도 주변 4국에게는 모두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 2012년 현재 한국은 명목 GDP를 기준으로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2020년, 2030년 및 2040년의 세 경우로 상정할 경우, 통일 이후 10년 뒤 통일한국의 GDP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7~8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통일한국의 세계 GDP 예상 순위

순위	2030년	2040년	2050년
1	중국(25,652)	중국(45,019)	중국(70,605)
2	미국(22,821)	미국(29,827)	미국(38,520)
3	인도(6,748)	인도(16,715)	인도(38,227)
4	일본(5,812)	브라질(6,631)	브라질(11,366)
5	러시아(4,269)	러시아(6,316)	멕시코(9,343)
6	독일(3,764)	일본(6,040)	러시아(8,564)
7	브라질(3,720)	멕시코(5,455)	통일한국(7,166)
8	통일한국(3,655)	통일한국(5,333)	인도네시아(7,010)
9	영국(3,627)	독일(4,391)	일본(6,675)
10	프랑스(3,306)	영국(4,383)	영국(4,786)

추정근거: Goldman Sachs, BRICs and Beyond (November 2007), p. 149 자료 (단위 : US\$ bn)

경제력 이외에도 통일한국은 경제 사회적 차원의 제반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산정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표 2>에서 보듯이 꾸준히 진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⁷⁾ 통일한국의 GDP 예상 순위에 따라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추정하면, 2030년에는 10위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7~8위권, 2050년에는 6~7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가경쟁력 순위	27	32	29	31	27	23	22
*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순위	9	11	10	11	10	8	8
*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중 순위	10	14	12	13	11	9	9
* G20 국가 중 순위					8	7	7

6) 이하 논의는 「외교」 제109호 (2014.5 발간예정)에 "통일 이후의 한국"이란 제목으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다소 수정 보완하였다.

7) 1999년의 경우 세계 41위였다. 지식경제부, 「2010년 수출입 실적 및 평가」, IMD, 2010 세계경쟁력 순위 데이터.

한 나라의 지적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대학경쟁력의 순위를 보면 2010년 한국은 세계 9위를 기록하였다.⁸⁾ 한국에 앞선 나라들은 1위로 평가된 미국을 필두로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의 순이었다. 500위 내의 대학 수, 전체 인구 중 대학생 비율, 우수 대학이 대학평가에서 차지한 순위, 국가 경제력 대비 대학투자 등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의 GDP 상승과 남한의 대학 경쟁력 상승 및 북한의 종합대학 등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승에 따라서 통일한국의 대학경쟁력은 세계 5~8위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2014년 아시아대학평가에서 한국은 200위권에 든 대학수가 일본(51), 중국(47)에 이어 3위(31)를 기록하였다.⁹⁾

유엔개발계획(UNDP)이 평균수명, 국민소득, 교육 수준 등의 요소를 지표로 삼아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낸 지수인 인간개발지수(HDI)에서 한국은 <표 3>에서 보듯이 2010년에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WHO의 '세계보건통계 2014'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여성 84.6세, 남성 78세로서 여성의 경우 세계 8위를 기록하였다.¹⁰⁾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소득과 교육 수준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HDI도 상승하여 2030년이면 세계 10위권, 그리고 2050년에는 10위권 이내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표 3> 인간개발지수(HDI) 순위

연도	2000	2005	2010	2030	2050
순위	22위	20위	12위	10위권	5위권
지수	0.815	0.851	0.877	0.890	0.900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경제 기업, 과학 기술, 인프라, 정책 제도, 현대문화, 국민, 유명인, 전통문화 자연 등의 영역을 준거로 산정한 국가브랜드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에 세계 주요 50개국 중 종합 18위를 차지하였다.¹¹⁾ 종합순위 1위는 미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스위스, 호주,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국민소득 향상, 소프트파워 성장 등의 추세와 통일 후 북한 지역의 대규모 재건사업에 의한 인프라 구축,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 등에 따라 국가브랜드 지수도 2030년에는 세계

8) Quadquarelli Symonds, 'QS 세계대학평가'(2010), 『조선일보』, 2010. 9. 8.

9) 『조선일보』, 2014. 5. 12.

10) 『헤럴드경제』, 2014. 5. 15.

11) 삼성경제연구소, '2010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2010. 11. 23.

10위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7~8위권에 진입하는 등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산정한 국가선진화지수의 순위에서 한국은 2010년에 OECD국가를 포함한 세계 40개국 중에서 31위를 기록하였다.¹²⁾ 인구규모가 2,000만명이 넘는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독일 8위, 호주 10위, 프랑스 11위, 캐나다 12위, 영국 13위, 미국 17위, 스페인 20위, 일본 21위, 이탈리아 27위, 중국 39위 등으로 평가되었다. 통일한국은 GDP 등 경제적 측면의 상승, 정치 사회 경제적 국제화 및 문화개방성 등 다문화 공생사회로의 진화 등에 따라서 국가선진화지수도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에는 25위권, 2040년에는 20위권, 2050년에는 15위권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지 충족, 복지 수요, 국민 행복, 경제 활력, 재정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복지 지표에서 한국은 2011년에 OECD 국가 중에서 26위를 기록하였다.¹³⁾ 재정과 경제 활력 부문은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으나, 복지 충족(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육지원) 부문과 국민 행복(여가시간, 자살률, 평균수명, 행복도) 부문은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인구 규모가 2,000만명이 넘는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호주 9위, 프랑스 10위, 영국 11위, 캐나다 13위, 독일 15위, 스페인 17위, 일본 23위, 미국 24위, 이탈리아 25위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 수준은 통일 이전부터 특히 복지 충족 부문과 국민 행복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통일한국에서는 복지비용의 비율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대와 정부의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서 복지 수준은 꾸준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통일한국의 복지 수준은 20위권 후반에서 20위권 전반으로, 그리고 점차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4>는 2020년, 2030년, 2040년에 각각 통일이 달성된 경우, 그로부터 10년 후 통일 한국의 경제사회 미래상의 일부를 몇 개의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그동안 한국이 달성해온 경제사회 발전과정을 지속하고, 통일한국의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아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현재 한국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이념, 계층, 소득, 세대, 지역별 갈등 전선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성숙한 민주주의와 발전된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선진국으로서의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장밋빛 미래로만 남겨지게 될 것이다.

12) 한반도선진화재단, '2010 국가선진화지수 연구결과', 2010. 9. 17.

13) 『복지백년대』, 『조선일보』, 2011. 3. 5.

〈표 4〉 통일한국의 미래상: 경제사회지표 순위

구분	2030년	2040년	2050년
명목 GDP	8위	8위	7위
IMD 세계경쟁력	10위권 진입	7~8위권	6~7위권
대학경쟁력	5~8위권 진입	5~8위권	5~8위권
인간개발지수(HDI)	10위권 진입	10위권	10위권 이내
복지지수	20위권	15위권	10위권
국가브랜드지수	10위권 진입	7~8위권	6~7위권
국가선진화지수	25위권	20위권	15위권

4. 통일한국의 비전

한국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통일 역량의 준비와 단계적 통일구도에 의한 통일과정으로의 진입, 그리고 국내외적 환경 조건의 성숙 등 제반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지는 평화 통일이 2020년대 이후의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을 상정해보자. 통일한국은 2030년에 인구 약 7천5백만 명, 영토 면적 약 22만km² 정도로 오늘날의 영국(인구 약 6,300만 명, 면적 24만km²), 독일(인구 약 8,100만 명, 면적 36만km²), 이탈리아(인구 약 6,100만 명, 면적 30만km²)와 상응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된다. 통일한국의 GDP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30년 이후에는 이들 국가를 상회하거나 대등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통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4국의 국가이익과 상충하지 않도록 통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주변 4국은 각각의 입장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기대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비핵화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원하며 한미동맹의 유지를 바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통일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바탕을 두며, 한 미동맹의 유지를 기대한다.¹⁴⁾ 중국은 통일한국이 민주주의를 고수하고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정치 안보적 연대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자

국의 ‘신형대국관계’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에 따라 미국에만 편중되지 않고 중국과 안보 관계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¹⁵⁾ 한미동맹관계의 지속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통일한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지만 민족주의에 경도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경계하며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¹⁶⁾ 러시아의 경우는 통일한국이 동북아의 안정, 공영과 발전,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중립세력으로 행동할 것을 바라고 있다.¹⁷⁾ 이처럼 한반도 주변 4국이 통일한국의 등장에 대한 기대는 내용이나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달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한국이 국제사회, 특히 주변 4국의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떠한 국가가 될 것인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통일은 통일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도약의 기회를 찾으려는데 있지 않다. 또 그래서 안 된다. 분단 극복의 차원을 넘어 한반도에 공고하고도 안정된 평화를 이루고 통일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 발전과 번영, 모든 영역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동시에 한반도차원을 넘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 통일한국의 등장은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와 같은 지향점을 통일한국의 비전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비전은 국내적 차원에서는 선진일류국가의 실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연결점에 있는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의 가교국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선진일류국가의 구현을 지향하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연결하는 아시아의 허브국가(Asian Hub: Bridging World's Peace and Prosperity)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한국의 비전은 정치, 안보와 경제, 자연과 생태, 사회와 문화의 네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은 정치적 측면에서 선진민주국가를 지향한다. 통일한국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선진일류국가를 목표로 한다. 통일국가의 공간은 공동체적 자유가 향유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구현되며 남북한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의 달성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번영이 바탕이 되는 경제선진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민주국가는 ‘풍요로운 국가’이다.

15) 위의 책, p. 53.
16) 위의 책, pp. 72~73.
17) 위의 책, pp. 89~90.

14) 박영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34~35.

둘째, 통일한국은 평화와 번영의 모델국가로서 비핵 평화 개방국가를 지향한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이다. 이에 토대를 두어 통일한국은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는 모델 국가로의 부상을 지향한다. 통일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군사위협을 해소를 가져올 것이다. 즉 통일한국은 비핵 평화국가로서 세계적 비확산의 모델이 될 것이며, 군사적 위협의 해소 및 균축으로 국제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등장할 것이다. 동시에 동아시아지역의 견고한 평화를 위한 평화촉진자 및 평화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 및 발전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향한다. 나아가 국제 평화질서 조성을 위한 적극적 참여국가로서 국가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지역의 경제통합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한반도는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으로서 인구 6억 5천만 명 이상, GDP 7 10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교통망(TKR)과 대륙교통망(TCR, TMR, TSR)의 연결 및 태평양 항로의 연계로 동북아시아 물류가 발전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에너지와 자원의 개발 등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모두 이익이 되며 상생하는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비핵 평화 개방의 통일한국은 '평화로운 국가'이다.

셋째, 통일한국은 자연과 생태 친화적인 국가를 지향한다. 자연과 생태 친화적인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자 인류의 미래성장 동력의 원천이다. 통일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균형발전과 친환경의 산업 육성을 추진함으로써 미래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향한다. 자연과 생태 친화적인 통일한국은 '자연과 어우러진 국가'이다.

넷째, 통일한국은 창조적 문화국가를 지향한다. 오랜 기간의 분단을 극복한 통일한국은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활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은 국민적 긍지와 자존심 고양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통합된 사회 문화적 동태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통일국가로서의 새로운 국민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고 개방적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통일이전 한류(韓流) 문화의 소프트파워가 그 개방성과 창조성, 세계 지향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영 받았듯이 통일한국은 이러한 개방성, 창조성, 세계 지향성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창조적 문화국가는 바로 '멋있는 국가'이다.

요컨대, 통일한국은 비전은 구체적으로 선진민주국가(풍요로운 한국), 비핵 평화 개방 국가(평화로운 한국), 생태 친화적 발전국가(자연과 어우러진 한국), 창조적 문화국가(멋있는 한국)의 달성을 지향한다.

5. 통일 가능한 시기

현실적으로 통일 가능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독일의 경우가 이를 증명한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1950 60년대에 서독 국민들은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았다.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10%대로 떨어졌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5% 이내로 줄어들었다. 또 1980년대에는 '통일이 당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한 서독 국민은 0.5% 미만에 불과하였다. 서독 국민 거의 모두가 통일을 당장에 필요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독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으나,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나 당면한 과제로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1987년에 단지 3%의 서독 국민이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1988년에는 거의 모든 서독 국민들이 통일을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았으나,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서독의 기본법 체제에 동독이 편입됨으로써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표 5〉 통일 이전 서독 국민의 통일 인식

	중요한 문제 ①	통일 희망 ②③	통일 실현 가능성 ②③
1952	23%	-	51%
1954	38%	88%	56%
1961	35%	91% (1960)	48%
1965	45%	-	58%
1969	22%	-	13% (1968)
1970	12%	-	18%
1972	1%	78%	12%
1981	1%	79% (1980)	13%
1983	0.5%미만	81% (1984)	5%
1988	0.5%미만	80% (1987)	3% (1987)

출처: ①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Handwoe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91), p. 277.

② Seike Jansen, Zwei Deutsche Staaten—zwei deutsche Nationen? In: Deutschland—Archiv, 1989년 10월호, p. 1139. ③ Institut fuer Demoskopie, DIVO—Institut, Ifas, Infrayest 여론조사

결과 종합: 국가정보원, 「통계에 나타난 독일통일 20년」(2009. 5), pp. 488—491 표에서 재정리.

동서독관계와 남북한관계는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동독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서독의 라디오와 TV 방송을 자유롭게 청취하고 시청할 수 있었다. 동서독 관계 발전에 따라서 1986년 5월에는 문화협정이 체결되었고, 1987년 5월에는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매 교환, 정보자료 교환, 공동 제작 등을 추진하였다. 또 동독의 연금수혜자(남: 65세, 여: 60세 이상)의 서독 방문은 1965년도에 이미 120만 명이 넘었으며, 1987년에는 220만 명 이상이었다.¹⁸⁾ 북한의 3대 권력세습체제와 동독의 공산체제의 지배강도와 체제 내구성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독일의 경험을 준거로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어느 날 갑자기’ 식으로 쉽게 말할 수는 없다.

한국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통일의 가능 시기를 가깝게 예상하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한국 국민들이 통일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전망한 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50%에 가깝게 나타났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10%대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은 2010년대에 들어서 50%에 도달할 정도로 증대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분단의 장기화와 남북 관계의 교착에 따른 결과로 보이지만, 통일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표 6> 한국 국민의 통일 가능 시기 예측

년도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년 이상	불가능
1993	7.8%	37.3%	-	30.8%①	9.2%	13.3%
1995	9.5%	40.9%	26.9%	7.1%	15.5%	-
1998	4.7%	28.3%	27.1%	7.2%	10.6%	22.1%②
1999	3.0%	27.0%	28.3%	7.4%	11.3%	22.9%②
2002	0.0%	13.0%	44.9%④	40.6%⑤	-	1.4%
2007	3.7%	23.5%	30.8%	14.7%	13.8%	13.3%
2008	2.3%	13.0%	22.1%	15.5%	24.9%	22.3%
2009	2.8%	16.9%	27.6%	16.2%	16.5%	19.8%
2010	3.4%	17.8%	24.1%	13.4%	20.8%	20.6%
2011⑥		10.7%	16.4%	12.35	11.3%	49.4%
2011⑦		11.0%	21.3%	12.0%	18.1%	37.5%




출처: 통일연구원(1993~200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2007~2010), (주)코리아테이타네트워크(1차조사: 2011.4.4~5.4, 2차조사: 2011.7.25~8.2) 통일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주: ①1993년에는 20~30년이 응답항목. ② '모르겠다' 응답자. ③ 2002년은 전문가 조사 결과. ④ 10~15년(21.7%), 15~20년(23.2%)로 나누어짐. ⑤ '20년 이후'가 응답항목. ⑥ 2011. 4.4~5.4 조사 결과. ⑦ 2011.7.25~8.2 조사 결과.

18) 서병철, 『통일을 위한 동 서독 관계의 조명』(서울: 지식산업사, 1988), p. 171 '동 서독 관계에 관한 주요 통계 자료 중 3) 동독 연금수혜자의 서독 방문'.

통일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인식은 전문가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일의 유형을 합의형 통일과 흡수형 통일로 구분하여, 통일의 시점을 12시로 설정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합의형 통일시계의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¹⁹⁾ 12시를 통일시점으로 보았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일의 시간이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4 : 19	3 : 45 -0 : 34	3 : 31 -0 : 14

그러나 통일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체거의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나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신중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현실의 제반 요인들에 준거한 합리적 판단은 한반도 통일 가능의 시기는 여전히 멀리 있다는 결론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19) 박영호 김형기, 『2011년 통일예측시계』(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39.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계적인 통일추진 구도를 제시하였다. 또 그러한 통일구도가 실현될 경우의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예상해보았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가 함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의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한국의 비전은 통일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노력에 의한 북한의 호응이 유발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통일을 준비해나가기 위한 능력을 구비해나가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불충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대하여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하여 한반도 주변 4국이 우선 공감하고 자국의 국가이익과 통일한국의 비전이 호혜적 관계에 있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정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지와 협력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 주변 4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통일한국의 등장이 동북아지역의 안보전략 환경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자국의 국가이익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면, 통일의 외적 환경을 유리하도록 조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일시대를 말하고 통일한국을 논의하는 것은 공허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 통일의 방식을 통한 통일한국의 등장을 현실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일은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결코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은 국가 목표이자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의 질서를 가져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핵문제 등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안보위협 요소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오며, 역내 국가 간 경제, 사회, 정치적 협력을 넘어 안보 협력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반도 통일은 역내 국가들의 국가이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가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韩半岛统一愿景与展望 (统一构想)

朴英镐 (统一研究院)

韩国之所以希望实现统一，是为了在韩半岛形成和平稳定的环境，使统一国家中的所有成员都能够实现持续的发展和进步，在所有的领域中，能够过上尊严的生活。同时也希望能够通过韩半岛的统一，为东北亚地区，乃至全世界的和平和共同繁荣作出贡献。

可以通过三个阶段来推进韩半岛的统一。第一阶段是和平与合作阶段。在这一阶段，完善两国政府关系的制度化，并促进两国交流与合作，以此来发展南北关系，促进朝鲜社会形成稳定的变化条件。通过加深两国之间的信任，推进和平体制的构建，实现积极的和平。第二阶段是南北联合阶段。在南北和平体制的基础上，构建和启动南北联合机构，通过形成和发展南北经济共同体和社会共同体，实现南北共同生活圈。在这个阶段充分奠定统一的基础后，进入在法律上、制度上实现统一的阶段，进而走向第三个阶段，即统一国家完成阶段。这种阶段式统一方式可以通过转变朝鲜的体制，增强朝鲜的实力，将统一带来的混乱和成本降到最低，同时也有利于拓宽统一国家未来发展的动力基础。

统一韩国将致力于为韩半岛、东北亚以及全世界作出积极的贡献。可以将这种目标设为统一韩国的愿景。统一韩国的愿景，从国内的角度来说，是成为先进的一流国家，从国际角度来说，因为韩半岛位于大陆与海洋的交接处，所以统一韩国的愿景可以设定为，作为大陆与海洋的连接纽带，成为世界和平与繁荣的桥梁国家。可以认为统一韩国的愿景是成为先进的一流国家，并成为连接世界和平与繁荣的亚洲中心 (Asian Hub: Bridging World's Peace and Prosperity)。

统一韩国的愿景设计可以具体体现在政治、安保与经济、自然与生态、社会与文化等四个方面。第一，在政治方面，统一韩国的努力方向是成为先进的民主国家。统一韩国将实现成熟的民主主义，希望在此基础上，成为先进的一流国家。在统一国家中，成员将享有共同体的自由，人的尊严将得到最大限度的尊重，并致力于

成为提升南北两地居民生活质量的福利国家。为了实现这一点，首先要成为经济发达国家，以此来确保持续的繁荣。

第二、统一韩国作为坚持和平与繁荣的典型（model）国家，将致力于成为无核、和平、开放的国家。二战后独立的国家中，韩国同时实现了经济发展和民主化。在此基础上，统一韩国希望发展成实现和平与繁荣的典型国家。统一韩国将会实现韩半岛无核化，消除军事威胁。同时，作为坚持无核与和平的国家，统一韩国将在全球范围内成为不扩张的典型，通过消除军事威胁和缩减军事力量，成为主导国际和平的国家。此外，统一韩国会起到维护东亚地区和平稳定和促进东亚地区共同繁荣发展的作用。还会通过积极参与建设国际和平秩序，提高国家形象，为世界和平作出贡献。

韩半岛的统一将会带来南北地区经济统筹的效果，同时为东北亚地区的共同繁荣，创造新的机会。作为环黄海经济圈和环东海经济圈的中心，韩半岛可以完成拉动六亿五千万人口和大概达7~10兆美元GDP的东北亚市场中心轴的作用。韩半岛交通网（TKR）和大陆交通网（TCR, TMR, TSR）以及太平洋航线将会得到连接，这将有效促进东北亚物流的发展。同时，通过这一地区的能源和资源的开发，形成韩半岛和东北亚地区可以共同获利和共同繁荣的机会。

第三、统一韩国会致力于成为保护环境和生态国家。保护环境和保护生态的发展模式既是可持续的发展方式，也是人类未来发展的动力源泉。统一后的韩半岛将在整个半岛推进保护环境的均衡发展，促进相关产业的发展，为未来的发展提供模式。

第四、统一韩国将致力于成为具有创新性的文化国家。克服长期的分断后，统一韩国将会获得建设崭新国家的活力。同时，统一会成为国民们自豪感和自尊心的源泉，起到促进整体的社会、文化活力的作用。作为统一国家，统一韩国将会形成崭新的国民身份，扩大开放的国际交流。正如统一之前，韩流文化这一软实力以其开放性和创新性、面向世界的特点，受到了全世界的欢迎，统一韩国将会进一步发展这种开放性、创新性和面向世界的特点。

关于统一的时间，在针对韩国国民的调查中，1990年代中期以前，50%的人认为5年或10年以内能实现统一，2000年代后半期这一比例下降到10%，相反，认为无法实现统一的比例在进入2010年以来上升至50%。这一认识是长期的分断局面和南北双方的僵局导致的，但可以明确的是，民众普遍认为统一的可能性较低。在针对专家的调查中，专家们也认为统一的可能性较低。但是，韩半岛的统一，也有可能像德国那样，在完全没有预想到的情况下实现。朝鲜体制的持久性、韩国为实现统一作出的努力、韩半岛的和平稳定、以及国家间对东北亚的和平与共同繁荣达成共识，等等这样的条件如果得到满足的话，也许韩半岛的统一也有可能提前实现。

韩半岛“统一必亡论”与“速统论”均不可取

陈峰君 (北京大学)

最近一个时期，有关“半岛统一”问题已成为韩国各界最火热话题。在统一问题上，存在着两种截然相反的思潮或倾向。一种是反对统一或永远保持分裂态势的所谓“统一必亡论”或“永分论”，还有一种是急于求成，期望以快刀斩乱麻即速战速决方式实现统一的所谓“速统论”或“速战论”。作为中国学者认为这两种思潮与倾向均不符合半岛实际，均不可为。

1、“统一必亡论”PK“统一必兴论”

“统一必亡”的说法，是出自一部叫做《南北韩，统一必亡》的书，作者是一位韩国（德籍）研究的学者朴成祚用德语撰写，于2006年译成中文在台湾出版。¹⁾该书中心思想与结论故名思意：即韩国和朝鲜不能统一，统一的话，肯定就要灭亡。理由是两国之间的差异实在太太大，其中包括经济差距、政治体制差距、思维差距，远胜于东西德之间。此书观点极其类似中国“台独”言论。原以为韩朝双方却无人倡导“韩独”与“朝独”，唯独中国有所谓“台独”势力，然而此书却让外界知晓原来韩朝内部也有“独立”思潮，而且这种思潮，仍大有漫延之势。据2013年末新世界党汝矣岛研究院青年政策研究中心的问卷调查中，调查对象大学生的47.3%回答说“没有必要统

1) 韩国（德籍）朴成祚：《南北韩，统一必亡》台湾出版2006年。

一”。回答“需要统一”的大学生数只是多了一点,为52.4%。²⁾这里“没有必要统一”的说法,虽然不完全等同于“统一必亡论”,但二者的依据大体是一致的。前者是“必亡论”的群众基础,后者是前者集中体现与理论上的概括。

南北韩分裂已持续了近70年,多数国民出生在分裂以后,出现接受分裂的倾向,无疑有其一定必然性与合理性。这种思潮如不制止,必有发展之势。如果再持续几十年,这一倾向必将扩大有能成为主流趋势,这对大韩民族来说无疑是一大可怕的悲剧。

有幸的是,朴惠政府预感到了这种前景,把“统一”问题做为持政的第一要务与核心国政目标,提出了“为朝鲜半岛统一时代构件基础”、“统一是成功”等理念,总统朴槿惠还亲自担任统一准备委员会委员长,其意深远。朴槿惠的“统一兴国论”“统一成功论”是对“统一必亡论”的彻底否决,值得大书特书,可圈可点。

韩半岛人民统一的愿望是南北政府双方共识。本世纪南北两次高峰会议文,已明文把实现民族统一大业放在最优先地位。直到目前南北双方尽管军事上极为对立,但南方与北方官方与民间均一直坚持统一民族大业。这是南北双方国家的核心利益与至高无尚的民族利益,其它任何言行均应以此为最高准绳,这是历史赋予南北韩的历史使命与全体半岛人民最大心愿。这如同历史上美国南北的统一、现今中国两岸统一一样,是不可逆转历史潮流,逆流而行将成为历史的罪人。分裂思潮可以有上百条理由,但再多理由均无法超越南北民族共同的最大心愿与民族感情,在统一大业面前均显得苍白无力。统一大业是半岛第一要事,重中之重,是一切事情的大前提,有了这个大前提,其它均可克服。朴成祚先生在其奇文《南北韩,统一必亡》中的几条理由,看似有理,其实均可克服与超越。中国大陆与台湾30/40年前在经济水平、政治体制、思维方式几方面并不比现今韩朝之间小多少,然而现今两岸差距越益缩小,统一只是时间问题。差距不应是统一的统一不可逾越的障碍。

从经济层面分析,半岛北南均具有经济巨大潜力,韩国已发展到可观程度,倘若南北的经济力量合而为一,其势不可低估。据韩国统一和平研究院最近预测,南北韩开始融合后,南北韩人均GDP到2020年将达到2.2883亿美元(南北平均值),2030年达到3.5718亿美元,2040年达到5.5767亿美元,2050年达到8.3808亿美元。年增长率也有望达到4.47%,高于同样规模的发达国家。研究院方面针对二十国集团(G20)和被跨国会计公司普华永道(PWC)指为新一代领跑国的西班牙、波兰、尼日利亚、越南等23个

2) 《周密准备才能实现统一》,《東亞日報》donga.com[Chinese donga]JANUARY 07, 2014 chinese.donga.com/gb/srv/service.php3?biid.

国家,推算了经济力、人口潜力、技术力、总体国力排名,结果显示,如果南北韩实现融合,GDP总和到2030年将达到全球第11位,到2050年将排在中国、美国、印度、巴西、日本、俄罗斯、墨西哥之后列第8位。高丽大学亚洲问题研究所预测,统一韩国到2050年将超越日本、英国、俄罗斯,继中国、印度、美国、印度尼西亚、巴西、墨西哥之后成为全球第七大经济体。尤其是人均GDP将在主要23个国家中紧随美国列第二位。³⁾韩国现代经济研究院统一经济中心负责人洪淳植(音)预测,韩半岛统一后,到2050年,经济规模将排名全球第8位,人均国民收入将达到8.6万美元,超过日本。⁴⁾正如朴槿惠所言:“统一将成为韩国经济再次飞跃、获得新增长活力的机会”⁵⁾。韩有人担心统一的费用过大,但正如《东亚日报》所言:分裂费用比统一费用要更多更多。“我们该选择什么样的道路是很明确的问题。国民和政府要拥有统一以后的幸福和利益大于分裂导致的痛苦和费用的认识,这样才能接近统一”。⁶⁾“要拥有统一以后的幸福和利益大于分裂导致的痛苦和费用的认识,这样才能接近统一”。⁷⁾我们有理由相信:经过若干年之后半岛北方也必将会迎来一个类似南部上个世纪60-80年代的大发展“奇迹”。到那时,半岛将会以更加强盛而耀眼于东方。世界都在变,朝鲜同样会变,也许会比你想象地快。不要以固有眼光看待正在变化中的北方兄弟。

从国际政治层面分析。统一后半岛将一改过去被大国利用、争夺、角逐的对象,而会在未来发挥着极不寻常的积极作用。新加坡学者认为:长远来说“东北亚安全和政治格局将出现重组,韩朝加强合作,成为东北亚的重要一员”。在处理与周边大国关系时,为其自身安全和国家利益,与各大国只能采取等距离和和平中立外交政策。这不仅可以维护自身安全,而且可以在各大国中发挥其它大国所起不到的积极作用,甚至可能成为大国均有求于它的“特殊角色”作用。如金大中所言,统一后的半岛如同一个美丽姑娘被四个小伙追逐的场景。朝鲜南北方如能实现统一,完全有可能成为亚太六极结构中的重要一极(美、俄、中、日、韩、东盟),或东亚四极结构中的名符其实的一极(中、日、韩、东盟)。⁸⁾

总之,统一是韩民族头等大事,“统一就是走大运”“统一巨给力”⁹⁾。“统一必亡论”“长期分裂论”是韩民族的悲哀,绝不可为。

3) 《前瞻统一韩国2030年将超英法 新年特辑“统一和未来”》《朝鲜日报》2014.01.02

4) 《亚洲经济》2014年3月14日 www.80sd.org/...chaoxian/2014/03/12/37774.html - 2014-3-12

5) 中新网 www.chinanews.com/gj/... 2014-01-14

6) 《東亞日報》donga.com[Chinese donga]JANUARY 07, 2014

7) 《周密准备才能实现统一》,《東亞日報》donga.com[Chinese donga]JANUARY 07, 2014 chinese.donga.com/gb/srv/service.php3?biid.

8) 金大中:《21世纪的亚洲及其和平》北京大学出版社,1994年第195-196页

9) 《朝鲜日报网》(2014.01.06)

2、“速统论”Pk“和平自主论”

韩国媒体有关统一言论中，似乎没有明确统一采取何种方式，虽然也偶而提及“和平自主”四个字，但实际上更多强调的是北方政权的动荡性，要效仿所谓“德国统一模式”。说白了即：通过韩国单方面(主导)大举北进，收复即将崩溃的北方政权，以快速方式一举拿下北方，一统天下。《东亚日报》甚而引用韩国总统的话说：“统一很有可能像德国一样，因为朝鲜政权的突然崩溃而实现，而不是通过南北的协议”。¹⁰⁾故本文称之为“速统论”。

这种“速统论”实际上已成为韩国社会主流的与指导的思维。而“速统论”的基础则又是建立在“朝鲜崩溃论”基础之上。《朝鲜日报》在今年新年特辑《统一和未来》国内外专家看统一》以醒目小标题《统一近在咫尺韩是否准备就绪?》《统一会突然发生》《现在是准备统一的最佳时期》等加详细报道。不看内容，只从标题就可“一目了然”。特辑中尤为引人注目的是引用了几位政府高官的言论，如，

前青瓦台外交安全首席秘书官千英宇说：“统一随时会到来。国民要明白统一越快越好，对所有人来说都是福，同时纠正不能统一的错误想法”。韩半岛进化基金会理事长朴世逸说：“北韩体制很有可能会走向内部崩溃。如果现在不做好准备，北韩可能会成为中国的属国，而韩国会成为中国的边防国家”。前青瓦台国家安全助理罗钟一表示：“现在就要做好准备，让美日中俄等周边国家就韩半岛统一达成协议并提供帮助”。¹¹⁾

客观地说，朝鲜半岛统一采取德国模式、越南模式还是中国两岸模式等，取决于多种内外因素，不排斥采取“德国吸收”模式的可能胜，也不排斥朝鲜政权的突变的可能胜。可以有预案，但不能把主要工作与精力全放在这种虚设上面。如果种种条件具备，采取德国吸收模式，以“速决”方式，未尝不是一个选项。但就历史与现实观察，这种可能性可以说是微乎其微，不能把全部希望寄托于此，更不能把它做为完成统一大业的政策基点。对于德国式的吸收统一的模式，金大中先生早在《德国统一的教训和我们统一的方向》一书中认为，南北的统一一定要回避德国的吸收统一方式。¹²⁾20多年的实践，已为金大中先生所言中。德国吸收模式的要害在于“朝鲜崩溃

论”。严酷的现实是，北方拥有庞大的军事力量，并已拥有初级的核武，其政权只少目前并无分裂与崩塌重大迹象。北方金正恩施政三年，出现一定不稳状态是事实，但断定即刻“崩溃”，根据并不充分，甚至是“虚设命题”，一种一厢情愿的“幻影”，按中国网民话说，叫“不靠谱”。“崩溃论”几乎被韩国人“期盼”了差不多三四十年来，一波接一波，每次都有鼻有眼、神乎其神，可结果却成笑柄。

笔者以为，建立在“朝鲜崩溃论”基础上的德式统一，绝非是如韩方想象中的“和平主导”，而只能是“武力统一”。“速统论”或“速战论”实质是“武统”论另一种说法。

“武统”是对五十年代朝鲜战争沉痛教训的历史忘却，也是对南北两次峰会有关“自主和平统一”协议的背弃。2000年6月 南北高峰会议《北南联合宣言》明确宣布将国家的统一问题要由其主人我们民族自己联合起来自主地加以解决；按照北方低层次联邦制和南方的联合制两种方案共同协商；通过各个领域积极发展合作与交流信任。2007年10月两国领导人在平壤正式签署并发表《北南关系发展及和平繁荣宣言》，主要是和解与统一问题、建立军事信任与和平机制以及加强经济、社会、文化合作与交流等内容。由此可见，两个协议共同核心内容是“自主和平统一”。

“武统”其害多多。

其一，“武统”达不到真正民族统一目的，反会加剧南此更深的对立，甚而长期内战。退一万步说，即使接如韩方所希望的朝现金氏政权迅速崩塌，新上台的反现政权势力，难保就能屈从韩方，随意听其摆布而成为其傀儡。如果象现今中东一些国家那样结局，岂不变得更糟。不能把金氏现政权简单等同于北方朝鲜政权。其实，更大可能是：无论是北方现政权还是改组变更后的政权，均会对南方进行对抗与反击。它不可能轻而易举被你韩国“主导”，一举吃掉。实际上，这倒恰好成为北方强化对抗南方的凝聚力与摧化剂，甚至可能真的就导致或“刺激”北方挺而走险，走历史老路，主动南下“武统”，一旦假戏变成真的了，则一发不可收拾。甚至动用核武，其结果则更不堪设想。韩国一切成就将毁于一旦。即使美国先下手将北方核武摧毁，朝武装力量也绝不会坐以待毙。据传，朝鲜在第二、三次核试验后，就认为已经具备通过战争实现统一的军事基础，明言要“武力统一”。有韩媒报道称，金正恩今年年初在主持召开北韩军官会议时指示说：“2015年韩半岛可能发生武力冲突。要为统一战

10) 《周密准备才能实现统一》，《东亚日报》donga.com[Chinese donga] JANUARY 07, 2014 chinese.donga.com/gb/srv/service.php3?biid.

11) 《周密准备才能实现统一》，《东亚日报》donga.com[Chinese donga] JANUARY 07, 2014 chinese.donga.com/gb/srv/service.php3?biid.

12) 金大中：《我的思想我的路》韩路社出版 1994年。

争最大限度地储备战略物资，做好一切准备以便随时投入战争”。¹³⁾另据朝中社报道，朝鲜祖国和平统一委员会(祖平统)4月23日发出公开质疑书，要求朴槿惠对“要真心改善朝韩关系还是继续对抗、是统一还是反统一、是和平还是战争这一严肃提问做出负责任的答复”。十问中第一问便是：“朴槿惠所说的‘统一’是什么样的统一？若是基于吞掉并被吞掉的体制对抗，那么只有战争一个。¹⁴⁾难道朴槿惠所望的就是战争吗？”这些问题尽管遭韩方立即绝回拒，但朝方的问题切中要害，不能一笑拒之。

其二，“武统”必将遭来“外患”大祸，“自主”统一将成泡熔。不管谁“武统谁”，其结果均不能独善其身。如果“韩统朝”，必将要借助美国力量，无美国这个大靠山联合吃掉北方，单凭韩方自身实力有限。倘若“朝统朝”，美国同样不会袖手旁观，必将对韩鼎力相助，北方又岂能善罢甘休，中俄等大国又岂能签应？韩半岛岂不陷入又一场新的冷战？难道韩国政治家们对“独统”或“武统”的恶果，真的就能天真到连这种地步都没想到？

其三，“武统”之举，乃符合美国战略东移的需要，是其利用半岛实现“亚太再平衡战略”的一大图谋。美国在半岛的所为，与现今在东海南海所为如出一辙，都是其重返亚太战略的重要组成部分。**美韩多次大规模的联合军演，正是这种图谋的表现，可以说是“武统的前奏”与“预演”，也是如一些媒体所分析的是“项公比武”，意在“向中国挑战”，背后潜藏着玄机与祸心。值得提醒的是，韩国对此应有清醒认识才足，切勿感情用事，为了“统一”不计后果，充当人家反华的马前卒，岂不害自又害邻？**

总之，“武统”万不可取！“和平自主统一”才是正道。

韩半岛当务之急当然是和平与稳定，其中最核心问题无疑是弃核问题，“统一”远没有提到日事议程上来，过多过早谈统一问题，时机与条件尚不够成熟。“统一”需要先奠定半岛和平与稳定。这是中韩各界舆论所共识。实际上，稳定与统一是相辅互动关系，有稳定才能更好统一，稳定是统一的基础，也是统一的第一步骤。当然统一也会极大地保持稳定。但唯有和平自主地实现南北统一，才能根除南北战争与动乱的根源。

还应强调：半岛统一是一个由量变到质变的渐进过程，不能期望一个早晨的“突变”。德国统一一般认为是“突变”，但它的突变有其国际环境大背景，也有东西德内在诸多因素，与韩朝情况不能简单类比。更何况东西德统一也是一个渐进量变的

过程。对此，朴槿惠总统深有了解。她说：我们一直误以为只有维利·勃兰特的东方政策带来了德国统一。勃兰特的东方政策虽然在统一过程中是一个分水岭，但就统一的整体蓝图来看，统一是从1949年西德政府成立后到1989年柏林墙崩溃的漫长旅程。¹⁵⁾这一“漫长旅程”的统一观点与朴总统倡导的对北信任进程是一脉相通的。朴槿惠在今年3月28日在德国东部城市德累斯顿发表演讲时，向朝鲜提出三大倡议，即优先处理南北关系中的人道主义事务、为韩朝共同繁荣建设基础设施、恢复南北民众之间的认同感，以期作为朝韩构建互信的第一步，为统一奠定基础。¹⁶⁾笔者对此颇为欣赏。

朴总统的这些思想恰是对“速统论”的否定。但愿韩方能以朴总统的这一思想为指针，放弃“速统论”与“武统论”思维，真正回到南北领导人已达成的和平自主统一协议的轨道上。协议中有关韩半岛统一原则、步聚、方案等，白纸黑字均写得明明白白，不可另起炉灶。

总之，统一必行，但不能强行，更不能“武行”、“速行”，欲速则不达，水到才能渠成，“只能通过周密的准备和持续的努力来实现统一”¹⁷⁾。

3、中国乐见半岛和平自主统一

笔者在其拙著《亚太大国与朝鲜半岛》一书（北京大学出版社，2002年）及有关韩半岛的一系列文章中均详细阐明过乐见半岛统一的观点，这里再重申与补充一些想法。

中国领导人早在九十年代就宣布“真诚希望南北双方通过接触和对话，逐步增加信任，改善关系，最终实现民族和解和国家的自立和平统一”。2013年6月，中国国家主席习近平同韩国总统朴槿惠举行会谈。习近平强调，“支持南北改善关系，实现和解合作，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中国的立场核心概括起来，是“和平、自主”四个字。中国之所以采取支持这一立场，其根本缘由是中国的国家战略利益，也是基于韩半岛南双方的共同利益。外界某些媒体所谓的中国“不支持朝鲜半岛统一”的说

13) 《朝鲜日报》2014年03月26日

14) 中国新闻网 2014年04月23日

15) 《要想让统一成为“大事”》《中央日报》2014年1月17日

16) 《韩国总统提出统一三大倡议》《东方早报》2014年03月30日

17) 《周密准备才能实现统一》，《东亚日报》donga.com[Chinese donga]JANUARY 07, 2014 06:15 chinese.donga.com/gb/srv/service.php3?biid.

法，纯属是无稽之谈。中国学术领域虽然有不同看法，但从中国官方到包括学术领域在内的主流舆论，坚定支持统一的立场则不容置疑。中国反对的只是武力统一与外部力量的干预，因为它不符合中国与整个东北亚利益，也不符合朝鲜半岛南北双方的根本利益。¹⁸⁾

说中国不支持半岛统一的关键因素是担心统一后的半岛比过去强大，将构成对中国的威胁。笔者认为，这纯属西方旧的地缘政治和国际战略思维方式。出于这种思维逻辑：一国的强大要靠周边国家的分裂与动荡来维持。实际上，美日等国就是按这一逻辑行事的，对中国台海、对半岛政策恰是这一思维的产物。然而，中国不是美日，绝不能把美国对华持分裂立场与中国对朝政策相提并论。半岛统一与两岸统一有相同命运，中国不会采取对己一套对外又一套的双重标准，决不会效仿美国对中国统一的两面政策。中国如仿效美国，等于往自己脸上抹黑，会伤失东方大国的形象。中国不会干出这等傻事、蠢事。中国的安全是靠自身的强大与善邻睦邻的政策。把中国周边安全靠邻国分裂来维持的观点极其荒诞。再者，统一后的韩半岛，将会遵循美中之间平衡路线，和平中立将是其对政策主轴。对强大中国不会构成威胁。统一后的半岛再强大，也比中国小上多倍。它只有担心受大国伤害，而无进犯大国的能力。朝鲜历史从未侵略过它国，反只有遭受列强侵略的痛苦经历，在人口领土比朝鲜(韩国)大几十倍的中国“不会因为朝鲜半岛民族统一而感到紧张”。

说中国不支持半岛统一的另一误区是：统一后中韩领土领海之争将提上日程。笔者认为，半岛统一是客观历史必然，就如同中国两岸统一一样，它是韩民族国家最大核心利益，它高于其它几乎所有问题。中国与世界只能尊重其核心利益并顺其发展。统一后，未来虽然有可能出现领土领海之争，但决不能因此而放弃与动摇对韩统一的基本立场。领土领海之争与半岛统一问题是两个根本不同层次问题，顺序决不能颠倒，领土领海之争是次于或远低于半岛统一的第二位问题。前者是历史必然、民族最高利益与感情问题，后者则是难料与未知问题，更是第二层次的问题。不能把未知难料问题作为战略第一位问题。二者不能混淆。韩半岛迟早要统一，而中国也绝对乐见，否则会落下千古骂名，中国决不能过于强调或只考虑中国自身的战略价值或未来问题，而忽视了韩半岛的民族统一大业，否则中国会为此付出更为高昂的代价。¹⁹⁾

但不管如何，中国内部与韩方确实存在这种担心，它在一定程度上影响半岛统一进程，应当予以重视，並应设法避免。为防止统一后的领土领海纷争，减少不必要

18) 陈峰君：《亚太大国与朝鲜半岛》，北京大学出版社，2002年

19) 陈峰君：《亚太大国与朝鲜半岛》，北京大学出版社，2002年

顾虑，可否采取积极的防患于未然的措施。最近中国军方战略研究人士王翔发表了《提灯计划——朝鲜半岛战略》一文。作者提出“韩半岛终极目标预设：一个统一、繁荣、民主、无核武器，且对华友好的韩半岛。目标实现后对中国是否有利，必须满足六个先决条件”。作者把这六个条件做为中国支持并促进朝鲜半岛统一的前提，也是中国对朝鲜半岛的目标政策，以图“实现中方利益最大化，减少因半岛出现大的危机…”。这六项条件中之第一项即：“中国必须与统一后的朝鲜半岛签署有约束力，高级别的永久和平协议”；第二项即“中国必须与统一后的朝鲜半岛彻底解决所有悬而未决的领土与领海争端，避免日后不安全因素发生”。²⁰⁾不管王翔先生提出的设想与方案可行性如何，但他的创意与思路颇有一定参考价值。

总之，中国支持韩半岛自主和平统一政策决不会改变。崛起的中国与统一后强大的韩半岛将会相互释放正能量，彼此不会构成威胁。“历史上强大的中国对韩半岛没构成威胁，反而混乱而贫弱的中国危及韩半岛的政局，同样统一的韩半岛对中国不是威胁，分裂韩半岛才危及对中国的安全”，崛起的中国与统一的韩半岛的二者关系应是“东北亚地区最为稳定的双边关系”²¹⁾。

20) 王翔：《提灯计划——朝鲜半岛战略》《时事亮点》凤凰卫视2014年3月10日。提灯计划提出的六项主张是：一、中国必须与统一后的朝鲜半岛签署有约束力，高级别的永久和平协议；二、中国必须与统一后的朝鲜半岛彻底解决所有悬而未决的领土与领海争端，避免日后不安全因素发生；三、朝鲜半岛必须彻底实现无核武器化；四、外国军队必须有撤出朝鲜半岛的时间表；五、中国在朝鲜半岛重建工作中必须有相应的经济利益；六、必须取得美国的保证，签署相关的美中协议和中美韩三方协议。

21) 金景一《韩半岛和平统一进程与中国》，载《韩半岛统一愿望和韩中关系未来》首尔大学 2013. 11. 20

한반도의 “통일필망론”과 “속통론”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

천평원 (북경대)

최근 “한반도통일”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한국 각 계의 제일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 통일문제에 두 가지의 정 반대되는 사고방식과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한 가지는 통일을 반대하거나 영원히 분열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통일필망론” 혹은 “영분론”이고, 또 한 가지는 서둘러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쾌도난마를 기대하는 즉 속전속결의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속통론” 혹은 “속전론”이다. 그러나 중국의 학자로서 이 두 가지의 사고방식과 경향은 전부 한반도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보이며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1, “통일필망론” PK “통일필흥론”

“통일필망론”이라는 표현은 <한반도 붕괴>라는 책에서부터 나온다. 이 책의 작가는 한국(독일 국적)을 연구하는 학자 박성조교수가 독일어로 집필하였고, 2006년에 대만출판사에 의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핵심과 결론은 이러하다: 즉 남한과 북한은 통일이 될 수 없다,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분명 붕괴될 것이다. 이유는 양국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경제적 차이, 정치체제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포함해 동서 독일 때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난다. 이 책의 관점은 남북한 통일이 중국의 “대만독립”이론과 굉장히 유사하다

는 것에 있다.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북한은 서로 그 누구도 “남한독립”과 “북한독립”을 선도하지 않는다고 여겨졌고 유일하게 중국만 “대만독립” 세력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세계 각 계가 원래 남북한 내부에서도 “독립”의 사조가 흐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러한 사조세력이 생각보다 아주 크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말에 새누리당여의도연구소의 청년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인 대학생 47.3%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아주 조금 많은 숫자인 52.7%에 불과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표현은, 비록 “통일필망론”과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두 이론의 근거는 대체로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자인 “필망론”은 대중의 관점이 기초가 된 것이고, 후자는 전자의 집중적인 구현과 이론을 통해 일반화시킨 것이다.

남북한이 분열된지 이제 대략 70년이 가까이 되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단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분단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겨나 통일을 위해서는 필연성과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가 만약 제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틀림 없이 세력 발전에 있어서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또한 만약 이런 상태로 몇십년이 더 흐르고 나면, 분명 이런 경향은 더욱더 확장되어 훗날의 주요 추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비극일 것임이 틀림없다.

다행히도,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앞날을 예감하고 “통일”문제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핵심국가정책의 목표로 삼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시대 기반 조성”, “통일은 대박” 등의 이념을 발표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통일에 대한 속깊은 뜻을 내비쳤다. 박근혜정부의 이 “통일흥국론”, “통일성공론”은 “통일붕괴론”에 대한 완벽한 거부사이고 이런 정부의 이념 발표는 대서특필할 일이며 찬탄을 받을만한 일이다.

한반도 국민들의 통일소원은 남북한정부 양자의 공통된 인식이다. 현세기 두 번의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두 국가는 이미 민족통일대업의 실현을 최우선순위에 두자고 명시하였다. 비록 현재까지 남북한 양국의 군사적 문제에서 지극히 대립적인 입장이지만, 남북한의 국민들의 관계는 줄곧 나라의 통일대업을 위해 유지되었다. 이것은 남북한 양국간의 핵심 이익과 고귀한 민족이익이며, 기타 다른 표현들도 모두 이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사가 남북한에게 주는 역사적 사명과 한반도 국민들의 제일 큰 소원이다. 또한 역사상 미국 남북의 통일, 지금의 중국 양안의 통일과 같은 의미이고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역사

에 죄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분열시키려는 갖가지의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수 만 가지가 있을 것인데, 아무리 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남북한 국민들의 동일하고 제일 큰 소원과 민족간의 감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이 통일대업 앞에서는 그 어떤 이유도 무용지물이 된다. 통일대업은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문제이며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모든 일의 대전제이다. 이 대전제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성조 교수께서 <남북한 붕괴>에서 제시한 몇 가지의 이유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맞아 보이지만, 사실 이 문제들은 모두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대륙과 대만이 삼십년 전에 있었던 경제적 수준, 정치적 체제와 사고방식 등의 문제들은 지금의 남북한이 보여주는 문제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양안은 그 격차를 점점 더 줄여나가고 있고 이제 이들의 통일은 그저 시간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 서로의 격차문제는 통일에 있어서 통일을 방해하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닌 것임이 분명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자면, 한반도의 남북한은 서로 경제면에서 아주 뛰어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한국은 이미 눈에 보일 만큼의 발전을 하고 있다. 만약 이 남북한의 경제력이 서로 합하여진다면 이에 따르게 되는 세력은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될 것이다. 한국 통일화평연구소의 최근 진행한 예측조사에 의하면, 남북한이 서로 융합되기 시작하면, 남북한 사람들의 GDP 수준이 2020년까지 약 2.2883만 달러(남북한 평균치), 2030년까지 3.5718만 달러, 2040년까지 5.5767만달러, 2050년까지 8.2808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 평균 성장률 또한 4.47% 올라갈 것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치는 같은 규모의 선진국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에서는 G20과 다국적 회계 법인회사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PWC)에서 지정한 선두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세대인 스페인, 폴란드,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23개국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력, 인구 잠재력, 기술력, 전체국가 순위에 관해 추산하였는데 결과에 의하면, 만약 남북한의 융합이 실현된다면, 2030년 GDP 총계는 세계 11위가 될 것이고, 2050년까지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일본, 러시아, 멕시코에 이어 8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여진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는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2050년에 이를 때에 일본, 영국, 러시아를 넘어서게 되고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제7의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임을 예측하였고 특히 인당 GDP는 주요 23개국에서 미국의 뒤를 바짝 따른 제2위가 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한국현대경제연구소의 통일경제중심의 책임자 홍순식의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 이후 2050년이 되면, 경제규모는 세계8위로 올라설 것을 예측하였고, 국민 수입은 인당 8.6만 달러로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통일은 한국경제가 다

시 한번 비약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얻을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했던 대통령 박근혜의 말처럼 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 중 통일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는 <동아일보>에서 말한 것처럼 분열된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 통일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명확하다. 국민과 정부는 통일 후 행복과 이익이 분열에 의해 따라오는 고통과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통일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몇 십 년이 지난 후 한반도의 북부에서도 남부에서도 같은 60-80년대의 위대한 발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어야 한다. 그 때가 되면, 한반도는 더욱 더 강력해져 동방을 눈부시게 빛낼 것이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북한도 똑같이 변화하고 있으며 어쩌면 통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변화되고 있는 북방 형제들에 대해 선견지명을 갖고 있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통일 후 한반도는 강대국에 의해 사용되고 쟁탈당하고 무력을 이용당하였던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 매우 드물지만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어떤 학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 안보와 정치적 상황은 조직 개편이 일어날 것이고 남북협력이 강화되어 동북아의 중요한 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간주하였다.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처리 중에서는 자신의 안전과 국가적 이익을 위해 각 강대국가들은 그저 등거리 및 평화중립 외교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강대국가들 가운데서도 다른 강대국들이 일으킬 수 없는 적극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강대국들이 “특별한 역할”을 요청할만한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통일 후 한반도는 마치 아름다운 여자를 사나이 네 명이 뒤쫓는 장면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남북한이 만약 통일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아시아-태평양 여섯 구성원(미, 러, 중, 일, 한, 아세안) 중 중요한 나라가 되거나 혹은 동아시아 네 개의 구성원(중, 일, 한, 아세안) 중 진정한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국가통일은 최우선 사안이다. “통일은 운수대통이다”, “통일은 제일 큰 힘이다”. “통일멸망론”, “장기분열론”은 대한민국 국민의 비극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2. “속통론” PK “평화자주론”

한국 방송매체에서 진행된 통일에 대한 토론에서는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명확하게 통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때때로 “평화자주”이 네 글자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북한정권의 변동성과 “독일통일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한다. 특 까놓고 이야기 하자면 즉 한국(주도)의 일방적인 대규모 북진으로 붕괴가 임박한 북한 정권을 수복하여 빠른 방법으로 북한을 얻고 천하를 통일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에서는 심지어 한국대통령의 말: “통일은 아마도 독일과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은 북한정권이 갑자기 붕괴되었을 때에 실현 가능한 것이지 남북한의 협의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다.”를 인용하였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속통론”이라고 부른다.

이런 “속통론”은 실제로 이미 한국사회주류를 움직이게 하는 사고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이 “속통론”의 기초 또한 “북한붕괴론”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조선일보>는 올해 신년특보에서 <통일과 미래-국내 외 학자들이 보는 통일>으로 작은 주제 <통일은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 <통일은 갑자기 일어난다> <지금은 통일을 준비할 최고의 때이다> 등의 상세한 보도를 진행했다. 내용을 보지 않고 타이틀만 본다 하더라도 이 의미가 “한눈에 훤히 보인다”. 특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몇 명의 정부 고위간부들의 말을 인용했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인 천영우는 “통일은 언제든 올 수 있다. 국민들이 더 빨리 통일에 대해 알수록 더 좋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곧 행복이고 동시에 통일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은 고쳐야 한다.”한반도 선진화 재단 박세일 이사장은 “북한체제는 어쩌면 내부붕괴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이 변방국가 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 라종일은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여 미, 일, 중, 러 등 주변국가들이 한반도통일에 협의해주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성명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한반도통일은 독일모드, 베트남 모드나 중국의 양안모드 등을 기준으로 통일 방법을 채택해야 하고 다양한 내외부의 요인에 달려 있고, “흡수독일”모드를 채택하는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되고 또 북한정권의 격변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대비책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부분의 업무와 정신을 모두 이런 유명무실한 것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통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 독일 흡수 모드라는 이 “속결”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의 옵션 중 하나를 고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와 현실을 본다면, 이런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고 모든 희망을 이것에 둘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이 이론을 통일대업을 이루는 정책의 기점으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독일 식 흡수통일의 방식을 보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찍이 <독일통일의 교훈과 우리통일의 방향> 이라는 책에서 남북한 통일은 반드시 독일의 흡수통일의 방식을 비껴가야 한다고 일렀다. 20여년의 실천으로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언급했던 것이다. 독일의 흡수 모드의 핵심은 “북한붕괴론”에 있다. 그러나 가혹한 현실은, 북한은 엄청난 군사력을 지니고 있고 이미 기본적인 핵무기 또한 지니고 있어 그 정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별다른 큰 붕괴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지 3년, 불안정한 상태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즉시 “붕괴”될 것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은 그저 “형식적인 명제”이자 일방적인 소망인 “환상”일 뿐이다. 중국의 네티즌들의 말을 빌리자면 “미타하다”라고 불리는 것이다.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통일을 위해 “붕괴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기대하기만 삼 사십 년 정도 흘렀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이따금씩 기대하고, 매번 통일할만한 모양새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또 기대하고 기다려왔지만 결국 그 결과는 국민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았다.

글쓴이는 독일 식 통일방식을 기초로 세운 “북한붕괴론”은 전혀 한국이 상상하는 “평화지도”가 될 수 없고 “무력통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속통론”이나 “속전론”은 실질적으로 “무통론”의 또 다른 설법인 것이다.

“무력통일”은 50년대 한국전쟁의 역사를 통해 깨달은 고통스러웠던 교훈을 잇는 것이고 두 번의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자주 평화 통일”을 저버리는 것이다. 2000년 6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공동선언문>을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한다. 그리고 2007년 10월 양국의 지도자들은 평양에서 정식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합의하고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해와 통일문제이며 군사적 신뢰관계를 만들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예술과 교류 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두 개 협의안의 공통된 핵심내용은 “자주와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력통일”의 결점은 너무나도 많다.

첫째, “무력통일”은 진정한 민족통일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로 남북간의 더 깊은 대립을 격화할 것이며 심지어는 장기적 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비록 한국이 희망하는 현재 북한의 김씨 정권이 급속히 붕괴된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반 체제세력이 등장할 것이고 그 집권세력이 한국에 굴복할 것이라는 보장하기에도 어렵고 그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어 되려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오늘날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같은 결말로 이어진다면 더 나빠지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김씨의 현정권을 간단하게 북한의 정권으로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사실 더 큰 가능성은: 북한 현정권이든 개편되어 변화된 후의 정권이든지 모두 한국에게 대항하고 반격할 것이고 북한은 그렇게 쉽게 자신들을 한국에게 지배당하게 두거나 한번에 잡혀 먹히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반대로 북한에게 한국을 향한 대항과 반격할 응집력과 추진력을 강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정말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가게 초래하거나 “자극”이 되어 역사에 쓰여진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되며 주동적으로 한국으로 내려와 “무력통일”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일단 연극이 진짜로 변하게 되어 일이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심지어 핵무기를 움직여 사용하게 된다면 더욱더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한국의 모든 성과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비록 미국이 먼저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군사력은 절대 앞서 죽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북한이 2차, 3차 핵무기 실험 후 이미 전쟁을 통해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군사적 바탕이 구비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드러낸 적이 있다고 한다. 또 한국 보도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이 올해 초에 열린 북한군사회회에서 “2015년에 이르면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통일전쟁을 위해 최대한으로 많은 전략물자들을 저장하여 모든 준비를 마쳐 언제든지 전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다른 조중사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4월 23일 공개 질문장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해서 대항할 것인지, 통일을 바라는지 아니면 통일을 반대하는지, 평화통일과 전쟁 중 무엇을 바라는지 등 이러한 엄숙한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바란다”며 요구했다. 10개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 만약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 대결이라면 곧 전쟁을 뜻하는 것이고 박 대통령이 소원하는 것이 전쟁인 것인가?” 이었다. 이 질문들은 비록 한국측에 의해 바로 거부되었지만 북한측의 질문은 급소를 찌르는 질문이었고 웃고 넘어갈 만한 질문들이 아님이 분명했다.

둘째, “무력통일”은 반드시 “외환”이라는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자주” 통일은

부드럽게 녹아질 것이다. 그 어떤 누구도 “무력통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더라도 이에 따른 결과를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가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남통북”이 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능력을 빌릴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이라는 큰 산의 연합 없이 그저 한국 자신의 실력으로 북한을 삼키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럼 만약 “북통남”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똑같이 수수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한국을 진력하여 도울 것이다. 그럼 북한은 또 어찌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분명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함께하여 대응하지 않을까? 한반도는 그럼 새로운 냉전시대에 접어들지 않을까? 한국 정치학자들이 너무 순진해서 “독립통일” 이나 “무력통일” 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말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세 번째, “무력통일” 이 행동은, 여전히 미국의 동쪽으로 이동하는 군사전략의 요구에 부합되며 한반도를 이용하여 “아태지역 재평형”의 큰 계책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대하는 태도는 현재 동 남해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매우 비슷하고 이 모든 것이 곧 아태 전략을 되돌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한미 양국간 진행된 여러 번의 대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이 바로 이런 계책의 표현이고 “무력통일의 전주” 와 “예행연습” 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여러 매체들은 “항공비무” 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뜻은 “중국을 향한 도전” 이며 배후에 절묘한 계책과 악의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주의를 줄만한 것은 한국이 반드시 이에 대해 충분히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절대로 감정적으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통일” 뒤 뒤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 중국세력의 앞잡이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자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웃 또한 해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무력통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평화자주통일” 이야말로 바른길인 것이다.

한반도의 급선무는 당연히 평화와 안정이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핵 포기 문제이다. “통일”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아젠다로 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통일 문제를 다룰 것이고 다만 지금은 시기와 조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다져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중 각 계 여론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 이룬 것이다. 실제로 안정과 통일은 상부상조하는 관계이고 안정이 되어야 더 좋은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안정은 통일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또한 통일의 첫 번째 단계이다. 또한 당연히 통일을 이루게 되면 더 큰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또 오직 평화 자주적으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국전쟁과 불안했던 근본적 원인이 근절된다.

또한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통일은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하루아침의 “돌변” 할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돌변”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돌변에는 그 당시 국제적 상황의 큰 배경이 있었고 동서 독일 내부의 수많은 요인들 또한 존재했었기 때문에 남북한 상황과는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동서 독일통일 또한 점차적으로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난 과정이니 말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녀는 “우리는 지금껏 오직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독일의 통일을 가져다 준 것으로 착각해왔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비록 통일 과정 중 하나의 분수령이지만 통일의 전체 비전을 보았을 때, 통일은 1949년 서독 정부가 설립된 후부터 1989년 베를린 벽이 무너질 때까지의 길고 긴 여정이었다” 라고 말했다. 이 “긴 여행”의 통일관점과 박근혜 대통령이 선도하는 북한에 대한 신뢰 구축 과정은 일맥상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3월 28일 독일 동부 도시 드레스덴에서 연설할 때에 북한에게 3가지의 제안을 하였는데, 즉 먼저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것,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는 것, 이 세가지이며 이를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첫 단계로 삼고 통일을 위해 기초를 다져야 한다. 필자는 이 연설이 매우 마음에 든다.

박대통령의 이런 사상은 “속통론”의 부정임이 틀림없다. 다만 한국이 박대통령의 이러한 사상을 토대로 “속통론” 과 “무통론” 에 대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남북한 지도자들이 이미 이루었던 평화통일협정의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 협의 중에 한반도의 원칙, 절차, 방안 등에 관한 것은 흰 종이 검은 글씨로 모두 명백하게 쓰여 있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다.

어쨌든,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무행,”속행”을 해서는 더더욱 안되고, 일을 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물이 흐르는 곳에 도량이 생기는 것처럼 “오로지 주도 면밀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3.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자주적 통일을 반긴다

글쓴이는 졸작 <아태대국과 한반도> (북경대학출판사, 2002년) 중 한반도 시리즈에서 아주 자세하고 명백하게 한반도통일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관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다

시 한번 설명하고 더 많은 생각들을 추가하고자 한다.

중국의 지도자는 일찍이 90년대 때부터 “진심으로 남북한 양국이 교제와 대화를 통해 더욱더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화해와 자립과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라고 발표했다. 2013년 6월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한 회담에서 시진핑은 “남북한의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화해협력이 실현되어 궁극적으로 평화 자주적 통일이 실현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입장을 핵심만 요약하자면, “평화” “자주” 이 네 글자이다. 중국이 그토록 이 입장을 고집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국가적 이익 때문이고 또한 이것은 한반도 남북한의 공통적인 이익에 근거한 것이다. 해외 언론에 의해 발표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완전히 터무니 없는 말에 속한다. 중국학술영역에서는 비록 다른 관점들이 있겠지만 중국 정부당국을 포함한 주요 학술영역에서의 여론들은 전부 확고하게 통일에 대한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에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오로지 무력통일과 외부세력에 의한 방해이다. 이리 했던 이유는 이러한 통일은 중국과 동북아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한반도 남북한 양국의 근본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의 제일 결정적인 요인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세력이 과거보다 더 강해져 장차 중국에게는 위협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이것은 순전히 서구의 오래된 지연정치와 국제적 전략에 의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방식의 논리는 한 나라의 힘은 주변국가의 분열과 불안 속에서 유지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 국가가 바로 이러한 논리로 일을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만에 대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생겨난 사고방식이 바로 그 산물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일본이 아니므로 절대로 미국이 중국을 향한 분열의 입장과 중국이 한반도 정책을 향한 것을 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한반도의 통일과 양안의 통일은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이중적인 기준으로 안에서 한 모양, 밖에서 또 다른 모양대로의 모양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미국이 중국통일의 이중적 정책을 펼치는 것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만약 미국을 모방한다면,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같고 동방대국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중국은 이러한 멍청하고 우둔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안전은 자기 자신의 강대한 힘과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정책에 의존한다. 중국의 주변 안전을 이웃국가의 분열에 따라서 유지한다는 관점은 지극히 황당하다. 더군다나, 통일 이후의 한반도는 중미간의 평행노선을 따르게 될 것이고 평화 중립은 장차 그 정책의 주축이 될 것이다. 막강한 중국에게는 결코 이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아무리 막대하다 할지라도 중국보다는 몇 배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저 강대국에 의해 피해를 입어 강대국의 능력을 뚫을 힘이 없어졌을 까봐 염려된다. 조선의 역사에서는 한반도 다른 국가들을 침략한 적이 없었고 반대로 오로지 침략당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한 경험만이 있다. 인구영토가 조선(한국) 보다 몇 십 배가 더 큰 중국은 “한반도 민족의 통일로 인해 긴장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은 지지하지 않는 또 다른 잘못된 인식은: 통일 이후 한중 영토 영해 전쟁이 장차 아젠다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한반도 통일은 객관적 역사임이 분명하고 마치 중국 양안의 통일과 같으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최대 핵심 이익이며 거의 다른 모든 문제들보다도 더 높을 것이라고 간주한다. 중국과 세계는 오로지 핵심 이익과 이에 따른 순조로운 발전을 존중해야 할 뿐이었다. 통일 이후, 비록 미래는 영토영해의 전쟁이 일어날 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 절대로 남북한통일의 기본적인 입장을 포기해서나 동요해서는 안 된다. 영토 영해의 전쟁과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두 가지의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등급의 문제이며 순서 또한 절대 뒤바뀌지 않아야 한다. 영토영해의 문제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보다 한 단계 못하거나 많이 떨어진 제2등급의 질문이다. 전자는 역사는 필수고 나라 최고의 이익과 감정문제이고 후자는 예측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문제이며 이것이 더더욱 이차적인 문제가 된다.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전략의 최우선 문제로 둘 수는 없다. 더욱이 양자는 뒤섞여도 안 되는 것이고 말이다. 한반도는 머지않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해 중국 또한 절대적 긍정으로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은 그러지 않는다면 엄청난 나쁜 평판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절대 지나친 강조를 하거나 오로지 중국 자신의 전략가치나 미래문제에 대해서만 고려해 한반도의 남북한의 통일대업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중국은 더 많고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중국내부와 한국측은 틀림없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어 마땅히 중시 해야 하며 피할 방법 또한 강구해야 한다. 통일 이후 영토영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필요 없는 것들을 감소시키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강구해야 한다. 최근 중국군사전략연구인사인 왕항이 <제등계획-한반도전략>을 발표했다. 작가는 “한반도의 미리 보는 최종목표는 하나의 통일, 번영, 민주, 비 핵무기와 더불어 중국과 우호적인 한반도이다. 이 목표가 실현된 후에 중국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는 반드시 먼저 이 여섯 개의 조건을 해결해 봐야 아는 것이다.” 작가는 이 여섯 개의 조건을 중국이 지지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시키는 전제로 삼았고, 또한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를 향한 목표전략이

며 이에 “중국의 이익 취득을 최대화 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감소시킨다”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여섯 개의 조건 중 제1항은, 즉 “중국은 반드시 통일된 한반도와 구속력 있고 최고급의 영구평화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제2항은, 즉 “중국은 반드시 통일된 한반도와 철저히 해결되지 않은 영토와 영해분쟁을 해결하여 추후 안전요소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왕항씨가 제시한 방법과 방안이 실현 가능성의 유무를 막론하고, 그의 창의성과 사고방식만큼은 마땅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어쨌든 중국이 한반도를 향한 자주적 평화통일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부흥하는 중국이 통일된 강대한 한반도와 서로 적극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고 위협이 되지 않게끔 서로 조심해야 한다. “역사상에서도 막강한 중국은 한반도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혼잡하고 가난했던 중국의 위기와 한반도가 정치적 국면에 마주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통일하는 한반도에 중국이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분열이야말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부흥하는 중국과 통일 된 한반도 이 양자의 관계는 충분히 “동북아 지역의 제일 안정된 쌍방관계” 가 되어야 할 것이다.

中韩朝三方经济合作的可能性和需要克服的障碍

高浩荣 (新华社世界问题研究中心)

中韩朝三国地理相近，山水相连，隔海相望，在世界经济全球化的今天，三国本应加强经济合作，同谋共赢发展，造福三国人民。但是，由于种种经济以外的原因，现在三方合作的情况并不令人满意。这主要是中韩经贸合作大发展，中朝经贸合作稳中有升，而朝韩经贸合作却停滞不前甚至倒退。也就是说，三方的合作本来应该是个三角形，现在却缺了一条线，是个“八”字形。从几何学来说，三角形才是稳定的。韩半岛局势之所以常常动荡不定，在经济合作上没有形成稳定的三角关系是其中的重要原因之一。

1、中韩经贸合作快速发展，中朝经贸合作稳中有升，韩朝经贸合作是短板。

自中韩1992年建交以后，两国的经贸合作就走上了快速发展的道路。可以说，没有任何一对国家像中韩这样，在短短的20多年时间里建立如此紧密的经贸关系。

据中方统计，2013年中韩贸易额达到2742.48亿美元，同比增加7%（韩方统计为2288.74亿美元，同比增长6.4%）。中国早就成为韩国的最大贸易伙伴，2013年这一伙伴关系表现更为突出。据韩方统计，中韩贸易额在韩国外贸总额中所占比例为21.29%（2012年为20.15%）。就充分说明了这一点。

尤其是2013年韩国对华出口达到1458.37亿美元，创历史新高，同比增长8.6%，自

华进口830.37亿美元，同比增长2.8%。韩方的贸易顺差达到628亿美元，在韩国外贸对象国中占据首位。

在投资方面，截至2013年，韩国累计对华投资项目数达到56224个，实际投资金额559.5亿美元。中国累计对韩投资额为12.4亿美元。

展望2014年，随着世界经济复苏，美欧等发达国家经济形势不断好转，中国经济增长趋势依然持续。同时，韩国将进一步提高优势产品的市场竞争力，不断推动中小企业全球化发展，并通过与更多国家缔结FTA等，强化对外贸易能力，扩大对外出口。据韩国产业通商资源部预测，2014年韩国贸易额预计将达到1.16万亿美元，同比增长7.6%。其中进口5620亿美元，出口5955亿美元，同比增长6.4%。预计对中国的出口将继续增加。

除了经贸合作外，中韩在人员往来、文化交流等方面更表现出蓬勃发展的势头。2013年，中国成为韩国吸引外国游客人数最多的国家，“韩流”在中国的盛行已经广为人知。这一切不仅加深了两国民众的相互理解，也为两国的经贸合作做出了巨大贡献。

中朝经贸合作稳中有升。中朝经贸合作是两国友好合作的重要组成部分。由于多种因素的作用，两国的经贸合作近年来出现稳步发展势头。

首先，贸易规模不断扩大。中朝贸易在1992年以前主要采取政府间记账贸易方式进行，1992年两国签订了新的贸易协定，改为现汇贸易。1993年，中朝双边贸易达到创记录的8.99亿美元。但是，随着90年代中期朝鲜经济陷入困境，中朝贸易急剧下降，1999年降至谷底，仅为3.7亿美元。

进入21世纪，随着朝鲜经济逐步恢复，中朝贸易开始回升，2000年为4.88亿美元，2008年上升至27.9亿美元，8年间平均增幅达到25.5%。2009年中朝贸易略有下降，为26.8亿美元，但是，其后又开始攀升，2010年达到34.7亿美元，2011年大幅增加到56.2亿美元，2012年为59.3亿美元，2013年增加到65.4亿美元。这些数据显示，进入新世纪后，中朝贸易总体是不断增加的，而且增长速度比较快，幅度比较大，不断创历史新高。

与中韩贸易额相比，中朝贸易额虽然微不足道，但是，考虑到朝鲜本身的经济规模以及遭受国际制裁的情况，中朝贸易额的增加仍然令人瞩目。有统计显示，在朝鲜对外贸易额中，对华贸易占将近90%。这说明朝鲜在遭受国际经济制裁的大背景下，对中国的贸易依赖度非常高。

中朝经济合作主要体现在中国对朝投资方面。目前虽然缺乏最新的统计数字，但

据朝鲜官员在多种场合承认，中国是对朝投资项目和资金最多的国家。据中国商务部的统计，截至2010年底，中国对朝鲜的非金融类直接投资（实际投资）存量为2.9亿美元，主要集中在矿产资源和制造业，投资地区主要为平壤、罗先地区。而据美国国家情报总监（DNI）旗下的“开放来源中心”发表的统计说，在2004年至2011年底的8年间，以合资方式投资朝鲜的外籍企业共351家。在这些对朝投资企业中，中国企业占205家，名列第一。

中国和朝鲜共同开发、共同管理罗先经贸区和黄金坪岛、威化岛经济区（简称“两个经济区”），是中朝经济合作的集中体现。

2010年11月，中朝签订了《关于合作开发两个经济区的协定》和《关于设立中朝共同开发和管理两个经济区联合指导委员会的备忘录》。当年，在平壤举行了“两个经济区联合指导委员会”的第一次会议，宣布委员会成立。

2011年6月，联合指导委员会举行第二次会议，双方明确了“政府引导、企业为主、市场运作、互利共赢”的开发合作原则，商定将充分利用和发挥各自优势，努力将“两个经济区”建设成为中朝经贸合作示范区，和与世界各国开展经贸合作的平台。会议期间，双方还举行了“两个经济区”部分合作项目的启动仪式。这象征着两个经济区进入了实际运作的阶段。

2012年8月在北京举行的联合指导委员会第三次会议宣布，在两国政府和企业的共同努力下，“两个经济区”开发合作“取得显著成果，进入实质性开发阶段”。双方已共同编制完成有关规划纲要，推动机制建设、人才培养、详细规划编制、法律法规制订、通关便利化、通信、农业合作以及具体项目建设不断取得新的积极进展。会议宣布成立罗先经济贸易区管理委员会和黄金坪、威化岛经济区管理委员会，并签署了成立和运营管理委员会的协议、经济技术合作协定，以及农业合作、对罗先地区输电、园区建设、详细规划等相关协议。

特别是中国辽宁省和朝鲜平安北道签署了“关于成立共同开发、共同管理黄金坪经济区管理委员会的谅解备忘录”和“关于共同开发、共同管理黄金坪经济区基础设施建设工程设计的谅解备忘录”。会议展示的具体成果包括：港口和铁路改建工程在全面加快，圈河至罗津港的公路改建工程已竣工并投入使用，双方合作建设的560多町步的高效农业示范区取得丰产丰收。旨在保障从中国输电的测量工作也全部结束。在黄金坪经济区，根据已经完成的细部计划，确定了边境口岸，为实际着手开发创造了有利条件。同时，“两个经济区”管理人员的培训工作进展顺利，过境和通信合作取得积极进展。双方还决定尽快着手推进威化岛经济区的开发。

但是，由于受到朝鲜进行第三次核试验（2013年2月），以及朝鲜国内政治因素（2013年12月的张成泽事件）影响，中朝经济合作受到严重影响。目前在“两个经济区”的合作方面没有新动作。不过，这只是暂时的现象。随着朝鲜国内形势的逐步稳定，以及朝鲜的注意力正转向经济建设方向，“两个经济区”的建设迟早会上轨道。

朝鲜注重经济的动向正在出现。2013年5月朝鲜颁布了《经济开发区法》，7月把原来的“国家经济开发总局”升格为“国家经济开发委员会”，成立了民间性质的“朝鲜经济开发协议会”，同时修改、完善了大批有关吸引外资的法律，积极举办和参加各种国际商品展览会，举行投资说明会，介绍外商投资朝鲜可享受的各种优惠政策，在吸引外资方面表现出不遗余力和前所未有的热情。11月，朝鲜宣布在全国各地成立14个符合当地实情的经济开发区和经济特区，表现出全方位、大幅度开放的架势。随着朝鲜推进经济政策调整的进展，特别是张成泽事件的逐渐平息，中朝经贸合作有望进一步扩大和加强。

与中韩、中朝经贸合作相比，韩朝经贸合作是短板。自从2010年发生“天安舰”事件，韩国对朝实行“5.24”制裁后，韩朝之间的经贸合作基本处于中断状态。现在，除了历经曲折的开城工业园区还存在以外，韩朝之间没有其他的经济合作项目。双方的贸易也大幅减少。据韩国贸易协会的统计，2013年韩朝贸易额仅为11.4亿美元，为2005年以来的最低值。而且这一贸易额几乎都是通过开城工业园区实现的。

这一状况是不正常的。即使韩朝之间存在许多分歧和矛盾，但作为半岛的两个国家和同一民族，不能进行正常的经贸来往和合作也是不正常的。在中韩朝三方经贸合作中，缺少了韩朝的合作，三方合作就无从谈起。因此，韩朝经贸合作的“短板”必须尽快补齐。

2、补齐韩朝经贸合作的“短板”有利于韩半岛统一

在中韩经贸合作，中朝经贸合作和韩朝经贸合作中，目前最重要、也是最需要的是韩朝经贸合作。它对于加强中韩朝三方经贸合作具有决定性意义，是使中韩朝经济连接成一个整体，获得三方都赢的关键，更重要的是韩朝经贸合作是稳定半岛局势，

加深相互联系，为今后的半岛统一打下基础，创造条件的基础性、前瞻性工作。

一、韩朝经贸合作有利于稳定半岛局势，能起到“稳定器”作用。韩半岛局势经常性地处于动荡不安之中，原因是多方面的，其中的一个重要原因是双方在经济领域的合作交流项目太少，规模太小，不足以对半岛局势产生影响力，发挥决定性的“稳定器”作用。

从分裂以来韩朝经贸合作的历史来看，最为活跃的时期是金大中、卢武铉执政时期。这一时期双方开展了过去所没有过的多方面经贸合作，包括开城工业区、金刚山旅游、开城旅游，连接东、西海岸铁路以及一些合作经营、委托加工等项目，并且也曾谋划要建立西海和平发展区、白头山旅游等项目，但是，总体说来，这些合作项目的规模都太小，不能形成规模经济，不能起到“牵一发而动全身”的作用。而一些谋划的项目则大多胎死腹中。即使是开城工业区的建设，韩国企业在园区投资最兴盛的时期也只有123家。而按照原来的规划，应该远远不止这样的规模。现在，几乎没有人再去考虑和谋划开城工业区的第二期、第三期开发工程，似乎已经满足于现状。

开城工业区是韩朝经济合作的象征。站在第三者的角度看，这个合作项目对稳定韩半岛局势起到了一定的“稳定器”作用。众所周知，2013年开城工业区曾因多种原因，尤其是朝鲜采取了单方面措施而暂时关闭，其后通过多次会谈，在时隔近半年后重启。在这个过程中，谁对谁错，见仁见智，站在不同的立场会得出不同的结论。

重要的是，开城工业区后来为什么能够重启？一个重要的原因是如果这个项目彻底关闭，韩朝关系将陷入严重的僵硬局面，韩半岛的局势将更加紧张。这是韩朝双方都不能承受的局面，特别是朝鲜方面所不能承受的。国际社会也不愿看到这种局面。事实表明，韩朝双方都看到了彻底关闭开城工业区的严重后果，经过谈判重启了工业区运作。

在这个过程中，朝鲜方面做出了重大的让步。而朝鲜方面为什么做出重大让步？就是因为彻底关闭开城工业区不仅将造成经济上的重大损失，更重要的是将造成韩朝关系难以挽回的严重倒退，使朝鲜在扭转紧张局势中失去回旋的余地，同时也将使朝鲜失信于国际社会。一个失信于国际社会的国家要想发展经济是不可想象的。

韩国方面其实也不想彻底关闭开城工业区，而是想保持与朝鲜合作的唯一渠道，为今后打开韩朝关系，发展经贸合作留下回旋余地，并通过开城工业区的关闭和重启，显示朴槿惠总统推进“韩半岛信任进程”的原则。韩朝在开城工业区重启以后举行了多次当局会谈，以及离散家属会面活动，从一定意义上说都与重启开城工业区有联系。

从这个角度看，开城工业区在稳定半岛局势中起到了一定的“稳定器”作用。如果韩朝之间能够多几个像开城工业区这样的合作项目，多几个更大的、更重要的“稳定器”，那么半岛局势的稳定就将更有保证。

这就像中日关系、韩日关系那样，尽管双方在历史问题、领土问题上存在许多很严重的分歧，但是双方都没有“动武”的想法，都希望通过谈判解决问题。这里的原因当然是复杂的，多方面的，但是，双方互为重要的经济伙伴关系，也是其中的一个重要因素。

二，韩朝经济合作是实现统一的基础性和前瞻性工作。韩半岛的统一是韩朝都渴望的民族夙愿。如何实现统一是摆在双方面前的严肃课题。无论是朝鲜方面提出的“高丽民主联邦共和国”方案，还是韩国方面希望实现的“自由民主体制下的统一”，双方强调的都是“和平统一”而不是“武力统一”。所谓依靠武力的“赤化统一”和“北进统一”都已成为历史。任何一方要想通过武力实现统一都是不现实的，国际社会，尤其是周边国家也不会同意。

事实上，自冷战结束后，朝鲜就已经放弃了“赤化统一”的念头。朝鲜现在所期望的是保住自己的政权、体制不被韩国“吃掉”，能够以平等的地位同韩国和平共存。朝鲜所推行的“先军政治”，以及它所进行的核试验，主要是为了保卫自己的政权和体制，是为了威慑，为了不被“吞并”，而不是为了用武力实现统一。试想，如果动用核武器实现统一，那么经过核灾难的统一有什么意义呢？

在不能动用武力的现实情况下，和平统一是唯一正确的方法。如果说“武力”是短期内能够一下子实现统一的话，那么“和平统一”则是长时期的、缓慢的过程，是一场“持久战”。在这次“持久战”中，经贸合作是基础性、前瞻性的工作。

如果能够坚持不懈地进行经贸合作，不断扩大规模，形成“你中有我，我中有你”，想打也不能打、不愿打，想分也分不开、不愿分的局面，统一的步伐就会加快，统一就会自然而然地到来。到那时，不想统一也不行。从这个意义上说，经贸合作是对今后统一的投资，是一种长期投资。从大局来看，这也是一种“只赚不赔”的投资。

今年3月，朴槿惠总统在德国发表了“德累斯顿构想”，提出了“优先解决人道主义问题、建设共同繁荣的民生基础设施、恢复民族同质性”的设想。这三项建议本意很好，如果能够实行，对缓和韩半岛局势，促进朝鲜的经济建设将会发挥很大的作用。现在，朝鲜对朴槿惠总统的“德累斯顿构想”采取否定的态度。在当前的形势下，朝鲜的这种态度是在预料之中的。但是，随着形势的变化和发展，朝鲜的态度也

是会改变的，它可能不会按照字面那样原封不动地接受“德累斯顿构想”，但会在实际操作中采取变通的方法加以接受。

如果在“德累斯顿构想”中加上“发展经贸合作”就更好了。“建设民生基础设施”需要长期投资、投资额大且见效较慢，而“发展经贸合作”则投资额小、见效较快。朝鲜正处于经济困难时期，金正恩上台后急于想使经济发展能有起色，国民生活能有看得到的改善，因此投资周期短、见效快的经贸合作更适合朝鲜的实情，也会受到朝鲜的欢迎。如果“建设民生基础设施”能够与“发展经贸合作”结合起来，形成既有重点的基础设施建设和普遍的经贸合作在朝鲜遍地开花的局面，“德累斯顿构想”就将更有活力，更有灵活性，更具操作性，更容易被朝鲜接受。

三，韩朝经济合作是缩小双方之间经济差距的方法，也是引导朝鲜“改革开放”的手段。韩朝之间的经济差距很大，很明显，无论是GDP规模、人均国民收入、实际生活水平等等都存在巨大差距。如果在这种严重反差的情况下突然实现统一，韩国将不堪重负，经济将严重倒退，甚至会引起社会混乱和动荡。韩国国民对这样的统一不会满意，统一的意义也将相应减弱。

朴槿惠总统在今年初说，“统一是大事”，“统一将给韩国带来巨大经济利益”。在今年1月的达沃斯论坛上，朴槿惠总统还说，“韩朝统一对于韩国乃至整个东北亚都是一件大事，有助于为东北亚的经济发展提供新的动力”。统一确实是大事。韩半岛的统一不仅将改变东北亚地区的政治格局，也将为东北亚地区各国的经济发展带来新的机遇。但是，统一必须是和平的统一，秩序井然的统一，而不是混乱、动荡甚至发生内战的统一。如果在混乱、动荡和内战中实现统一，对韩国是一场灾难，对周边国家也不是好事。周边国家也不会欢迎这样的统一。

实现统一不能省略过程。没有过程的统一是危险的。所谓过程，就是要尽可能地缩小双方在思想观念上、经济体制上、生活水平上的差异，使统一变成自然而然，水到渠成的事情。站在第三者的客观立场来说，朝鲜金正恩政权在可以预见的将来不会垮台。韩国还不具备实现德国式统一的内外条件，而且也无法预测具备这些内外条件的时间表。因此，韩国不应把统一的希望寄托在朝鲜政权垮台的基础上，而应该把希望寄托在如何消除双方的政治分歧，缩小双方的经济差距方面。从现在开始进行扎实的经济合作，实际是为今后的统一做准备，也是实现统一的不可缺少的过程。

这个过程实际是引导朝鲜走上“改革开放”道路的过程，是引导朝鲜实行市场经济的过程。金正恩统治下的朝鲜其实也在进行“改革开放”，只不过名称不叫“改革开放”而已。据朝鲜媒体、海外媒体的报道，朝鲜现在在工业、农业领域里实行的

“独立核算制”、“土地担当责任制”，实际上就是一种“改革”；它在全国各地建立经济开发区和特区，实际上就是“开放”。

当然，朝鲜的“改革开放”还是非常初级的，还不是稳定的，还有很多不确定因素。国际社会现在的课题就是要鼓励、支持朝鲜的这种“改革开放”，而不是对此不屑一顾。中国参与“两个经济区”的开发建设，实行的是“市场运作”的原则。这实际上也包含着为朝鲜经济注入市场要素，引导朝鲜走上市场经济道路的意义。韩朝经济合作更能做到这一点。要通过韩朝经济合作，让朝鲜体会到市场经济体制对发展经济的好处，体会到“市场运作”的甜头，逐步走上市场经济道路。这对今后的半岛统一将有利无弊。

有人担心说，韩朝的经济合作会使朝鲜有更多的钱用于发展核武器，发展军事力量。这种看法或许有一定道理。但是换个角度看问题，或许也有一定道理。第一，联合国安理会的制裁决议并不包括与朝鲜进行正常的经贸合作。正常的经贸关系是造福民众的事情，也是事关人道主义的事情，是应该做，可以做的事情。第二，正常的经贸合作是可以监控的。第三，即使没有经贸合作，朝鲜也会发展自己的国防力量，那样只会使朝鲜人民的生活更加贫困，所谓“赤脚的不怕穿鞋的”，半岛的局势也会更加不稳定。中韩两国民众现在都不希望打仗，其中的一个原因就是生活好了，富裕了，都不想这样的生活遭到战争的破坏。朝鲜人富裕了也会这样想的。

3、发展中韩朝经贸合作的可能性和需要克服的障碍

现在虽然可以探讨中韩朝三方经济合作的可能性，但是大规模地实行三方经济合作似乎还不具备条件，还为时尚早。当前的重要问题是分别推进中朝、韩朝的经贸合作，并在这个过程中探索三方合作的可能性。

中朝、韩朝经贸合作的可能性和困难同时存在。问题在于如何克服障碍，把可能性变为现实性。中朝、中韩经贸合作的可能性主要表现在朝鲜发展经济的紧迫性和积极性上。

第一，金正恩上台后虽然奉行“先军路线”，提出“经济建设和核武器建设并进路线”，似乎仍然把国防建设放在第一位，实际情况并非如此。金正恩表示要继承

“先军政治”路线，是他必须要作出的表态，否则将失去立足之本。金正恩提出的“并进”路线实际是把经济建设放在中心位置，而不是把发展核武器放在中心位置。金正恩在提出“并进”路线时称，由于朝鲜有了核武器，能够保证不受侵略了，所以可以放心地进行经济建设，可以集中力量、资金发展经济了。这实际上是把工作重心转移到经济建设上来了。

金正恩上台后进行了一系列人事调整，撤换了许多高级干部，包括处决了张成泽，从而巩固了其领导地位。但是人事调整和处决张成泽只是巩固政权的一个方面。威胁金正恩政权稳固的最大问题在于经济和民生。金正恩上台之初曾表示“不再让人民勒紧裤带过日子”。如果这个承诺不能兑现，其政权的稳固性就将大打折扣。

第二，长期的经济困难和国际制裁迫使朝鲜必须另寻出路，另找解决办法。在当前的情况下，发展对外合作关系不失为一种良策。已故的金正日国防委员长生前多次访华，亲眼目睹了中国发生的巨大变化，尤其是经济特区的变化，促使其产生效仿中国经济特区的做法，带动经济复苏的构想。

中朝之间的“两个经济区”开发建设是金正日生前确定的项目。这在朝鲜被称为“领袖遗训”。金正恩上台后在多种场合多次公开表示要坚决贯彻“遗训”。因此，推进“两个经济区”开发建设的大方向不会改变，“两个经济区”的建设只会因形势变化而放缓，但不会停止。

在韩朝经济合作方面，开城工业区的重启具有标志性意义。目前朝鲜比较忠实地履行了有关重启开城工业区的协议，同时迫切希望重开金刚山旅游，都说明它希望发展与韩国的经贸合作的愿望。今年初朝鲜提出“重大建议”，展开“和平攻势”，其中的一个目的就是为开展经贸合作创造条件。

对于朝鲜来说，在国际制裁还在持续，且不知何时能够解除的情况下，发展对外经贸合作的最佳对象，除了中国，就是韩国。因为中韩都是朝鲜的近邻，都有与朝鲜长期打交道的经验。中国与朝鲜有着传统的友好合作关系，而且已经启动了“两个经济区”的建设；韩国与朝鲜也有着开城工业区、金刚山旅游等经贸合作的成功经验和教训，而且有着相同民族传统和语言的优势。与其他国家相比而言，韩朝经济合作具有示范性、样板性和引导性作用。对于朝鲜来说，只有打开与韩国的经贸合作之路，才能打开与其他国家的经贸合作之路。因此，朝鲜对与韩国的经贸合作赋予更重大的意义。

第三，除了朝鲜的因素外，中韩本身也有开辟朝鲜市场的需求。中韩经济都面临结构调整的压力，都需要开辟新的市场。而朝鲜市场则是尚未开垦的处女地。中韩在

开辟朝鲜市场方面，既是竞争者，也是合作者。当前，除了中韩各自分别谋求与朝鲜的经贸合作外，还可以尝试互相参与开城工业区和“两个经济区”的开发建设，也就是说，中国企业参与开城工业区，韩国企业参与“两个经济区”。

此外，中韩企业还可以组成联合体参与朝鲜市场的开发。韩国企业与俄罗斯一起参与朝俄铁路运输项目，或许也是中韩今后可以参考的做法。据朝鲜媒体报道，2013年11月，由中国香港、新加坡、澳大利亚、中近东和非洲企业组成的“和平经济开发集团”负责开发的“开城高新科技开发区”已开工建设。这是朝鲜对外开放的新做法、新尝试，也是外国企业进军朝鲜市场的新做法、新尝试。这种新做法能否成功现在还不得而知，但也不失借鉴意义。

虽然中朝、韩朝发展经贸合作存在着上述可能性，但是要把可能性变为现实还需要克服许多障碍。归纳起来，这些障碍主要包括三个大的方面。

第一，朝核问题。这是横在韩朝经贸合作面前的最大障碍，也是中朝经贸合作的一个障碍。朝鲜提出的“并进路线”虽然重点在于经济建设，但也表明了朝鲜不会轻易弃核的立场。朝核问题现在处于僵持状态，六方会谈迟迟不能恢复，何时能解决朝核问题是个无法预测的难题。在核问题没有解决、国际制裁仍在持续的情况下，韩半岛的紧张局势不会有根本上的改变，外国投资者的投资心理将受到严重打击。

对此的建议是：不要把解决朝核问题作为经贸合作的前提，不要把核问题和经贸合作捆绑在一起，而应该实行“政经分离”原则，更多地从经贸合作入手，积极营造和平稳定的氛围，促使核问题的解决。为此，朴槿惠总统提出的“德累斯顿构想”的三项建议应该同时启动，而不应分先后。

第二，韩朝关系问题。韩朝关系僵硬既与核问题有关，也与双方严重的互不信任有关。朝鲜现在高度警惕韩国官方和媒体大谈统一问题，认为这是韩国企图在韩半岛实现德国式的“吞并统一”，认为朴槿惠总统提出的“韩半岛信任进程”和“德累斯顿构想”都是为了实现这一目标的图谋。韩国对朝鲜的“人权问题”、“并进路线”等提出的批评，更加重了朝鲜的疑虑和担心。尽管韩国多次表示并不想“吞并统一”，但无法解除朝鲜的担忧和疑虑。

特别是韩美每年举行的联合军事演习，使朝鲜经常性地感到安全受到威胁，并为此作出强烈反应。今年3月朝鲜接连发射火箭弹和导弹，就是这种强烈反应的表现。这种你来我往的做法，使韩半岛周而复始地出现紧张局势。

韩朝消除互不信任是个长期的过程、渐进的过程。这里的一个重要问题是相互尊重，互不干涉内政。韩朝虽然是同一民族，但是在国际法上则是两个主权独立的国

家，不能因为是同一民族就可以在处理双边关系时随心所欲。客观地说，在这方面，朝鲜有朝鲜的问题，韩国有韩国的问题。

对此的建议是：双方都应少谈于事无补的统一高调，多做有利于统一的实事，少做或不做攻击谩骂、有伤感情的事情，多做有利于和解合作，增进理解的事情。具体来说，朝鲜应该遵守联合国安理会决议，停止核试验和弹道导弹试射，韩美应逐步减少联合军演的次数，缩小军演的规模、缩短军演时间。在经贸合作方面，双方因尽快启动恢复金刚山旅游的会谈，启动解决“5.24”制裁措施的当局会谈。

第三，朝鲜经济体制问题。朝鲜的经济体制有其独特之处。一是“先军政治”与发展经济之间的矛盾；二是高度集中的计划经济与市场经济之间的矛盾；三是落后的基础设施与吸引外资之间的矛盾。此外，还有恶劣的外部环境与稳定内部需要之间的矛盾。一个国家的经济体制是其自己选择的，外部无法也无力来改变，强迫朝鲜改变经济体制只会引起强烈反弹，使朝鲜更加封闭。

对此的建议是：要通过潜移默化的过程来影响朝鲜作出改变。在这方面，经贸合作就显得格外重要。对朝经贸合作要有坚忍不拔的精神，不能因一时的成功而窃喜，或因一时的失败而灰心，要着眼长远，而不是只顾眼前。

한중북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극복해야 할 과제

가오하오룽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소센터)

한중북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경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3국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모두가 win-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외적인 원인들로 인해 현재 3국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중 경제무역협력은 크게 발전하고 있고, 북중 간 경제무역협력도 안정적인 성장 중에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 경제무역협력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즉, 3국의 협력이 원래는 삼각형의 모형이어야 하는데 현재 하나의 행이 빠져버려 “^” 모형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기하학적으로 볼 때, 삼각형은 가장 안정적인 모형이다.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한 주요 원인은 삼각형의 안정적인 경제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 것이다.

1. 한중 경제무역협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북중 간 협력도 안정적인 성장 중에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결점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빠르게 발전해왔다. 어떤 나라도 한중 양국처럼 20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측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중 무역액은 2742억4800달러에 달한다. 전년 동기대비 7% 성장했다.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무역액 2288억 7400달러, 전년동기대비 6.4%성장) 중국은 일찍이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되었고 2013년에는 이러한 파트너 관

계가 더욱 도드라졌다. 한국 측 통계에 따르면 한중무역액이 한국의 무역 총액의 21.29%를 차지했다. (2012년은 20.15%)

201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458억37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6%성장,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중국수입액도 830억3700달러로 동기대비 2.8% 성장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628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국의 무역대상국중 1위이다.

2013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누적투자총액은 559억5000달러이며 투자항목은 56224개에 달한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총액은 12억4000달러이다.

2014년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상황은 꾸준히 호전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도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 중이다. 그와 동시에 한국 또한 우세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무역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한국의 무역액이 1조1600억 달러에 달해 동기대비 7.6%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중 수입이 5620억 달러, 수출이 5955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협력 외에도, 한중은 양국 간 문화교류 등의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2013년 중국은 한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국가가 되었고, “한류”는 이제 중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이렇게 양국 국민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더 많은 이해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제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중 경제협력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북-중 양국의 우호관계에 있어 경제협력은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국의 경제협력은 요 몇 년간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우선, 무역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북중 무역은 1992년 이전에는 주로 정부 간 기장무역(받아야 할 외상값을 장부에 적어놓는 무역거래)을 하다가 1992년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현금거래 무역을 하게 되었다. 1993년 북중 무역은 8억9900달러에 달했지만 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가 크게 위기를 겪으면서 북중 교역량도 1999년 3억7000달러로 줄어들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 북한의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북중 무역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2000년 4억8800달러였던 무역액이 2008년에는 28억9000달러로 늘어났고, 8년간 평균 25.5%씩 성장했다. 2009년에는 약간 줄어들어 26억8000달러였으나 2010년 다시 회복되어 34억 7000달러, 2011년 56억2000달러, 2012년 59억 3000달러까지 늘어났다. 2013년에는 65억4000달러에 달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북중 무역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

며, 그 속도도 비교적 빠르다고 볼 수 있다.

한중 무역액과 비교 했을 때 북중 무역액은 그 규모가 굉장히 작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규모와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는 여러 제재 등을 감안했을 때, 북중무역 규모는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대외 무역액중 대중국 무역액이 9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북한이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북중 경제협력은 주로 중국의 대북투자에서 나타난다. 현재 최신 데이터가 없지만 북한의 관료들은 중국이 북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라고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중국의 대북 비금융권에 대한 직접투자는 2억9000달러이며, 주로 광산자원이나 제조업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 지역은 주로 평양, 나선이다.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1년 말 까지 8년간 공동출자 방식으로 북한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총 351개이며, 그중 205개의 기업이 중국기업이다. 중국과 북한은 나선경제무역지구와 황금평도, 위화도 경제구(“두개 경제구”로 약칭)를 공동 개발, 관리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중의 경제 협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11월, 북중 양측은 <두개 경제구의 협력 개발에 대한 협정>과 <두개 경제구의 북중 공동 개발관리에 대한 지도위원회 비망록> 등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평양에서는 두개 경제구 연합 지도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되어 위원회의 설립을 선포하였다.

2011년, 연합 지도위원회는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양측에서는 “정부가 이끌고, 기업을 위주로하며, 시장이 운용하여, 모두가 윈윈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두개 경제구”를 세계 각국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창구로 성장시킬 것을 다짐했다. 회의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부분적인 운영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2012년 8월 베이징에서는 연합 지도위원회의 제3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양측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두개 경제구를 개발하고 성과를 나타내어, 실질적인 발전 단계에 진입시키자는 협의에 도달하였다. 양측은 이미 관련 인프라 건설, 인재 양성, 법률 제정, 통관 절차 간소화, 통신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취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인 바 있다. 회의에서는 나선 경제구 관리위원회와 황금평도, 위화도 경제구 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포하였으며, 경제기술 및 농업에 관한 협력, 나선지구에 대한 송전 등 여러 가지 상세 조항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특히 중국 요녕성과 평안북도는 “황금평 경제구의 공동개발, 관리를 맡는 관리 위원회에 관한 양해각서”, “황금평 경제구의 기초 인프라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항구와 철도 및 나진항 주변도로의 건설과 개선, 선진 농업기술의 도입

등이 있다. “두개 경제구”의 관리인원들에 대한 교육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통신 등 업무도 빠른 진전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 양측은 위화도 경제구의 개발도 최대한 빨리 개발 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장성택 처형 등)의 영향으로 인해 북중 경제협력은 더 이상의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다. 북한 내부의 정세가 안정화되고 북한이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두개 경제구”는 조만간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북한이 경제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은 여러 면을 통해 알 수 있다. 2013년 5월 북한에서는 <경제개발구 법>이 선포되었고, 7월에는 기존의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 위원회로 승격시킨바 있다. 또한 “조선경제개발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동시에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관련 법을 대폭 수정하고 완화시키면서 각종 박람회나 투자설명회를 통해 각종 우대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11월에는 14개의 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를 출범시키면서 전방위적인 개방의 모습을 취했다. 북한이 경제정책을 대폭 조정하는 추세에 따라, 또 장성택 사건의 여파가 점차 수렴됨에 따라 북중 경제협력은 다시금 회복될 전망이다.

한중, 북중 경제협력에 비해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하나의 “결점”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로 한국은 북한에 대해 5.24 조치를 취하였고 남북한 경제협력이 단절되었다. 현재는 우여곡절 끝에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밖의 경제협력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양측의 교역량 또한 대폭 감소하였다. 한국 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남북한 무역액은 11억 4000달러에 그쳐,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무역액을 기록했다. 게다가 이 무역액도 대부분이 개성공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남북한 간 분쟁이나 충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한민족이 정상적인 교역을 할 수 없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한중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3자간 협력은 더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점”은 반드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남북한 경제협력의 결점을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다.

한중, 북중, 남한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남북한의 협력이 다. 한중북 삼자 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한의 협력이 가장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중북의 경제를 하나로 엮어 삼자 모두 win-win-win할 수 있는 관건이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고, 통일을 위한 기초이기도 하다.

1) 남북한 경제협력은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유리하다.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남북한 양측의 경제 교역의 규모가 너무 작고 협력 분야도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어렵다.

분단이래로 남북한의 경제협력 역사에서 볼 때,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이다. 당시 양측은 다방면적인 협력을 이루어냈는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등을 실현시켰으며, 서해평화협력지대 건설 및 백두산 관광 등의 프로젝트들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개성공단에 대해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도 투자한 기업의 수가 123곳 밖에 되지 않았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건설하자는 움직임도 없다. 즉 이러한 미미한 협력에만 그쳐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프로젝트는 한반도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했다. 2013년 개성공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한때 잠시 폐쇄된 바 있다. 그 후 담판을 통해 재가동되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 못했는지 보다 개성공단이 어떻게 재 가동 되었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었다면, 남북한의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것이며, 한반도의 정세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을 것이다. 이는 남북한 양측이 모두 원치 않는 상황이고, 특히 북한은 더욱 그렇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남북한 관계가 긴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남북한 모두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지 알았기 때문에 양측이 담판을 통해 재 가동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큰 양보를 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자신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따를 뿐 아니라 더욱이 남북한의 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악화

될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신용을 잃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은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남한도 개성공단의 폐쇄를 원치 않았다. 오히려 북한과의 유일한 협력의 통로인 개성공단을 지킴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위해 여지를 남겨두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폐쇄와 재가동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원칙의 추진을 보여주었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재 가동 이후 여러 차례의 회담을 가졌고,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했다. 이는 개성공단의 재 가동과 일정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개성공단이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남북한 간 개성공단과 같은 프로젝트를 몇 개 더 운영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스테빌라이저”가 생길 것이고, 그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일관계나 한일관계에서는 역사문제나 영토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잔존하고 있어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이들 국가가 서로 무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복잡 다양한 경제협력 파트너십 때문이다.

2) 남북한 경제협력은 통일을 위한 기본적인 미래대비 전략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이 모두 갈망하는 민족의 염원이다. 통일의 실현은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에서 제시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방안이든지, 아니면 남한에서 희망하는 자유민주 체제하의 통일이든지, 남북한 모두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적화통일” 혹은 “북진통일”은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졌음이 분명하다. 어떤 한쪽이 무력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 특히 주변 환경 또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실상, 냉전이 종식된 이래로 북한은 이미 적화통일의 뜻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길 원하고, 자신의 체제가 한국에게 “떡히는 것”을 피하고자 할 뿐이다. 북한이 실행하고 있는 선군 정치와, 핵실험 등은 모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다른 세력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일 뿐, 무력을 통한 통일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핵무기를 이용해 어떻게든 통일을 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핵위기에 의해 억지로 실현된 통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게도 평화통일이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만약 무력이 단기적으로 한번에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평화

통일은 장기적이고 완만한 과정, 즉 “장기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장기전에서 경제협력 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미래성 있는 전략인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경제협력을 해 나아가, 협력 규모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로의 운명을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 무력을 사용하여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수 없고, 서로 멀어지고 싶어도 멀어질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은 더욱 가까워 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제협력은 미래의 통일에 대한 하나의 장기적인 투자이다. 멀리 봤을 때, 손해 보지 않는 장사인 셈이다.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의 구상을 내놓았다. 이 세가지 구상을 만약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남북한 경제협력 촉진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는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세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북한의 태도는 변화할 것이다. 비록 드레스덴 구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드레스덴 구상에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인프라 구축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액수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협력은 투자된 액수는 적더라도 더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 빠르고 가시적인 경제발전 성광에 급급한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라도 성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경제협력이 북한의 실정에 부합하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크게 환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인프라 구축과 경제협력을 결합한다면, 유동성과 미래성이 겸비된 구상으로서, 북한의 입장에서 더욱 크게 환영할만한 정책제안이 아닐 수 없다.

3) 남북 경제협력은 양측의 경제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는 수단이다.

남북한 간의 경제격차는 어마어마하다. GDP수치, 국민소득, 국민들의 생활수준 등 어느 분야에서 봐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만약 이토록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크게 뒤쳐질 것이다. 심지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나 동요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의 국민들도 그러한 통일 방식에 불만을 가질 것이며, 통일의 진정한 의미도 상대적으로 흐려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통일은 한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 1월 그는 다보스 포럼에서, “남북한 통일은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대박이다.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정세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동북아 각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낼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평화통일 이어야 하고, 질서정연한 통일 이어야 한다. 혼란스러운, 무력을 통한 통일이면 안 된다. 만약 무력을 통해 통일이 실현된다고 치자, 그것은 한국에게뿐 아니라 주변국가에도 재난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주변국들도 무력을 통한 통일은 환영하지 않는다.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된다. 과정이 없는 통일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 과정이란 양측의 이념적, 정서적, 경제적, 체제적인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당장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남한도 현재로써는 독일식 흡수 통일을 이루어낼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러한 조건을 언제 갖추게 될지조차 모른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정권의 붕괴에만 초점을 맞춰 통일을 바라면 안 된다. 남북한 양측의 정치적 충돌이나 경제격차를 줄이는 것에 힘을 쏟으로써 통일을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부터,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은 훗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이며, 남북한의 통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즉 시장경제로 이끄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정은 통치하의 북한은 실질적으로 개혁개방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개혁개방이라고 칭하지 않을 뿐이다. 북한매체나 해외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공업과 농업 분야에서 독립채산제, 월급제 및 포전담당제 등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을 “개혁”으로 볼 수 있고, 전국각지에 경제 개발구와 경제 특구 등을 지정한 것을 “개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은 아직 초기단계일 뿐이며, 안정된 것도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 중국은 “두개 경제구”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경제구에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에 시장적인 요소를 주입하여 북한을 시장경제로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도 이와 같아야 한다.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가 경제발전에 이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훗날 한반도의 순조로운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들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자금을 쥐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첫째, 북과의 정상적인 경제협력은 UN안보리의 제재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상적인 경제 무역 관계는 국민에게 득이 되는, 인도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은 감시가 가능하다. 셋째, 경제 무역 협력이 없더라도 북한은 자신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북한 주민의 생활은 더욱 빈곤해질 것이며 한반도 정세 역시 더욱 불안정할 것이다. 현재 한중 양국의 국민들도 모두 싸움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중 하나의 원인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부유해짐에 따라 이러한 생활이 전쟁에 의해 파괴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도 그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3. 한중북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극복해야 할 과제

한중북 경제협력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에 시기적으로는 아직 미완성, 미성숙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요한 당면과제는 각각 북중,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이 과정 속에서 삼자간의 협력방안과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중,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가능성과 장애물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꿀 것인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이러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북한이 경제발전에 얼마만큼의 적극성을 갖고 임하는지에 달려있다.

1) 김정은 정권은 비록 선군정치 노선을 견고 있으나, “경제개발과 핵개발의 병진”이라는 기지를 내걸고 있다. 흡사 국방, 군사력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김정은은 선군정치의 노선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서 권력의 기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제시한 “병진” 노선은 실질적으로 핵무기의 개발이 아닌 경제개발을 가장 중심에 놓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정은이 “병진”노선을 내놓았을 때, 사실상 북한에는 이미 핵무기가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침략이나 선공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보아 경제개발에 노력을 쏟아붓고 자금을 집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제개발을 중심점에 놓았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인사 조정이 이루어졌다. 많은 고급간부들이 교체되었고 장성택 또한 처형된 바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인사 조정과 장성택 처형은 정권을 공고화하는데 일조하긴 했지만 사실상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민생과 경제이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인민들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언행불일치가 김정은 정권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2) 장기적인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또 다른 출구를 찾도록 하고 있다.

김정일은 생전에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발전을 직접 목격하고 느꼈다. 특히 경제특구의 놀라운 변화는 북한이 중국의 경제특구를 본받아 경제회복을 꾀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북중 간의 “두개 경제구” 개발은 김정일이 생전에 이미 계획했던 프로젝트이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수령님의 유훈”으로 칭하면서, 김정은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유훈을 계승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두개 경제구” 개발의 방향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고, 다만 정세가 불안정한 영향을 받아 개발의 속도가 늦춰졌을 뿐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개성공단의 재 가동은 큰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개성공단 재 가동에 관한 관련 협의를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했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는 뜻을 비추었다. 이는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올해 초 북한이 내놓은 “중대제안” 및 “평화공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도 경제 협력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함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게 가장 좋은 경제협력 파트너는 중국과 한국이다. 중국과 한국 모두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북한과 오랜 교역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인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고 현재 북한의

“두개 경제구”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파트너이기도 하다. 남한과 북한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의 경제협력을 진행한 바 있는 경제적 파트너이다. 게다가 같은 민족이며 같은 전통과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남한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에게 더욱 귀감이 될 만하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과 성공적으로 경제협력을 시작했을 때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도 순조로워 지기 때문에, 남한과의 교역 및 협력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과 중국에게도 북한 시장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 시장은 아직 개척된 적도 없는 “황무지”인데, 한국과 중국은 북한 시장의 개척에 있어서 협력 파트너이자 경쟁자이다. 현재 한중 양국은 각각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은 “두개 경제구” 개발에 참여하는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연합하여 함께 북한 시장에 진출, 공동개발 하는 구상도 가능하다. 한국 기업이 러시아와 협력하여 북한-러시아 철도운송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과 같이, 한중 양국도 이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1월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중근동 및 아프리카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참여한 “개성 고도과학기술 개발구”가 착공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새로운 “개방”이자 외국 기업이 북한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시도이자 방식이다. 이러한 시도의 성공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참고할만한 의미는 충분하다.

비록 북중,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열려있으나, 그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직 장애물도 존재한다. 그 장애물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북핵문제. 북핵문제는 남북한, 북중 경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비록 북한이 “병진노선”의 기지 하에 경제개발에 큰 힘을 쏟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6자회담은 한참 전부터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북핵문제는 언제 해결될 것인지 예측 불가능한 난제임이 분명하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긴장국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남북 관계의 긴장은 북핵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 남북한 양측의

상호 불신과도 연관이 있다. 북한은 현재 남한의 매체에서 통일에 관해 언급하고 토론하는 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남한이 독일식의 흡수통일을 꾀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이 모두 흡수통일을 위한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병진노선 등을 비판하고 있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이 수차례 “흡수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심과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적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강력한 항의성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북한은 로켓과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하였다. 이런 식의 도발-대응의 반복이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남북한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다.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비록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두 개의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두 “나라”간의 외교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북한과 한국은 각각 다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는, 양측은 통일과는 별 관련 없는 화제로 다투기 보다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를 화제로 삼아 불필요한 상호비방을 줄여야 한다. 상호비방을 줄임으로써 화해와 협력을 가속화 시키고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은 UN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해야 하며, 한미 양국은 점차적으로 연합 군사훈련의 횟수나 규모를 줄여 나가야 한다. 경제 협력의 영역에서는 남북한 양측이 조속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한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셋째, 북한 경제체제의 문제. 북한의 경제체제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선군정치와 경제개발 간의 모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간의 모순, 낙후된 기초인프라와 외국자본 유치 간의 모순, 열악한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의 안정화 간의 모순 등 이다. 한 나라의 경제체제는 자국이 선택하는 것이고, 외부 환경은 자국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게 경제체제를 바꾸라고 강요하고 압박한다면 북한은 오히려 빗장을 걸어 잠글 것이다.

이에 대한 제한으로는, 북한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선택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대북 경제협력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일희일비하며 눈앞의 이해득실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제2회의: 협력적 지역질서 형성 과제와 전망
第2会议: 如何形成协助的地区秩序: 课题与展望

• 발표1 / 发表1

미중-신형대국관계 평가와 전망

신성호 (서울대)

对美中新型大国关系的评价及其前景展望

辛星昊 (首尔大学 国际大学院)

• 발표2 / 发表2

中国朝鲜半岛政策有关焦点问题的解析

曹世功 (中国国际问题研究基金会)

중국의 한반도정책 관련 중요문제 분석

차오스공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

• 발표3 / 发表3

朝鲜半岛信任进程: 认识与展望

韩献栋 (中国政法大学)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센둥 (중국정법대학)

미중-신형대국관계 평가와 전망

신성호 (서울대)

1.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전개

1) 중국의 제안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는 2012년 2월 방미 중 당시 국가부주석이었던 시진핑(習近平)이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형대국관계의 기본 내용은 2011년 1월에 후진타오(戴秉國) 당시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상호 존중, 상호 이익 및 공동 승리의 협력동반자관계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표현에서 이미 제기되었다.¹⁾ 2012년 2월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은 미국을 방문하여 “21세기 새로운 유형의 강대국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형대국관계의 구체적 내용으로 4가지 방법 제시했다. 첫째, 상호이해증진과 전략적 신뢰구축, 둘째,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 사안에 대한 존중, 셋째, 호혜공영을 위한 노력, 넷째, 국제 및 지구적 사안에 대한 부단한 조정 및 협력 강화를 들었다.²⁾

2012년 5월 3일 제 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개막식에서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모두 협력동반자관계를 증진시켜 양국 인민과 전 세계 인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강대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불신과 경쟁으로 점철된 과거 강대국 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창조적인 사고와 구체적

1) 조영남,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전망: 중국공산당 제 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2호 (2013년 여름) p. 218

2) “Speech by Vice President Xi Jinping at Welcoming Luncheon Hosted by Friendly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February 15, 2012),” February 15, 2012. <http://www.chinausfocus.com/library/government-resources/chinese-resources/remarks/speech-by-vice-president-xi-jinping-at-welcoming-luncheon-hosted-by-friendly-organizations-in-the-united-states-february-15-20> (검색일: 2014년 5월 13일)

조치를 통해서 강대국들은 대립과 갈등국면에 들어서게 마련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은 틀렸으며 경제 세계화 시기에 강대국 간 새로운 유형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 같은 날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또한 역사의 “비극적 교훈”에 주목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유형의 강대국 관계” 수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후 주석은 첫째, 혁신사고, 둘째, 상호신임, 셋째, 평등한 상호 이해, 넷째, 적극 행동, 다섯째, 돈독한 우의의 다섯가지 정신을 제안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2012년 6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중국의 구상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안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했다. (1)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고위급 전략적 소통 강화, (2) 무역, 투자, 법, 교육, 과학 기술과 같은 기존 분야에서 윈-윈(win-win) 협력 관계의 심화와 에너지, 환경, 인프라 구축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추구, (3) “양국간 차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외부요인의 개입을 최소화, (4) 지구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책임분담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건강한 상호작용” 유지를 제시하였다.⁴⁾

그 후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고위급 관료들의 언급이 계속되었다.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차이잉팅(蔡英挺)이 2012년 8월 방미 당시 “미국과의 신형 군사관계”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으며, 2012년 9월 18일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은 파네타 미국방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통령이 미중간 새로운 유형의 강대국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중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평등, 호혜, 협력에 기반한 군사 관계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⁵⁾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간 신형대국관계의 수립을 재차 강조하고 그 의미를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했다.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시진핑은 (1) 불충돌(不衝突), 불대항(不對抗). 즉, 쌍방의 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파트너관계를 유지하며 적대시하지 않는다. 대항 또는 충돌하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 문제점과 차이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나간다는 의미이다. (2) 상호존중(相互尊重). 이는 각자의 발전경로를 존중하고, 핵심이익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존중함을 의미

한다. (3) 협력과 윈-윈(合作共贏)하는 관계의 형성이다. 이는 제로섬적인 사고를 탈피하여 이익 추구시 타방의 이익도 고려함으로써 상호이익이 융화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구체적 방법으로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은 (1) 양국간 대화와 상호신뢰의 수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 이를 위해 G20, APEC 등 다자회의에서 양국 정상간의 대화를 기제화하고 현존하는 약 90여개의 정부간 대화 채널을 충분히 이용할 것, (2) 실리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국면을 열 것. 이를 위해 미국정부는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의 수출통제를 완화하고 양자간 무역과 투자를 개선해야 함. (3) 강대국간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울 것. 이를 위해 한반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지구적 대립사안(hotspot issue)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초국경범죄, 평화유지활동, 재난구호,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와 우주 안보와 같은 사안에서 공조해야함. (4) 상호 이견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미중 신형대국관계에 걸맞는 신형군사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⁷⁾

2013년 9월 20일 왕이 외교부장은 신형대국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보다 공고한 기반을 토대로 이러한 신형대국관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략적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다 공유된 이익을 토대로 이러한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더욱 공고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공동책임을 토대로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및 지역 분쟁 및 지구적 사안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이 지역에서 신형관계를 수립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신형대국관계의 시험대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미중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각자가 갖는 이익과 관심사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사안과 관련하여 실질적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⁸⁾

3) Promote Win-Win Cooperation and Build a New Type of Relations Between Major Countries by Hu Jintao,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Opening Session of the Fourth Round of The China-US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s, 2012년 5월 3일. http://www.fmprc.gov.cn/mta_eng/wjdt_665385/zyjh_665391/19313 (검색일: 2014년 5월 13일)

4) “Chinese, U.S. presidents meet on bilateral ties,” 신화통신, 2012년 6월 20일.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2-06/20/c_131664190.htm (검색일: 2014년 5월 13일)

5) 2012년 7월에 추이텐카이와 팡항자오가 발표한 “새로운 시대의 중국 외교 전반 속의 미중관계: 중국과 미국의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중국 외교전략의 중심적인 목표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주권, 국가 안보,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평화롭고 우호적인 외부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며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자 필수요건”이라고 평가했다.

6) “习近平概括中美新型大国关系,” 신화통신, 2013년 6월 10일.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6/10/c_116107914.htm (검색일: 2014년 5월 13일)

7) “Xi-Obama summit opens new chapter in trans-Pacific cooperation,” 신화통신, 2013년 6월 9일.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3-06/09/c_132444094_2.htm (검색일: 2014년 5월 13일)

2013년 6월 14일 당시 주미 중국대사였던 추이텐카이(崔天凱)는 6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새로운 유형의 강대국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미중관계의 목표이자 발전방향으로 설정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추이텐카이는 신형대국관계가 단순한 표어가 아닌 미중 양국이 공동으로 분담해야하는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8) “Toward a New Model of Major-Country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peech by Foreign Minister Wang Yi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20 September 2013. <http://www.brookings.edu/~media/events/2013/9/20%20us%20china%20foreign%20minister%20wang%20yi/wang%20yi%20english%20prepared%20remarks.pdf> (검색일: 2014년 5월 13일)

2)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미국의 반응

미중이 갈등과 대결보다는 협력과 상호 공동번영에 노력해야 된다는 신형대국관계의 기본정신은 오바마 행정부 역시 출범초기부터 강조한 내용이다. 2009년 국무장관에 취임한 직후 클린턴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전의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넘어,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 위협이라는 견해를 일축하고 양자간의 공동 관심과 기회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의 관계를 추구하는 중국과의 긍정적 관계 설정이 미국의 미래 평화와 번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⁹⁾ 곧이어 2009년 2월 중국을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에너지 환경분야의 공동노력, 6자회담을 포함한 안보 협력의 세 가지 주 협력 분야를 제시한다. 또한 양국간 외무 및 재무 장관이 함께하는 경제안보 전략대화 개최를 제안한다.¹⁰⁾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미중 양국내부에 존재하는 대중국봉쇄론과 중국위협론의 불신이 있음을 직시하면서, 그러나 미중 지도부는 이러한 대결론과 부정적 시각에 반대하며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게 새로운 기회이며 보다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7월에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양국 외무/재무 장관간의 4자 전략대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미중간의 양자관계가 21세기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규정하면서, 양국과 세계의 공동번영을 위해 첫째, 경제, 둘째, 에너지, 셋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넷째, 과격분자, 해적, 전염병 등을 포함한 초국경 위협 대처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할 것을 제시한다.¹¹⁾

2011년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21세기 미중관계의 3요소로 아태지역차원에서의 신뢰와, 미중양자간 신뢰,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공동노력을 제시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북핵문제 해결에 미중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¹²⁾ 2012년 3월 에도 힐러리 장관은 기존 강대국이 신흥부상국과 조우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을 지적하고 미국은 미국 리더십의 유지 및 확보하면서 지구적 안보, 안정, 번영에 적극적 기여자로서 신흥부상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9) Hillary Clinton, "U.S.-Asia Relations: Indispensable to Our Future," Remarks at the Asia Society, New York, (February 13, 2009) <http://www.state.gov/secretary/20092013clinton/rm/2009a/02/117333.htm> (검색일: 2014. 2. 18)

10) Hillary Rodham Clinton, "Toward a Deeper and Broader Relationship With China: Remarks with Chinese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Beijing, China February 21, 2009 <http://www.chinausfocus.com/print/?id=6942>

11) Barack Obama,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Ronald Reagan Building and International Trade Center Washington, D.C., (July 27,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the-President-at-the-US/China-Strategic-and-Economic-Dialogue (검색일: 2014. 2. 18)

12) Hillary Clinton, "Inaugural Richard C. Holbrooke Lecture on a Broad Vision of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Benjamin Franklin Room, Washington, DC (January 14, 2011), <http://m.state.gov/md154653.htm> (검색일: 2014. 2. 19)

“우리는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안정적이고 상호 수락가능한 균형을 이루는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고 밝혔다.¹³⁾

2013년 3월 11일 톰 도닐런 (Tom Donilon)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신흥강대국과 기존강대국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더 나은 결과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중국에게 달려있으며 시진핑과 오바마가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¹⁴⁾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강대국부상을 환영하며 이번 만남이 새로운 유형의 협력을 위한 공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¹⁵⁾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2기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수잔 라이스에 의해서 재차 확인된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2013년 11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중간 신흥 강대국 관계 수립을 위해 경쟁을 관리하고 공동의 이해에 깊은 협력관계를 수립할 것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이란핵문제, 수단분쟁 등에 협력할 것과 대해적 작전이나 해양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중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¹⁶⁾

2. 신형대국관계 분석 및 평가

첫째, 비록 오바마 행정부도 초기부터 미중간의 상호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신형대국관계라는 말 자체는 중국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종합국력의 상승에 따른 위상 변화에 따라 자국의 역할 및 미국과의 관계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이전에 비해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중국 지도부의 자신감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단순 개도국에서 책임강대국으로써의 중국의

13) Remarks at the U.S. Institute of Peace China Conference, Remarks by Hillary Rodham Clinton, Secretary of State, U.S. Institute of Peace, Washington, DC, March 7, 2012, <http://www.state.gov/secretary/20092013clinton/rm/2012/03/185402.htm> (검색일: 2014년 5월 13일)

14)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in 2013," Remarks By Tom Donilon,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President, The Asia Society, New York, New York, Monday, March 11, 2013,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3/11/remarks-tom-donilon-national-security-advisory-president-united-states-a> (검색일: 2014년 5월 13일)

15)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fore Bilateral Meeting," Sunnylands Retreat, Palm Springs, California, June 7, 2013,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7/remarks-president-obama-and-president-xi-jinping-peoples-republic-china> (검색일: 2014년 5월 13일)

16) Susan E. Rice, "America's Future in Asia" As Prepared for Delivery, Georgetown University, Gaston Hall, Washington, D.C. (November 20, 2013),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11/21/remarks-prepared-delivery-national-security-advisor-susan-e-rice> (검색일: 2014. 2. 19)

자기인식 변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부정적 시각 및 견제 타파의 필요성, 미국의 아시아 선회 (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 (rebalancing) 전략의 가시화에 대한 고차원적 대응,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둘째, 신형대국관계의 핵심은 중국의 부상이 패권국인 미국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세력전이와 패권전쟁으로 특징 지워지는 기존 대국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 미중관계가 신흥부상국과 기존 패권국 간의 세력전이의 양태를 띠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력전이가 이루어지던 역사적 관계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이 표방하는 신형대국관계에 ‘신형’인 측면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은 국제체제 및 질서의 변화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근대 외교사에서 19세기 말 프로이센,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 나폴레옹 체제 하의 프랑스, 20세기 초 중반의 소련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미중 신형대국관계가 특히 새로운 점은 미중 양국이 세력전이의 폭력적 함의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신흥부상국과 기존 패권국이 충돌하는 대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제를 확보해나가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격을 띠는 부분이 존재한다.¹⁷⁾ 신흥대국관계가 지향하는 궁극의 상태는 미소간 상호 불신이 관계의 중심이었던 냉전체제와 달리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¹⁸⁾ 제프리 베이더 (Jeffrey Bader)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신흥부상국에 대해 기존 강대국이 견제를 하던 형태에서 중첩되는 이해관계를 확대하고 충돌을 회피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개념’상 신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¹⁹⁾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형대국관계의 미래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 먼저 신형대국관계는 중국 정부가 최소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으며 대외전략과 관련한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신형대국관계가 표방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이 중국 정부로 하여금 상이한 상황과 대상을 목적으로 상이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

드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미국측에 존재한다.²⁰⁾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중국의 공식성명과 분석에서 신흥대국관계 하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형’ 관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미국 측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²¹⁾ 신흥대국관계의 범위와 구체적 의제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²²⁾

- 신형대국관계라는 구상이 과연 미중관계가 가지는 구조적 불신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신흥대국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시진핑은 불충돌 (不衝突) 및 불대항 (不對抗), 상호존중 (相互尊重), 협력과 윈-윈 (合作共贏)하는 관계의 형성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불충돌 및 불대항과 협력과 윈-윈 관계의 형성은 미중간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즉, 쌍방의 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불충돌 및 불대항과 제로섬적인 사고를 탈피하여 이익 추구 시 타방의 이익도 고려함으로써 상호이익이 융화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력과 윈-윈 (合作共贏) 관계의 형성의 경우 미중 양국간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정부간 대화채널을 확대 및 심화시킴으로써 양자간 전략적 의도에 대한 오관 및 오인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미중 양국간 존재하는 대다수의 상호 불신이 구조적 측면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신흥대국관계의 유효성이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다. 신흥강대국과 기존 패권국간 관계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불신까지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패권이라는 지위재 (positional goods)가 갖는 배타적 속성을 고려하면 기존 패권국인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의 인식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이익 추구 시 타방의 이익도 고려한다는 호혜공영구조의 형성은 미중간 중대한 이익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유의미한 제언이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미중간에 상호추구하는 바람직한 양자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존재하는지의 문제이다. ‘책임있는 이익상관자 (responsible stakeholder),’ ‘양강체제 (G2)’와 같이, 미중관계에 대한 정의는 주로 미국측으로부터 나왔다. 이와 달리, 신흥대국관계는

17) John Podesta, C. H. Tung, Samuel R. Berger, and Wang Jisi, "Toward a New Model of Major Power Relations," China US Focus, February 21, 2014. <http://www.chinausfocus.com/foreign-policy/towards-a-new-model-of-major-power-relations/> (검색일: 2014년 5월 7일)
 18) Brad Glosserman,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Hardly.", CSIS, June 10, 2013. <https://csis.org/files/publication/Pac1340.pdf> (검색일: 2014년 5월 7일)
 19) Jeffrey A. Bader, "2013 Barnett-Oksenberg Lecture on Sino-American Relations," Brookings Institute, May 14, 2013. <http://www.brookings.edu/research/speeches/2013/05/14-sino-american-relations-bader> (검색일: 2014년 5월 7일)

20) Caitlin Campbell and Craig Murray, "China Seeks a 'New Type of Major-Countr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search Backgrounder, June 25, 2013. http://origin.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China%20Seeks%20New%20Type%20of%20Major-Country%20Relationship%20with%20United%20States_Staff%20Research%20Backgrounder.pdf (검색일: 2014년 5월 13일)
 21) Ibid.
 22) Peter M. Cronin, "The Path to a New Type of Power Relations," CSIS, November 7, 2013. http://csis.org/files/publication/131108_Pac1380.pdf (검색일: 2014년 5월 7일)

중국정부가 주동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다. 2013년 6월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이 제시하는 신형대국관계의 개념과 미국의 구상 간에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국관계의 기초가 되는 상호핵심이익에 이해가 불충분하다. 시진핑 주석은 신형대국관계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호존중(相互尊重)을 내세웠고, 이는 각자의 발전경로, 핵심이익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이 내세우는 핵심이익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2009년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다이빙귀가 제시한 중국의 핵심이익은 국가 기본체제의 보호, 국가안보와 영토보전,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중국의 핵심이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달라이 라마, 남중국해 등 미국과 유관한 사안에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 상황 하²³⁾에서 미국이 신형대국관계에서 말하는 상호존중에 합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마이클 채스(Michael Chase)는 중국이 제시하는 신형대국관계가 상호 조정없이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⁴⁾ 또한 이는 중국이 존중해야 하는 미국의 “핵심이익”이 미국측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신형대국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²⁵⁾

- 한편,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성공은 미중 양자간의 문제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 특히 미국의 아시아 동맹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해친 적이 없으나 미국이 아시아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 인해 미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으로 신형대국관계의 성공 여부는 미국에게 달려있다는 시각이 중국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주창하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려 하는 노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나타나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포함한 아시아의 양자 동맹 강화 노력은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또한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냉전시기에 미국이 소련에 취한 정책으로 미루어 보아 어디까지나 미국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미화시키기 위해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중국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과 충돌했을 때 미국이 보인 행동들은 동아시아의 영토문제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공언이 얼마나 진실된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무조건적으로 중국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중국이 인지해야 하며, 굳건한 미중관계가 미국의 동맹관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것을 희망한다.

-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가 미국이 중국의 지위와 이익을 존중하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반면, 중국 스스로 강대국으로서 주어지는 국제무대에서의 해결사 및 중재자 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즉 중국이 미국의 양보와 존중을 요구하며 동등한 관계를 구축하려 하면서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즉 미중 신형대국관계는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공존에 관한 것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외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함께 국제 문제에 개입할 경우 국제사회의 원칙으로 인해 자신도 간섭 받을 것을 우려하기에 이를 미국이 잠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최근 중국정부는 신형대국관계를 미국을 넘어서 다른 주요 국가로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2012년 11월 8일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정치보고에서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은 “선진국과의 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키며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발전하는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 혹은 강대국 일반에 대해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목표가 바로 신형대국관계의 수립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중국이 강대국 외교영역에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미 모범적으로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했다고 한다. 2013년 3월 22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에도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상호 존중”하기로 하고, “쌍방은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한 역사적 경험과 실천에 기반을 두어” 세계 각국에 9개 항목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들 9개 항목은 신형대국관계가 추구하는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것,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동하여 각종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 경우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신형대국관계의 범위와 목표, 그 성격 등이 미중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혹은 기준은 무엇인지, 여전히 일관된 논리가 적용되는 지 등에 대한 여러가지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미중 신형대국관계 설정은 평등, 협력, 윈

23)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24) Michael Chase, China's Search for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China Brief, Vol. 12, issue 17 (September 7, 2012)
 25) Stephen Harner, "Clarity in Core Interests, a Must for "A New Type of Power Relations"," China US Focus, April 8, 2014.
<http://www.chinausfocus.com/foreign-policy/clarity-in-core-interests-a-must-for-a-new-type-of-great-power-relations/> (검색일: 2014년 5월 7일)

원에 기초한 미중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향후 미중관계의 구체적 발전과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간에는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활동 범위와 내용에 관해 전반적인 안보 전략 차원에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양국간에는 상호 협력의 분야와 내용이 증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제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중국도 이익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 국제정세와 더욱 직결됨에 따라 전과 같은 국제문제 해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기 힘들어지는 경향을 보인다.²⁶⁾ 예를 들면, 이란과 북핵 문제에 당면하여 중국이 최근에는 미국의 비핵화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양국간의 회담에서 늘 북핵 문제가 가장 주요한 화제거리 중 하나였으며 이 부문에서 더욱 긴밀한 협조가 기대된다. 기후이상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양국간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중국측에서 공동안보를 위해 국제법과 정의에 기반한 외교 정책 고안 의사 밝히고 있으며, 미중간 고위급 군 관계자 교류와 공식 대화 증가 등 군사협력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냉전체제하의 미국과 소련의 관계와는 달리 지금의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충돌을 피하고 협력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양국간 협력적인 신형대국관계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3. 신형대국관계와 한반도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주창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주변국과 한반도에 가진다.

첫째, 미국과 중국이 대결할 경우 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것을 우려하는 주변국에게 미중이 대결을 지양하고 상호존중과 공동이익, 협력을 강조하는 신형대국관계의 추구는 주변국의 미중선택 압박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둘째, 동시에 신형대국관계가 미중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강대국위주의 정치를 뜻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강대국 패권정치를 의미한다면 이는 주변국에게 새로운 불안 요소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18, 19세기 유럽의 전형적인 강대국 정치는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변 약소국의 운명이 타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바, 이것이 미중간에도 나타난다면 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중국이 상정하는 신형대국관계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미국이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미국이 용인하라는 요구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이 추구하는 핵심이익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변국의 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 즉 중국의 핵심이익이 중국고유의 주권과 영토를 넘어서 남중국해 9단선과 같은 주변국과의 분쟁지역과 다양한 이슈영역으로 확장될 것인지, 또 이에 대해 중국이 주변국의 주장에 대해 타협적인 입장을 취할 지 아니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지에 따라 주변국의 대응과 우려도 달라질 것이다.

넷째, 한반도의 경우 미중의 신형대국관계 추구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대결을 약화하고 공동으로 북핵문제나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남북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남북한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협의 없이 미중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남북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특정한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 많은 우려와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26) Bader, 2013

对美中新型大国关系的评价及其前景展望

辛星昊 (首尔大学 国际大学院)

时任中国国家副主席的习近平于2012年2月访美期间，正式提出要建立“新型大国关系”以来，“新型大国关系”开始受到多方的关注。时任国家主席胡锦涛也在2012年5月3日举行的“第四轮美中战略经济对话”(S&ED)会议的开幕式中，主张“中美双方都应该坚定推进合作伙伴关系建设，努力发展让两国人民放心，让各国人民安心的‘新型大国关系’”，并明确指出这一新型关系不同于过去充满不信任和竞争的大国关系。2013年6月，国家主席习近平在加利福尼亚举行的美中元首会晤中，再次强调中美之间要建立新型大国关系，并提出这一关系具有如下三点内涵：一是不冲突、不对抗；二是相互尊重；三是合作共赢。

新型大国关系的基本精神，即美中需要致力于相互合作与共同繁荣，而非冲突与对立，也是奥巴马政府在执政之初就强调的内容。2009年希拉里出任国务卿后不久就提出，美中要超越以往的竞争与合作的关系，克服中国的崛起会威胁美国的看法，构建双方共同的关心领域和共享机会，符合双方共同的利益，并强调致力于发展与中国的积极关系，对未来美国的和平与繁荣至关重要。奥巴马总统也明确指出，中美两国社会中存在着中国封锁论与中国威胁论等担忧，但美中政府反对这种对立和消极的视角，认为中国的发展对美国是新的机遇，主张美中双方应该为建设更光明的未来共同努力。

对新型大国关系，有如下几点评价。第一，这是由中国政府先提出的，这一点既体现了正在崛起的中国的自信心，同时也反映出中方重新定位中美关系的需要。第二，其核心内容是，避免过去那种势力转移造成的霸权战争，建立和平的关系。第三，即便如此，还是有很多人就新型大国关系具体内容的模糊性、美中之间的结构性利益冲突、缺乏对美中双方未来关系的共识、对其东亚政策的怀疑、新型大国关系的扩张性等问题提出了质疑。最后，从今后的前景来看，目前美中新型大国关系的设

定，仅仅提出了基于平等、合作、共赢的发展方向，而其具体的内容取决于今后美中关系的具体发展过程。

美中新型大国关系的形成对周边国家和朝鲜半岛的意义在于美中的和平合作会对那些想要与美中两国维持友好关系的周边国家产生积极的影响。但同时也存在一些顾虑，担心这一关系会转变为无视弱小国家利益的传统强国政治，在这一问题上，主要是对中国所追求的核心利益的内容和方式提出了质疑。从朝鲜半岛的角度来说，既希望美中合作会对包括朝鲜核问题在内的朝鲜半岛问题的和平解决发挥积极的影响，同时也要求美中两国要紧密地与朝鲜和韩国这两个当事国协商和合作。

中国朝鲜半岛政策有关焦点问题的解析

曹世功 (中国国际问题研究基金会)

1、引言

无论从历史还是现实的角度观察，中国与朝鲜半岛都是一种宿命的命运共同体的关系。中国的安危、发展离不开朝鲜半岛的和平稳定，同时，中国的朝鲜半岛战政策又直接影响半岛局势走向。冷战结束后，中国与朝鲜半岛之间的这种相互依赖、交互影响的关系没有改变，反而进一步强化。中国的快速发展一方面提升了对朝鲜半岛的影响力，另一方面它对朝鲜半岛和平稳定的要求也更高、更为迫切；与此同时，朝鲜半岛内部嬗变与外部介入相互作用，导致半岛形势更加复杂多变，维护半岛和平稳定的难度增大。在这种形势下，国际社会普遍关注中国的朝鲜半岛政策理所当然。

历经冷战到后冷战的长期国际风云变幻，中国已经形成一整套系统的对朝鲜半岛政策。其内涵可以概括为：1、抓住一个“纲”：以保持朝鲜半岛和平稳定作为基本准则；2、处理好两大关系：努力发展中朝睦邻友好关系与中韩全面战略合作伙伴关系，积极支持朝韩通过对话解决争端，缓和紧张对立；3、解决一个重大悬案：努力实现半岛无核化，坚定维护半岛和平稳定，坚持通过和平方式解决问题；4、支持完成半岛统一大业：主张朝韩缓和、和解，在发展交流合作、不断积累信任的基础上，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5、坚持一个立场：国际社会特别是有关国家要共同致力于缓和局势、维护半岛和平稳定并为南北方最终实现统一创造有利条件。

中国朝鲜半岛政策在国际上已得到越来越广泛的理解、认同和支持，但同时也存在着种种误解、疑虑，以至于歪曲和妄测。一个时期来，国内外对中国朝鲜半岛政策议论纷纭，莫衷一是。焦点问题一是中国半岛无核化政策是否发生根本转变，二是中

国对朝政策能否由“助朝”走向“弃朝”，二是中国是否支持朝鲜半岛实现统一。问题涵盖中国朝鲜半岛政策的主要方面及核心，关系到对能否全面、客观、准确地认知和把握中国朝鲜半岛政策以及判断其未来走向，有必要认真辨明。

本文试图对上述三个焦点问题进行探析和梳理，以期得出正确结论，对学界正确认识和把握中国的朝鲜半岛政策有所裨益。

2、对中国半岛政策的理解和把握

一个时期来，国内外指责中国朝鲜半岛政策“僵化”和判断其已发生“根本性改变”的声音同时存在，反映了对中国半岛政策认识的矛盾、混乱状态。

毫无疑问，在半岛政策上“天不变，道亦不变”的僵化观念是错误的。中国朝鲜半岛政策是从国家根本利益、总体外交战略出发，根据国际局势和半岛形势变化制定出来的，为履行服从和服务国家安全、稳定和发展大局的根本宗旨，与时俱进、创新进取是必须条件和起码要求，准确判断国际局势和半岛形势，及时调整政策、以变应变、掌握主动是应有之义。

事实上，中国对半岛政策从来就不是僵死不变的，它经历过许多次大大小小的调整，那种认为中国对半岛政策僵化的看法不符合实际。

冷战时代，中国的半岛政策比较单纯，概括起来就是：依托社会主义阵营，联合朝鲜共同反对和抵御美帝和“南朝鲜仆从”的战争图谋，维护半岛和平，保障国家安全和社会主义建设。在中韩处于对立隔绝状态的情况下，处理对朝关系构成中国对半岛政策的主要方面，中国对朝鲜半岛政策变化也主要从对朝政策上反映出来。

冷战时代的中朝关系既有“蜜月期”，也存在矛盾和摩擦，中国对朝基本政策未变，但政策微调不断进行。其中既包括中苏交恶时期的对朝政策调整，也包括文革结束后清算“极左”影响、修补和改善中朝疏远关系。冷战终结、东西阵营对抗结束后，随着苏联东欧剧变和中国实行改革开放，中国对半岛政策进行了有史以来最大一次调整，即做出中韩建交的重大决策，由冷战时代长期坚持的对朝“一边倒”、对韩对峙、对立，转变为与南北方并行发展友好合作关系。这次大幅度的政策调整，极大改变了朝鲜半岛冷战时期形成并固化了的版图，不但给中韩两国带来看得见的实

际利益，对促进半岛及东北亚和平稳定也做出积极贡献，中韩建交决策的必要性和正确性应当充分肯定。但同时也无可否认，中韩建交不可避免地给朝鲜造成巨大困难和冲击，成为朝选择孤立、冒险政策的外部促因之一，其负面影响迄今仍在延续，这可以说是中国为此次政策转变付出的代价。

在中韩建交的新形势下，中朝基本关系设定和交往方式不可避免地要发生变化。冷战时期中国那种对朝出自意识形态连带性的无条件的政治声援、外交支持、经济援助已不可持续，构建中朝不以意识形态划线、以客观是非曲直为标准处理双边事务、睦邻友好及互惠互利的国家关系，成为必然要求。这也就是所谓“正常国家关系”。2000年5月，金正日接掌最高权力后首次访华时，接受了中方提出的“继承传统，面向未来，睦邻友好，加强合作”的新时期中朝关系发展的方针；2006年1月，金正日再次访华时，中方又提出规范、促进两国经贸合作关系发展的新方针“政府引导，企业为主，市场运作”，这些都是构建中朝“正常国家关系”的重要政策举措。

90年代初朝核问题的出现，对维护半岛及区内和平稳定提出了新的严峻挑战，对朝核问题政策在中国半岛政策中上升到重要位置。中国旗帜鲜明地主张和支持半岛无核化，提出以“实现半岛无核化，维护半岛和平稳定，通过对话和平解决问题”的基本方针，推动建立了六方会谈机制并积极展开斡旋外交。2006年10月，朝鲜悍然进行第一次核试，此举严重损害中国国家利益，威胁半岛和地区和平稳定，遭到中国强烈反对和谴责，朝鲜试图拥核成为损伤和制约中朝关系发展的重要因素。中国立足大局和长远，在积极推动半岛无核化进程的同时，维护、发展中朝睦邻友好关系的基本方针没有动摇。

2008年9月，随着金正日健康恶化，朝鲜进入新一轮权力交接期，中朝关系发展面临新的复杂形势。2009年5月朝不顾中国和国际社会反对进行了第二次核试，中国立足阻止朝鲜核武装、维护半岛及地区和平稳定的大局，支持并加入对朝制裁行列。另一方面，朝鲜国际孤立加深，经济民生持续，适逢政权交接特殊时期，保持政局和社会稳定变为头等紧迫问题。基于“朝鲜成为半岛和地区局势最为薄弱环节”的判断，为防止出现动荡和动乱事态，中国实际上采取了无核化与“助朝稳定”并行方针。中国支持并参与对朝制裁，但手下留情，反对把朝逼上死路；中国警惕“政权更迭”图谋把局势搞乱，通过推进经济交流合作加大了对朝支援力度，正是在这一时期，中国成为朝第一位贸易对象国和投资来源国，对金正恩平稳接班提供了重要支撑。

2013年2月，金正恩执政后朝鲜进行了第三次核试，标志着朝在固化“有核国家”地位和推进核弹小型化、精密化、实战化方面的努力进入关键阶段，半岛无核化目标

面临成败存亡的考验。在这种严峻形势下，中国新一届政府处理朝核问题的政策不得不进一步转变。

中国针对朝鲜第三次核试的政策调整主要表现在以下方面：第一、向国际社会高调宣布绝不容许朝鲜拥核，绝不容许在中国家门口生乱生事，并在中朝没有高层互访计划情况下宣布习近平主席年内访韩日程，以此加大对朝政治、外交压力。第二、将“维护半岛和平稳定，实现半岛无核化，以和平方式解决问题”的政策表述，改变为“坚定实现半岛无核化，坚定维护半岛和平稳定，坚持以和平方式解决问题”，突出强调了无核化的重要地位，宣示实现半岛无核化和维护半岛和平稳定的坚定决心。第三、中国更加认真地落实联合国通过对朝制裁决议，在金融渠道监控、核导弹开发相关物资禁运方面采取了进一步的举措等。受形势影响，中朝大型合作项目进展也已放慢。第四、中国进一步强化了国际合作力度，中韩美三国沟通、协调与合作出现紧密化、机制化趋势，这是最引人瞩目、最给力的一招。

朝鲜第四次核试验将对中国对朝政策和中朝关系提出新的挑战。可以预见，由于实现半岛无核化是维护半岛与地区和平稳定的前提条件，是中国安全、稳定、发展利益之所在，中国实现半岛无核化的立场不会动摇，只会更加坚定；中国将会更加积极支持和参与联合国新的对朝制裁，切实、有效地落实制裁决议；努力强化半岛无核化国际阵线，形成和加强联合促朝弃核的合力；积极动员各种可能的手段和方式，牵制、阻止朝的核武装计划。与此同时，中国坚持半岛无核化、维护半岛和平稳定、通过对话和平解决问题的“三位一体”的基本原则，坚守不许动武、不搞朝鲜“政权更迭”的底线，全力阻止半岛生战、生乱。

实践证明，中国的朝鲜半岛政策从基本准则到各方面的具体政策都是正确的，它对贯彻国家总体外交政策，缔造和平稳定周边环境，保障改革开放和稳定发展，发挥了应有作用。另一方面也应看到，在部门具体政策的调整和实施过程中，还存在着某一时期形势估计有误，仍受到传统和意识形态干扰、影响，对错误行为投鼠忌器、忍让有余等缺陷。中国新一届政府在弥补对半岛政策短板上已经采取明显动作。从长远看，如何适应形势，提升在半岛的战略影响力，更有效地维护半岛及地区和平稳定大局，仍是今后中国朝鲜半岛政策有待着力解决的课题

3、“弃朝”不会成为中国政策选项

一个时期来，在中国国内“弃朝论”的声音高涨，“弃朝论”队伍中既有“公知”，也有专家、学者，甚至包括党政机关人员；“弃朝论”的主张经过互联网放大、扩散，出现热点化趋势，引起很大国际反响。一些国家著名智囊机构和专家学者判断，中国对朝政策行将发生根本改变，朝鲜半岛及东北亚国际政治将重新洗牌。

在“弃朝论”的主要依据中，引用西方和韩国媒体“妖魔化”朝鲜的一些“事实”占很大比重，其“弃朝”理由归纳起来主要是：1、朝鲜拥核并频频进行武力挑衅，严重威胁半岛及地区和平稳定，损害中国国家利益，已经成为“战略负资产”。2、朝鲜实行封建“世袭制”，实行独裁统治，拒绝改革开放，榨取中国经济援助并且贪得无厌、恩将仇报，在政治经济上已成“沉重包袱”。3、在冷战结束、中韩建交、中美发展“新型大国关系”的情况下，朝鲜的“战略屏障”作用已经消失，中国对朝已无所借重。

“弃朝论”凭借一些似是而非的“事实”并拿“国家根本利益”说事，因而貌似有理并有一定迷惑力，但是，实行“弃朝”政策的结果必然是将朝鲜化友为敌，其根本要害是背离半岛国际政治的客观实际，违背中国国家发展战略及总体外交战略，照着实行只能带来破坏半岛和平稳定、危害国家根本利益的结果。

中国不但不能按照“弃朝论”者的荒谬主张将朝鲜当成“抛弃”对象，反而要把巩固、发展中朝关系作为长期坚持的战略方针，其理由主要是：

1、中国周边外交战略的必然要求。朝鲜是与中国有着漫长共同边界的重要周边国家，为构建、巩固和发展中朝传统友好关系中国花费巨大代价，付出了数十万优秀儿女的献血和生命，这笔战略资产不容许轻易付之东流。2003年12月，中共十六大提出“与邻为善，以邻为伴”的周边外交方针，把“睦邻，安邻，富邻”作为自身发展战略的组成部分。中国新一届政府把周边外交置于外交全局的更加突出的重要位置，坚持与邻为善、以邻为伴，巩固睦邻友好，深化互利合作，努力使自身发展更好惠及周边国家的方针。既然朝鲜是周边国家一员，中国周边外交方针理所当然地适用于朝鲜。中国能同美国搞友好合作，能同美国的盟友韩国不断深化战略合作伙伴关系，对老朋友朝鲜却要弃之若敝履，完全是语不成说。如果按照“弃朝论”把朝鲜排除在“睦邻，安邻，富邻”对象之外，把一个传统友好邻邦变成势不两立的敌人，这不单单意味着中国周边外交的重大失败，也会带来难以估量的政治风险和安全危害，这是

绝对不能容许的。

2、朝鲜的重要地缘政治价值犹在。冷战结束、中韩建交、中美发展友好合作和“新型大国关系”等因素，使朝鲜的“战略屏障”作用同冷战时代相比确有某种变化，但绝不能因此就把朝鲜视为地缘政治的“鸡肋”。常识告诉我们，在现今的国际政治“场”中，地缘政治概念并未过时，特别是只要美国仍把美韩、美日同盟视为重返亚洲的战略支点并在两国重兵把持，朝鲜对于中国就仍旧是处于地缘政治前沿的一道屏障，对此必须始终保持清醒认识，绝不可“书生气”和“妇人之见”，绝不能被人忽悠。

3、维护本地区战略均势必不可少。保持战略均势是维护半岛核地区和平稳定的重要条件，一旦半岛的战略平衡被打破，战争危险增大即不可避免。在朝韩对立架构中，韩国经济实力居于绝对优势，军事现代化水平总体高于朝鲜，并有韩美同盟和美日韩合作体制支撑，在综合实力对比中朝鲜明显处于劣势，在某种程度上可以说中朝关系发展是朝安全感的重要来源。倘若中国“弃朝”，必然加剧朝的孤立感、危机感乃至绝望感，势必加紧核武装进程，半岛无核化将彻底无望；同时朝为绝途求生，很可能铤而走险，冲突和战争的几率将陡然上升，半岛及地区和平稳定就会化为泡影。

4、同时交好朝韩最符合中国利益。中韩建交后，中国朝鲜半岛政策的最大变化是由单一经营对朝关系，转变为发展中朝睦邻友好关系与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同时并行，实践证明，这一举措拓宽了中国半岛外交的运作空间，提高了在半岛的发言权和影响力，有利于促进朝韩缓和、和解与对话、合作，有助于维护半岛和平稳定。一旦走上“弃朝”道路，中国同时交好朝韩的外交架构即会宣告坍塌，不但中国将失去对朝韩“双轮外交”的所有利益，而且如果朝鲜选择投靠美国，采取“联美反华”政策，中国周边安全环境将大大恶化。

当然，国与国发展关系是相互的，也是有原则的，核心一点就是要做到互尊、互助、互利。中国在政治上尊重朝鲜的制度及其所选择的发展道路，在安全上理解、支持其正当的利益诉求，在经济上提供力所能及的帮助，这一点始终没有改变。但是发展中朝友好合作关系是双方的事，倘若朝鲜不加珍惜，违背互尊、互助、互利原则，无视中国国家利益肆意妄为，错误地认为它无论怎样做中国都会顺着它，那就大错特错，不能姑息迁就。政策上该“变调”就得“变调”，该“变脸”就得“变脸”，必要时还要适当敲打。但是，这样做的出发点绝不是要与朝为敌，而是促其自省悔悟，回到正确立场，维系、发展两国正常关系，维护半岛及地区和平稳定大局。

4、为中国半岛统一问题的立场“正名”

今年年初，朴槿惠总统就统一问题发表谈话，紧接着公布了建立由总统牵头的“统一准备委员会”的决定；3月，朴槿惠总统提出“统一大发”论，这一连串举动在韩国掀起了一股“统一热”，引起国际社会的注意。由于周边国家支持是实现统一必不可少的外部条件，中国对半岛统一的态度也连带地成为关注焦点。

长期以来，在半岛统一问题上，所谓中国“消极论”、“排斥论”、“维持现状论”等看法一直存在，此次随着韩国新的“统一热”的升温，揣测、质疑以至曲解、指责中国半岛统一政策的声音也水涨船高。

问题的根源在于对中国的半岛统一政策缺乏了解和理解，主要责任不在韩国国民，而在中国自身，因为有针对性的宣传、解释工作未被重视也没有做好，而这恰恰是“公共外交”、“预防外交”的分内之事。

客观、公正地说，中国其实是半岛周边国家中最能正面看待和最真诚支持南北统一的国家。半岛统一后，美国在半岛继续驻军及韩美同盟的前途成为疑问，这是美的一块“心病”，是它不可能真心支持南北统一的根本原因。半岛出现一个人口超过七千万的统一、强盛的国家，对日本意味着压力和威胁增大，这决定了日不可能成为半岛统一的正能量。俄罗斯不会排斥半岛统一，但它也不在发挥主要作用的位置。唯有中国才是真正支持半岛统一的关键力量。

中国对半岛统一的立场和态度是明确的，也是一贯的。1992年8月的中韩建交联合公报载明：中国政府“尊重朝鲜民族早日实现朝鲜半岛和平统一的愿望，并支持由朝鲜民族自己来实现朝鲜半岛的和平统一”。此后，从卢泰愚到金大中、卢武铉、李明博等历届总统，在同中国国家领导人举行会谈时，中方都毫无例外地一再重申“支持朝鲜南北双方通过对话协商改善关系，最终实现和平统一”。2013年5月朴槿惠总统访华，习近平主席在首脑会谈时再次强调，中国“支持南北方改善关系，实现和解合作，最终实现和平统一”。中国国家领导人这些庄严承诺，是中国政府坚定支持半岛统一的最有力、最可靠的证明。

中国支持半岛统一既是出于道义和原则的坚守，也是出自国家和地区利益的考虑，是“义”和“利”的统一。如果说半岛统一对南北方是“大发”的机遇，对中国则可以说是“大利”的机会。中国支持半岛统一的理由可以做如下的归纳概括。

第一、支持半岛统一是道义的要求。中国外交强调正确的“义利观”，重视道

义，主持正义，主张“己所不欲勿施于人”。大国之间的势力争夺和冷战造成并加深了半岛分裂，给朝鲜民族带来长期的巨大牺牲、灾难和痛苦；中国与半岛南北方同属分裂国家，对此感同身受。中国作为社会主义国家，支持别国的民族统一是起码的道义要求；同时，中国自己不愿意分裂，也不能希望别国保持分裂，这也是起码的道理。如果中国排斥、阻挠别国统一，那就是在道义和政治上输了理，不但理应受到国际社会的谴责，同时也必然会遭到中国人民的唾弃。

第二、半岛统一最符合中国的外交、安全利益。在南北分裂、对立状态下，中国需要同时处理好同朝韩两个双边关系，为维持势力均衡，维护半岛和平稳定，更需两面斡旋、劝和促谈，耗费巨大精力和外交资源；如果只面对一个统一的半岛国家，“双面外交”局面即可结束。统一后的半岛国家面临稳定、发展的主要课题，有可能对中国采取更加友好的政策，这对中国外交也是利好。特别是在分裂状态下，南北体制竞争和统一主导权争夺你死我活，具有“零和”性质，加上复杂大国因素，把半岛变成随时可能爆炸的火药桶，给中国周边安全造成长期的严重威胁和沉重压力。半岛实现统一将把中国从这种不利状态中一劳永逸地解脱出来，这是中国最大的战略收获。

第三、半岛统一给中国经济带来新的发展机遇。统一后，北方经济重建和国家均衡发展提上日程，这将会给中国推进对半岛的经济交流合作提供新的机会。从长远看，统一后的半岛国家实行市场经济和开放的经济体制，南方的技术、资金等综合优势同北方的劳动力、资源优势相结合，将会大大促进半岛经济开发进程，形成强盛的半岛新经济体，中国凭借紧邻半岛的地理优势，有可能优先享受其溢出效应，有利于带动东北三省的经济加快攀登新的台阶。同时，半岛统一还有助于消除区域经济合作的梗阻，有利于加速构建东北亚经济合作体的条件走向成熟，这显然符合中国东亚经济合作的总体战略。

中国支持半岛统一的立场是明确和坚定的，但同时它也不是盲目和无原则的，并非无论什么样的统一都照单接受，因为统一事业的艰巨性、统一过程的复杂性以及统一之后的不确定性，决定了不是任何统一都符合有利于本地区和区内各国和平、稳定与发展、繁荣的根本宗旨。笔者认为，中国半岛统一政策的原则性主要体现为三点：

一是主张确保统一的自主性。半岛分裂局面是在有关大国追求自身私利、违背半岛人民的意愿的情况下造成的，历史证明，外部势力主宰和干涉，只能给半岛带来牺牲、痛苦和灾难，这一惨痛教训在半岛统一过程中应当牢牢汲取，绝不能任其重演。南北双方是朝鲜半岛的主人和统一的主体，半岛统一必须在排除外来干涉的条件下，按照南北双方人民的意愿自主地实现，这是一项不可动摇的基本原则。尽管必须承

认，半岛统一事关有关国家切身利益，实现统一应考虑这些国家的合理意见，但这绝不意味着容许外部势力的干涉和支配，有关国家必须切实尊重半岛人民的选择，真心为半岛统一创造外部条件。在统一问题上，应当坚定地实行半岛问题“半岛化”，排除半岛问题“国际化”。

二是主张坚持和平统一方式。同室操戈、骨肉相残的战争，只能把半岛推进万劫不复的灾难深渊，让朝鲜民族永久失去重生和自立于世界民族之林的能力，因此，实现和平统一是至高无上的要求，不能有丝毫动摇。“统一至上主义”，为了统一可以不择手段的想法和做法是完全错误的。南北方和平统一的基本内涵是：以和平方式实现统一并且保持统一进程的和平。为做到这一点，必须彻底排除武力方式，其中也包括使用武力胁迫手段。同时，由于“吸收统一”立足于对方政权、体制崩溃，实质是实行单方面吞并，必然引起强烈反对和拼死抵抗，很可能导致武力冲突和战争，因而在坚决反对和排斥之列。

三是主张采取稳步渐进做法。尽快结束分裂、实现统一是南北双方人民的共同意愿，因此，树立“不能久拖”的紧迫意识和“只争朝夕”的积极精神完全必要，中国多次表示过支持半岛“早日实现统一”也是这个道理。但是，“欲速则不达”。分裂的形成和持续历时漫长，积累的难题堆积如山，不可能朝夕之间一蹴而就。脱离客观实际的躁进情绪，可能导致形势误判和决策错误，不但于事无补，反倒会贻误大局，使统一目标更加遥远。因此，宁可慢些也不躁进是完全必要和正确的。

中国主张南北方要缓和和解，积累信任，在此基础上完成民族统一大业，其实质就是在统一问题上提倡尊重规律，立足现实，稳步渐进，从扎扎实实打基础做起，最终条件成熟时水到渠成地实现统一。中国反对武力统一和“吸收统一”，反对必然导致动乱、战乱的激进改变现状的做法，其出发点也正在这里。表面上看，中国的主张似乎“消极”，毫无大刀阔斧的快感，但从历史角度客观地看，中国的主张可以避免走“邪路”和“弯路”，实际上到达统一的路程是最短的，时间也是最快的。

衡量统一条件是否成熟的标准是南北人民是否形成共同的意愿。如果南北人民就统一的形式、方法和时间形成共同意愿，那就表明实现统一的时机来临。当统一时机来临时，中国会毫不迟疑地给以支持和协助，而不管统一是采取联邦制、邦联制还是其它什么形式；在统一条件尚不具备时，中国则坚决反对急进冒险。“维持现状”、“固定现状”的帽子扣不到中国头上。

韩国当前的“统一热”表露出明显的脱离现实的倾向，似乎统一哪一天会突然降临。韩国一些头脑冷静的有识之士指出，目前的“统一热”是建立在朝鲜“剧变论”

和“崩溃论”之上的，它带来的不会是“大发”，而是“大灾”。笔者认为，以朝鲜“剧变论”和“崩溃论”作为统一政策的根据是完全错误也是十分危险的。首先是因为，大量事实表明，朝鲜虽然国际上极为孤立，经济民生仍未脱困，存在着不稳定因素，但从总体上观察，朝政局稳定，民心求稳，不存在突发“剧变”和“崩溃”的可能性，期望统一突然从天而降，实际上是一种幻想。建立在幻想基础上的统一构想无异于沙上之塔。其次，“剧变论”和“崩溃论”必然引起朝鲜的高度警觉和强烈反对，加剧南北之间的不信任和对立、对抗，严重阻碍双方缓和、和解与交流合作，如果强行推进，不但半岛统一前景更加遥远，甚至可能导致冲突以至战争。这同韩国政府“半岛信任进程”的构想是背道而驰的。

四是主张统一有利区内各国。半岛统一应当有利于半岛及地区的和平稳定、发展繁荣，惠及区内各国，而不是相反。这就要求统一的半岛国家必须适应形势变化，处理好历史延续同与时俱进的关系，制定和实行正确的内外政策。其中最重要的是：不追求成为“有核国家”，不与特定国家结成军事同盟，奉行独立自主、和平友好的外交方针。对中国而言，从维护国家安全领土、主权的根本利益出发，必须要求统一的半岛国家适应半岛形势根本变化，恰当处理和解决驻韩美军问题；尊重中朝领土划分的历史和现实，不提出不正当领土要求，不在朝鲜族集居地区制造民族分裂麻烦。这一要求是合情合理的，一点都不过分。

无可否认，在社会和舆论日趋多元化的大背景下，中国内部确实存在着半岛统一“有害论”和“固定现状论”等消极、反对声音。这些反对舆论主要源自对统一半岛国家的政策取向不确定性和可能损害中国利益的担心，不是毫无根由地凭空产生的；反对舆论虽不可能改变国家半岛统一问题的决策，但毕竟会产生某种影响。消除中国国民对半岛统一的担心，是半岛南北方在构建统一外部环境时都必须侧重解决的重要课题。

5、结语

随着中国发展加快、影响力扩大，加上半岛无核化难度加大以及南北统一问题趋于“热点化”，中国朝鲜半岛政策的走向日益备受关注，它将会无数次地被放到国际社会的聚光镜和显微镜下，接受审视、检验和分析，这对中国既是必过的关口和考

验，更是让世界了解自己的机会。

中国的朝鲜半岛政策没有固定模板，难说完美无缺，也并非高深莫测，只要不戴有色眼镜，摆脱“国强必霸”等固定观念束缚，不难得出正确结论。中国对朝鲜半岛政策的鲜明特征一是“不变”与“应变”的统一，即：在维护半岛和平稳定的基本准则上守恒，部门政策和策略手段应势而变。二是“利益”与“道义”的统一，即：在以本国利益为出发点的同时，不忘国际公理、大国责任和友好情义。三是“利我”与“利人”的统一。即：以互利互惠为原则，做到我好、你好、大家都好。这是观察中国半岛政策的一条重要线索。

朝鲜拥核等棘手麻烦问题确实给中国造成沉重负担，但是，半岛和地区的基本格局没有变，朝鲜的地缘政治价值没有变，中国的国家利益也没有变，这决定了只要朝鲜不与中国为敌，中国“弃朝”就是一个伪命题。在“和平共处五项原则”下，从发展睦邻友好的愿望出发，通过沟通、磋商，必要时不排除严肃警告和适当施压，促进问题和分歧妥善解决，最终达到促进友好合作关系发展的目的，这是中国处理对朝关系的基本范式。

中国将坚持与半岛南北方并行发展友好合作关系的基本方针。结交新朋友、丢掉老朋友，不是中国外交风格。但是，“等距离外交”、“均衡外交”等提法并不恰当。因为“搞平衡”不是应有的外交原则，“等距离”和“均衡”在实践中也很难做到，硬要执意追求只能自缚手脚和受制于人。中国对朝韩外交应当从客观需要和务实原则出发并行推进，同时考虑中朝、中韩关系密切关联、交互影响的特点，努力做到统筹兼顾、两面照应、相互促进。

外界对中国半岛统一政策的担心可以理解，但完全没有必要。中国支持半岛统一具有深厚的历史、文化、道义、责任和利益根基，“国强必霸”的逻辑不适用于中国。但中国不是“统一至上主义”者，不会毫无原则底线，中国不支持破坏半岛和地区和平稳定、危害别国利益的急进统一方式，其中既包括武力统一、武力胁迫统一，也包括“吸收统一”。从本质和长远来看，这不是“排斥统一”、“固定现状”，而是对半岛统一的真正支持和促进。

当前朝鲜半岛形势依然十分严峻、复杂。冷战时代的遗产继续发酵，无核化前途面临严重挑战，南北对立紧张局面时而升温，促进半岛无核化，防止生战、生乱，维护和平稳定仍是主要矛盾和中心课题，这一点不能有丝毫动摇。有关各国要冷静判断形势，紧紧抓住这一中心，努力形成合力，坚持和探索正确的解决之道，不能心存旁骛、偏离中心，犯下历史性的错误。

중국의 한반도정책 관련 중요문제 분석

차오스공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

1. 들어가며

역사적 혹은 현실적 각도에서 보았을 때, 중국과 한반도는 일종의 숙명적인 운명공동체 관계이다. 중국의 안위, 발전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땀겨야 땀 수 없고, 동시에 중국의 한반도 전쟁 정책 역시 한반도 정세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냉전이 끝난 후, 중국과 한반도의 사이의 이러한 상호 의존, 상호 영향적 관계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중국의 빠른 발전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었고, 한편으로 그것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요구 역시 더욱 높이고, 더욱 절박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내부의 변화와 외부 개입은 서로 작용하여, 한반도 형세를 더욱 복잡 다변하게 만들었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그 난이도를 높이였다. 이러한 형세 아래에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긴 기간을 지나오며 국제사회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변하였고, 중국은 이미 체계적인 한반도 정책을 형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첫째, “중요한 부분”을 잘 잡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준칙으로 삼는다. 둘째, 양쪽 관계를 잘 처리한다. 북중 선린 우호 관계와 한중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긴장 대립을 완화하도록 적극 지지한다. 셋째, 중대한 현안을 해결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확고히 하고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균한다. 넷째, 한반도 통일 대업을 완성하도록 지지한다. 남북한 관계 완화, 화해를 주장하고 발전교류협작과 꾸준히 축적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최종적으로 자주 평화 통일을 실현하

게 한다. 다섯째, 하나의 입장을 견지한다. 국제사회 특히 관련 국가는 국면 완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남북한이 최종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도록 한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광범위한 이해, 인정 그리고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오해, 염려 심지어 왜곡과 억측도 존재한다. 한동안 국내외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의론이 분분하여,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중요문제 중 하나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둘째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돕는 것”에서 “북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셋째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 실현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이다. 이 문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주요한 방면과 핵심을 포함하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전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미래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변별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상술한 세 가지 중요문제에 대한 분석과 정리를 통해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여, 학계의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파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해와 파악

한동안 국내외에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교착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하고, 이미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소리가 동시에 존재했고, 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인식의 모순과 혼란상태를 반영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한반도 정책에서 “하늘이 변하지 않으면, 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天不變, 道亦不變)”와 같은 경직된 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 총체적인 외교전략에서 출발하여, 국제 정세와 한반도 형세 변화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국가안전, 안정 그리고 발전이라는 전반적인 국면에 복종하고 복무하는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자 최소한의 요구이다. 국제 정세와 한반도 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즉시 정책을 조정하여 변화에 응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본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 차례 온갖 종류의

조정을 겪은 것으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교착 상태에 놓였다는 관점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냉전시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교적 단순했다.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진영에 근거하여, 북한과 연합하여 함께 미제국주의와 “남조선 종속국”의 전쟁 도모를 반대, 저지하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한다. 중국과 남한의 대립 단절 상황에서, 대북관계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주요한 방면을 차지했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역시 주로 대북 정책에 반영되었다.

냉전시대 북중 관계는 “신혼기 (친밀한 시기)”이기도 했고, 모순과 마찰이 존재하기도 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변하지 않았지만, 정책이 계속 소폭 조정되었다. 그 중 중소 관계 악화시기에 대북 정책이 조정된 것도 포함되고, 문혁이 끝난 후 “극좌” 청산 영향으로 북한과 중국의 소원한 관계가 수정 및 개선된 것도 포함된다. 냉전이 종결되고 동서 대립이 끝난 후 소련과 동유럽이 극변하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유사 이래 크게 조정되었다. 한중수교 수립이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은 냉전시대 장기간 견지해 온 북한에 대한 “치우침”과 남한과의 대치, 대립에서 남북한 모두와 우호 협력 관계로 발전하도록 전환하게 했다. 이 큰 폭의 정책 조정은 냉전시대 한반도에 형성되고 고착된 정치 판도를 크게 변화시켰고, 한중 양국에 거시적 실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했다. 한중수교 정책 결정의 필요성과 정확성은 응당 충분히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한중수교가 북한에 매우 큰 곤란함과 충격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이 선택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해, 정책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중국이 이 정책 변화를 위해 치른 대가라고 말할 수 있다.

한중수교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기본 관계 설정과 교류 방식 역시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 냉전 시기 중국이 북한에 보인 이데올로기적 연대성에서의 무조건적인 정치 성원, 외교 지지, 경제 원조는 지속될 수 없었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아닌 객관적인 시비곡직의 표준을 수립하여 양쪽 사무를 처리하고, 선린우호와 상호 이익과 혜택을 주는 국가관계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정상 국가 관계”이다. 2000년 5월 김정일이 최고권력을 직접 장악한 후 처음 방중했을 때, 중국이 제안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라는 신시기 북중 관계 방침을 수락했다. 2006년 1월 김정일이 재차 방중했을 때, 중국 측은 또한 규범과 양국 무역 협력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정부가 이끌고, 기업을 위주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새로운 방침을 제안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북중 “정상 국가 관계”를 수립하는 중요한 정책 조치이다.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의 출현은 한반도와 지역 내 평화안정에 대하여 새로운 준엄한 도전을 낳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로 올라왔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지지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기본적인 방침을 내놓았고, 육자회담 기구 설립을 추진했고,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주선했다. 2006년 10월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시도했고, 이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많은 손해를 가져왔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협해 중국의 강렬한 반대와 비난을 낳았다. 북한의 핵보유 시도는 북중 관계의 발전에 손해를 입히고 제약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중국은 전반적인 정세와 시간의 흐름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였지만, 동시에 북중 선린 우호 관계의 유지 발전이라는 기본방침은 흔들리지 않았다.

2008년 9월, 김정일의 건강 악화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권력 교체기에 들어섰고, 북중 관계도 새로운 복잡한 형세에 놓이게 되었다. 2009년 5월 북한은 중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중국은 북한 핵무장 저지에 입각하여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정세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제재 행렬을 지지하고 참여했다. 한편,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경제민생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권교체라는 특수한 시기를 만나자, 정국과 사회안정의 유지가 제일 긴박한 문제로 변화했다.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되었다”는 판단을 기초로 하여, 불안과 혼란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은 실제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을 병행하는 것을 채택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지지하고 참여했지만, 관대한 조치를 취해 북한을 막다른 길로 밀어내는 것을 반대했다. 중국은 “정권교체”가 정세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했다. 바로 이 때 중국은 북한 제 1의 무역국과 투자국이 되어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계승하게 하는 중요한 지지대를 제공했다.

2013년 2월 김정은 집정 후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북한이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폭탄 소형화, 정밀화, 실전화 방면에서 추진하는 노력이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음이 상징화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성패와 존망이라는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서 중국의 새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처리하는 정책을 바꾸게 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겨냥한 중국의 정책 조정은 주로 아래와 같은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핵보유를 절대 허락하지 않고, 중국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리 높여 선포하고, 북한과 중국의 고위층 상호 방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일정을 선포하여 북한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였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표현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확고히 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확고히 하고, 평화로운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을 확고히 한다”로 바꾸어, 비핵화의 중요한 위치를 특히 강조했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대한 굳은 결심을 선포했다. 셋째, 중국은 더욱 착실하게 연합국을 통한 대북 제재 결의를 실현했다. 금융 경로 감시 및 통제, 핵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운송 금지 방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를 취했다. 정세의 영향으로 북중 간 대형 합작 프로젝트의 진전 역시 늦춰졌다. 넷째, 중국은 국제 합작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한중미 3국의 교류, 협조 그리고 합작이 긴밀화, 기제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가장 강한 조치이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중국의 대북 정책과 북중 관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공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고, 중국의 안전, 안정, 발전 이익이 있는 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중국의 입장은 더욱 견고해졌다. 중국은 연합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지지 참여했고, 제재 결의를 실제적이고 유효하게 실현했다. 한반도 비핵화 전선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촉진하는 데 연합하는 힘을 형성 강화하였다. 각종 가능한 수단과 방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북한의 핵무장 계획을 견제, 저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문제 해결이라는 “삼위일체”의 기본원칙을 견지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고, 북한의 “정권교체”라는 조건에도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전력 저지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기본적인 준칙에서 각 방면의 구체적인 정책까지 정확했음이 실천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 정책은 국가의 총체적인 외교정책을 관철하고, 평화 안정의 주변 환경을 건립하고, 개혁개방과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에서 합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한편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조정과 실시 과정에서 어느 시기의 형세 파악에 잘못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전히 전통과 이데올로기의 방해와 영향을 받아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바로 잡지 못하고 결함을 보고도 넘기었다. 중국의 새 정부는 한반도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에서 이미 확실한 동작을 취했다. 길게 보았을 때, 어떻게 형세에 적응하고, 한반도에 전략적 영향력을 높이고,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 안정 정세를 더 유효하게 유지할 것인가는 이후에도 중국이 한반도 정책에 여전히 힘써 해결할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3. 중국 정책의 선택 항목이 될 수 없는 “북한 포기”

한때, 중국 내 “북한 포기론”의 소리가 고조되었고, “북한 포기론”을 외치는 무리가 “세상에 알려졌는데”, 거기에는 전문가, 학자 심지어 당과 정부 기관 사람들도 있었다. “북한 포기론”의 주장은 인터넷을 통해 확대, 확산되었고, 가열화(熱點化) 추세가 출현해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국가의 저명한 브레인 기구와 전문가 학자들은 중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 정치는 다시 재조정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북한 포기론”의 주요한 근거 중 서방과 한국 언론이 요마화(妖魔化: 겁이 날 정도로 추악하게 묘사)한 북한을 인용한 일부 “사실”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 “북한 포기”의 이유는 귀납적으로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보유와 빈번한 무력 도발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혀, 북한은 이미 “전략적 부자산(負資產: 자본 총액이 채무 총액보다 적은 상태)”이 되었다. 둘째 북한은 봉건적 “세습제”를 실행하여 독재 통치를 실현하고, 개혁개방을 거절하고 중국의 경제 원조를 착취하고, 욕심을 부려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정치 경제적으로 이미 “무거운 짐(부담)”이 되었다. 셋째, 냉전이 끝나고 한중수교가 수립하고, 중미관계가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보호벽” 역할은 이미 소실되었고, 중국은 북한에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

“북한포기론”은 겉보기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다. “국가 근본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이치에 맞고 일정하게 미혹될 만하다. 그러나 “북한포기” 정책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북한을 벗어서 적으로 돌려, 근본적으로 한반도 국제정치의 객관적인 실체에 반하고,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총체적인 외교전략에 위배되어, 실행하면 단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의 파괴와 국가의 근본 이익의 손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북한 포기론”자의 황당무계한 주장에 따라 북한을 “포기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북중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전략적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 그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주변의 외교전략의 필연적 요구이다. 북한은 중국과 오랫동안 공동의 국경선을 가진 중요한 주변 국가이다.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국은 큰 대가를 치렀고, 수십만 명의 우수한 자녀들의 피와 생명을 지불했다. 이러한 전략적 자산은 쉽게 허사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03년 중공 제16차 대회에서 “선린 동반자”라는 주변의 외교방침을 제안하고, “이웃과의 화목, 이웃과의 안정,

이웃과의 풍요”를 스스로 발전전략의 조성부분으로 삼았다. 중국의 새 정부는 주변 외교를 외교 전체에서 더욱 특별한 중요한 위치에 두고 선린 동반 관계를 견지하고 선린 우호를 공고히 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 협작을 심화하여 그것이 스스로 발전하여 그 은혜가 주변 국가에 미치게 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 북한은 주변국가의 일원인데다 중국의 주변 외교 방침에 북한 역시 적용된다. 중국은 미국과 우호협작 관계를 진행할 수 있고, 미국의 맹우인 한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시킬 수 있다. 오랜 친구인 북한을 오히려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만약 “북한 포기론”에 따라 북한을 “이웃과의 화목, 이웃과의 안정, 이웃과의 풍요”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전통적인 우호적인 이웃을 양립할 수 없는 적으로 돌리는 것이고, 이것은 중국 주변 외교의 중대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모험과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북한의 중요한 지연(地緣)정치적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다. 냉전이 끝나고 한중수교가 수립되고, 중미가 우호협작과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로 발전하는 등의 요소는 북한의 “전략적 보호벽” 역할을 냉전시대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변화하게 했다. 그러나 절대이 때문에 북한을 지연정치의 “계륜(그다지 큰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이르는 말)”으로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 현재 국제정치의 “장”에서 지연정치 관념은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다. 특히 미국은 여전히 한미, 미일 동맹을 아시아로 되돌아올 전략적 지점으로 보고 있고 양국에 막강한 군대를 두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 예나 지금이나 지연정치의 최전방에 있는 보호벽으로 이에 대해 반드시 시종 분명한 인식을 유지하고, 절대 “서생”과 “부녀자의 시선”으로 보아서도, 정신을 놓아서도 안 된다.

셋째, 이 지역의 전략적 세력 유지는 꼭 필요하다. 전략적 세력 유지를 지속하는 것은 한반도 핵심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일단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면, 전쟁 위협의 증대는 결코 피할 수 없게 된다. 남북한 대립 구조에서 한국의 경제 실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함을 근거해 군사현대화 수준이 북한보다 높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작 체제의 지지가 있어 종합적인 실력을 비교했을 때 북한과 중국이 확실히 열세에 처해 있다. 어느 정도에서 중북 관계의 발전은 북한의 안전감의 중요한 근원이라 말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필연적으로 북한의 고립감, 위기감 심지어 절망감을 격하게 해 상황이 핵무장 진행을 가속화 시켜 한반도 비핵화는 장차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절대적으로 살 길을 찾기 위해 막다른 처지에 몰려 모험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충돌과 전쟁의 기회가 들연 상승하여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넷째, 남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한중수교 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최대 변화는 단일한 대북 관계를 운영한 것에서 북중 선린 우호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작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한반도 외교 운영 공간을 확대시켰고, 한반도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였고, 한중 관계 완화, 화해와 대화, 협작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천 증명하였다. 일단 “북한 포기”의 길을 걷는다면, 중국은 동시에 남북한과 친교를 맺는 외교 틀이 붕괴되었음을 알리고,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이론 외교”의 모든 외교를 잃을 뿐 아니라, 만약 북한이 미국에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여, “미국과 연합하고 중국에 반대한다”는 정책을 취해 중국 주변의 안전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당연히 국가 간 발전 관계는 상호적이고 원칙적이다.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상호 존중, 상호 협력, 상호 이익이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북한의 제도와 그것이 선택한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안전의 측면에서 그 정당한 이익의 요구를 지지하고 경제적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을 제공한다. 이 점은 시종 변하지 않았다. 다만 북중 우호 협력 관계는 쌍방향의 일로, 만약 북한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 상호 협력, 상호 이익의 원칙을 위배하고, 중국의 국가 이익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어떻게 행동해도 중국이 그것을 따른다고 잘못 여긴다면, 그것은 큰 오산으로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어 끌고 갈 수는 없다. 정책 상 “전조”가 되면 “전조”해야 하고, “태도를 바꾸면” “태도를 바꾸어”, 때에 따라 적당한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출발점은 절대 북한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반성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으로, 정확한 입장을 돌아보고 양국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한반도와 국내에 평화 안정의 정세를 유지한다.

4. 중국의 한반도 통일 문제를 위한 입장을 “바로 잡음”

금년 초 박근혜 대통령을 통일문제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이 이끄는 “통일준비위원회” 건립 결정을 바로 공포하였다.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제출했고, 이 일련의 연속 행위는 한국에서 한차례 “통일열”을 불러일으켰고, 국제사회의 주의를 끌었다. 주변국가의 지지가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외부조건이기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 역시 연달아 집중의 대상이 되었다.

오랫동안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소위 중국의 “소극론”, “배척론”, “현상태 유지론” 등의 관점이 줄곧 존재했는데, 이번 한국의 새로운 “통일열”의 고조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통일 정책에 대한 추측, 질의 심지어 곡해와 지적의 소리 역시 덩달아 커졌다.

문제의 근원은 중국의 한반도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있는데, 주요한 책임은 한국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에 있다. 정곡을 찌르는 선전만 있고, 업무를 해석하는 데 중시하지도 잘 하지도 않았고, 이것은 바로 “공공외교”, “예방외교”의 책무였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말했을 때 중국은 사실 한반도 주변국가 중 남북 통일을 가장 정면으로 대하고 가장 진실되게 지지할 수 있는 국가이다.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지속과 한미동맹 앞날에 의문이 든다면, 이는 아름다운 “마음”의 병으로, 그것은 진실로 남북 통일을 지지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이다. 한반도에 인구 칠천명이 넘는 통일된 강성한 국가가 출현하면, 일본에 대한 압력과 위협이 커지게 된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 통일의 바른 에너지가 될 수 없게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배척할 수 없다. 다만 그것도 중요한 작용을 발휘할 위치에 있지 않다. 유일하게 중국만이 한반도 통일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결정적 역량이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명확한 것으로 일관적이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명기하였다. 중국정부는 “빠른 시일 내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민족의 희망을 존중하고, 조선민족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후 노태우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이 중국의 지도자와 회담을 진행할 때, 중국 측은 “남북한 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함”을 전혀 예외 없이 재차 표명하였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수뇌회담 때 재차 강조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실현하여 최종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국 지도자의 이러한 장엄한 대답은 중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 지지를 확고히 한다는 가장 유력하고 가장 믿을 만한 증거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도의와 원칙 고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국가와 지역의 이익을 고려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 “의로움”과 “이로움”의 통일이다. 만약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에 “대박”의 기회라 말한다면, 중국 측에도 “큰 이익”의 기회라 말할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귀납 개괄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통일은 도의적인 요구이다. 중국외교는 정확한 “의리관”을 강조하는데, 도의를 중시하고 정의를 주장하는데, “자기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를 주장한다.

대국 사이의 세력분쟁과 냉전은 한반도의 분열을 조성하고 심화해, 조선민족에 오랜 기간의 거대한 희생, 재난 그리고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중국과 남북한은 모두 분열국가에 속해 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다른 국가의 민족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의적 요구이다. 동시에 중국은 스스로 분열을 원하지 않기에 다른 국가의 분열을 바랄 수 없다. 이 역시 최소한의 도리이다. 만약 중국이 다른 국가의 통일을 배척하고, 방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도의와 정치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아, 이치상 국제사회의 견책을 받고 동시에 중국 인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외교, 안전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남북의 분열, 대립상태에서 중국은 동시에 남북한 양쪽과 우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세력 균형 유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나아가 양쪽 중재, 화해와 대화 촉구를 위해 큰 노력과 외교 자원을 소비해야 한다. 만약 통일된 한반도 국가를 대한다면 “양쪽 외교”의 국면이 끝날 수 있다. 통일 후의 한반도 국가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주요한 과제에 당면하기에 중국에 더욱 우호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 이는 중국외교에도 이로운 것이다. 특히 분열 상태에서, 남북의 경쟁 체제와 통일주도권을 위한 과도한 분쟁은 “제로 섬” 성질이 있어, 대국 요소를 복잡하게 하고, 한반도를 수시로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로 변하게 해 중국 주변의 안전에 장기적으로 엄중한 위협과 무거운 압력을 조성한다. 한반도 통일 실현은 중국을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벗어나게 하는데, 이는 중국 최대의 전략 수확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은 중국 경제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통일 후 북한 경제 재건과 국가 균형 발전이 일정상 먼저 제안될 것이고 이는 장차 중국이 한반도와 경제교류 합작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 후의 한반도 국가는 시장경제와 개방적인 경제 체제를 실행하여, 남한의 기술, 자금 등의 종합적인 우세함과 북한의 노동력, 자원의 우세함이 결합하여 한반도의 경제개발의 진전을 크게 추진할 수 있고, 강성한 한반도의 신경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와 인접한 지리적 우세함을 근거로 부가적인 효과를 우선 누릴 수 있고, 동북삼성의 경제가 빨리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데도 이로울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 통일은 지역경제합작의 장애를 없애고, 동북아시아 경제합작체의 건설 조건을 성숙하게 하는 데 유리하다. 이는 확실히 중국 동북아시아경제합작의 총체적인 전략에 부합한다.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확고한 것으로 동시에 그것은 맹목적 이거나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통일이든 단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 통일 사업의 막중함, 통일 과정의 복잡함과 통일 후의 부정확성은 어떠한 통일이 본 지역과 지역 내 각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 유리한가라는 근본적인 종지를 결정하게 한다.

필자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 정책의 원칙성은 주로 3가지로 드러난다고 본다.

하나는 통일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장한다. 한반도 분열 국면은 관련 대국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반도 사람의 뜻과 위배되는 상황에서 조성한 것으로 역사는 외부세력의 주재와 간섭이 단지 한반도에 희생, 고통, 재난을 가져다 주었음을 증명한다. 이 침통한 교훈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응당 얻어낸 것으로 절대 다시 재현할 수는 없다.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의 주인과 통일된 주체로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외부의 간섭이 배제된 조건에서 남북한 양쪽 사람들의 뜻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흔들릴 수 없는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이 인정되더라도 한반도 통일이 관련 국가의 이익과 관계하기 때문에 통일을 실현할 때, 이들 국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외부세력의 간섭과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국가는 반드시 한반도 인민의 선택을 실제로 존중해야 하고, 진심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외부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통일문제에서 한반도 문제의 “반도화”를 꾸준히 실행하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배제해야 한다.

둘째 평화통일 방식을 꾸준히 지지할 것을 주장한다. 내부 전쟁, 골육상잔의 전쟁은 단지 한반도를 복잡한 재난의 심연에 밀어 넣어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세계민족의 숲에서 다시 살아나고 설 수 없게 했다. 이 때문에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최고의 요구이고 조금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지상주의”, 통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본 내포는 다음과 같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고, 통일 진행과정의 평화를 지킨다. 이 점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무력방식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력을 사용하여 수단을 강요하는 것도 포함한다. 동시에 “흡수통일”은 상대 정권과 체제붕괴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로 단순한 합병을 실시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강렬한 반대와 목숨을 건 저항을 불러일으켜 무력충돌과 전쟁을 낳을 수 있어, 반대와 배제의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점진적인 방법의 채택을 주장한다. 가급적 빨리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남북한 인민의 공통된 바람이다. 이 때문에 “오래 끌 수 없는” 긴박한 의식과 “촌각을 다투는” 적극적인 정신 수립은 필요한 것으로, 중국이 수 차례 한반도는 “하루 빨리 통일을 실현할 것”을 지지한 것도 이러한 도리이다. 그러나 “빨리 가고자 해도 이를 수 없다”. 분열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누적된 난제가 산처럼 쌓여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객관적 실제에서 성급히 벗어난 정서는 형세 오판과 정책 결정의 착오를 초래할 수 있다.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오히려 전반적인 국면에 나쁜 영향을 미쳐 통일이라는 목표를 더욱 멀게 한다. 이 때문에 천천히 할 지 언정 조금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필요하고 정확한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이 관계를 완화, 화해하고 신뢰를 쌓아, 그것을 기초로 민족통일의 대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통일문제에서 규율 중시, 현실 입각, 점진적 추진을 제창해, 확실히 기초를 다져 최종 조건이 성숙하여 자연스레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은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필연적으로 전쟁과 혼란을 일으켜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반대한다. 그 출발점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주장은 마치 소극적이고, 조금의 과감함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주장은 “잘못된 길”과 “시행착오의 길”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통일의 여정과 시간을 단축시킨다.

통일 조건을 따져보는 것은 성숙한 표준인지 아닌지, 남북인민이 공통의 뜻을 형성했는지 아닌지 이다. 만약 남북한 인민이 통일의 형식, 방법과 시간에 대해 공통된 뜻을 형성했다면, 그것은 바로 통일을 실현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나타낸다. 통일 시기에 직면할 때, 통일이 연방제, 연합제 혹은 다른 형식을 취하든 관계없이 중국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다. 통일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중국은 성급히 모험을 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현상유지”, “현상 고정”이라는 감투를 중국에 씌울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의 “통일열”은 확실히 현실을 벗어난 경향을 나타내는데 마치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처럼 한다. 한국의 일부 지식인 중 냉정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통일열”은 북한 “극변론”과 “붕괴론”에서 수립된 것으로, 그것이 가져온 것은 “큰 발전”이 아니라 “큰 재난”이라고 지적한다. 필자는 북한 “극변론”과 “붕괴론”을 통일 정책의 근거로 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많은 사실들이 북한이 비록 국제적으로 매우 고립되었고, 경제민생이 여전히 곤란함을 벗어나지 못했고 불안정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정국은 안정적이고 민심은 안정을 찾고 있고, “극변”과 “붕괴”가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표명하기에 통일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종의 환상이다. 환상을 기초로 수립된 통일 구상은 사상누각과 같다. 다음으로 “극변론”과 “붕괴론”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고도의 각성과 강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켜 남북한 사이의 불신과 대립, 대항을 격화시켜 양방의 완화, 화해 그리고 교류 협력을 엄중히 가로막는다. 만약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한반도 통일이라는 미래는 요원해 지고 충돌 및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과도 정반대의 길이다.

넷째 통일은 지역 내 각국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 및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 지역 내 각국에 혜택이 미치는데 이익이 되어야지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통일된 한반도 국가는 반드시 형세 변화에 적응하여 역사의 연

속성에 맞게 시기에 맞게 나아가야 하는 관계로 정확한 내외 정책을 제정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핵보유국가”를 추구해서는 안되고 특정한 국가와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자주독립, 평화 우호적인 외교방침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말해보면, 국가안전 영토, 주권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익에서 출발하여 반드시 통일된 한반도 국가는 한반도 형세의 기본변화에 적응하고 주한미군 문제를 합당하게 처리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과 북한의 영토 구분의 역사와 현실을 존중하여 정당하지 않은 영토 요구를 해서는 안되고,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에 민족 분열의 혼란함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회와 여론이 나날이 다원화 되는 배경 하에서 중국 내부는 확실히 한반도 통일의 “유해론”과 “현상 고정론” 등 소극적이지만 반대의 소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반대 여론은 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 방향의 불확정성과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걱정에서 근원하는 것으로 근거 없이 생산된 것은 아니다. 반대여론이 비록 중국의 한반도 통일 문제의 정책 결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일종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중국 국민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것은 남북한이 통일의 외부환경을 만들 때 반드시 치중해야 할 중요 과제이다.

5. 맺으며

중국의 발전이 가속화하고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의 어려움이 커지고 남북한 통일 문제가 “가열화” 됨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이 나날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것은 무수히 국제사회에서 심의, 검증 그리고 분석을 받았다. 이것은 중국에 이미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자 시험이었고 더욱이 세계에 자기를 이해 받을 기회가 되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고정적인 양식은 없고, 완전무결한 것이라 말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단지 색안경을 끼지 않고, “나라가 강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장악한다”는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난다면, 정확한 결론을 얻기가 어렵지 않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중 분명하고 특징적인 것 하나는 “불변(不變: 변하지 않는 것)”과 “응변(應變: 변해야 하는 것)”의 통일이다. 즉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한다는 기본원칙은 보존하고, 부분 정책과 책략 수단은 형세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익”과 “도의”

의 통일이다. 즉 본국의 이익이 출발점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리, 대국의 책임과 정의 우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나를 이롭게 함”과 “남을 이롭게 함”과의 통일이다. 즉 상호이익과 혜택이라는 원칙에 따라 나, 너 그리고 모두가 좋아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보이는 중요한 핵심이다.

북한의 핵보유 등 번거로운 문제는 확실히 중국에 무거운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한반도와 지역의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지연정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중국의 국가이익도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북한이 중국과 적이 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북한 포기”는 거짓된 명제임을 결정하게 했다. “평화공존 5원칙” 하에서 선린우호의 희망에서 출발하여 교류와 수 차례의 논의를 통해서 필요 시 엄숙한 경고와 적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문제와 차이를 적절하게 해결할 것을 촉진하여 최종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목적에 이른다. 이것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행한 기본 본보기이다.

중국은 점차 남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병행 발전시킨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한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옛 친구를 버리는 것은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 아니다. 다만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등의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균형을 맞추다”는 것은 합당한 외교원칙이 아니고, “등거리” “균형”은 실천하기에 매우 어렵고 억지로 하려고 해 보았자 자승자박에 빠진다. 중국의 남북한 외교는 객관적인 필요와 실용적인 원칙에서 추진된 것으로 중국과 북한, 중국과 한국의 밀접한 관계, 서로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점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돌보고, 양쪽 협력과 상호 촉진을 노력하여 만들어냈다.

외부의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걱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 지지는 역사, 문화, 도의, 책임과 이익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라가 강해지면 패권을 장악한다”는 논리는 중국에 적용할 수 없다. 단지 중국은 “통일지상주의”자가 아니다. 원칙의 최전선이 없을 수는 없다. 중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 다른 국가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급진적인 통일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 중 무력 통일, 무력협박통일도 포함되고, “흡수통일”도 포함된다. 본질적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통일 배척”, “현상 고정”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진정한 지지와 촉진이다.

오늘날 한반도 형세는 여전히 매우 엄숙하고 복잡하다. 냉전시대의 유산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고, 비핵화의 미래가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고, 남북 대립 긴장 국면은 때때로 열기를 더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전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주요한 모순과 중심 과제로, 이 점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관련 국가는 냉정하게 형세를 판단하여 이 중심을 잘 잡아, 힘을 합쳐 정확한 해결의 길을 견지하고 탐색해야 한다. 다른 일에 힘을 쓰고 중심을 벗어나 역사적인 착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朝鲜半岛信任进程: 认识与展望

韩献栋 (中国政法大学)

1、“朝鲜半岛信任进程”的提出

朝鲜半岛信任进程的概念是朴槿惠于2012年2月28日出席首尔核安全峰会国际学术会议的基调演说中首次提出的。当时朴槿惠并非韩国总统，而是担任新世界党非常对策委员会委员长。此前朴槿惠曾于2011年9月在美国《外交事务》杂志发表《面向新的朝鲜半岛》一文，阐述了她对韩国的统一、外交、安保政策的构想。在这篇文章中，朴槿惠认为，长期以来，缺乏信任削弱了南北之间的和解尝试，因此韩国应推行“信任政治”，基于国际规范，履行韩朝互相承诺，将半岛由冲突区域变为信任地带。¹⁾据称，向《外交事务》的投稿是朴槿惠与外交、安保专家进行讨论后亲自撰写的文章。在朴槿惠执政后担任朴槿惠政府内阁官员的一些专家学者，如担任外交部长的西江大学教授尹炳世、担任统一部长的北韩大学院教授柳吉在、以及担任国家安保大使的延世大学教授李正民等参与了文章的准备过程²⁾。随后，2012年7月10日，朴槿惠在宣布将参加总统选举的声明中再次提及了朝鲜半岛信任进程概念。

在朴槿惠最初提出这一概念时，她只是表示“我们的对北政策以国民的共识为基础，维持一贯性，并应该推进面向未来的演进。”“韩半岛信任进程应该从相互信守承诺开始。”应该说朴槿惠在当时的表述只是原则性的，并无清晰而具体的内容。2013年2月25日的就职演说中，朴槿惠再次提到了朝鲜半岛信任进程的概念，她表示：

1)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J]. *Foreign Affairs*, 90.5 (Sep/Oct 2011): 13-18.

2) [韩]董正民(音译). 对北“阳光”政策也批判、“压迫政策”也批判…没有具体内容… 朴槿惠向《外交事务》投稿. 东亚日报[N] (2011.8.24): http://news.donga.com/view.php?id=Print_Donga%7C3%7C20110824%7C39754788%7C1 (检索日期: 2013年11月13日)

“我要通过推进韩半岛信任进程，为繁荣自由、满怀梦想的统一时代的到来打下坚实的基础。我们将在确保遏制力的同时，一步步增进南北之间的信任。南北双方只有进行对话，履行承诺，才能加强信任，我希望北韩遵守国际规则，做出正确的选择，确保韩半岛信任进程顺利推进。”³⁾但在此之后，对于将采取怎样的措施推进信任进程，朴槿惠政府并无明确的政策出台。

经过近6个月的酝酿和研究，2013年8月韩国统一部公开发布了名为《朝鲜半岛信任进程》的小册子，对朝鲜半岛信任进程的概念、推进背景、目标和原则以及推进课题等问题进行了较为详细的阐释与说明，标志着以“朝鲜半岛信任进程”冠名的朴槿惠政府的对朝政策逐渐清晰。

2、“朝鲜半岛信任进程”政策的内容与特征

依据韩国统一部发布的资料，所谓“朝鲜半岛信任进程”，即是以牢固的安保为基础，通过南北间信任的形成，发展南北关系，巩固半岛的和平，进而构筑统一基础的政策。这一政策的目标有三个：即发展南北关系、巩固半岛和平、构筑统一基础。其推进基调包括以牢固的安保为基础推动对朝政策，通过履行相关协议积累信任，营造条件和氛围以使朝鲜进行“正确”选择，于国民信任和国际社会信任的基础之上推进相关政策。从推进课题来看，主要包括通过建立信任实现南北关系正常化、追求半岛长久的和平，强化统一的基础，探索半岛和平统一与东北亚和平合作的良性循环。⁴⁾

从朴槿惠总统的讲话以及统一部的小册子所阐释的相关内容来看，朝鲜半岛信任进程政策具有如下特征：

第一，强调以牢固的安保为基础，主张增强包括韩美联合防御能力在内的整体防御力量，通过确保强有力的遏制力，形成牢不可破的安全体系，遏制来自朝鲜的“挑衅。”从这一点而言，朴槿惠政府继承了李明博政府的政策。

第二，朴槿惠政府的对朝政策宣称将继续向朝鲜提供针对婴幼儿、孕妇的人道

主义援助，不将人道主义援助与政治问题挂钩，表示继续为解决离散家属、战俘等人道主义问题而努力，在游客的人身安全得到保障等相关条件具备后，也可以考虑重启金刚山旅游项目等等。从这一点而言，放弃了李明博政府和金泳三政府时期的某些做法，吸收了金大中、卢武铉等进步政府对朝政策中的有益成分，体现出一定的融合性。⁵⁾

第三，在“信任”的概念体系下发展朝韩关系。这是朴槿惠政府对朝政策的创新之处，此前，“‘信任’从未被韩国政府作为战略目标或方法。”⁶⁾在朴槿惠看来，朝鲜并不是绝对不可信任的，而且，信任也是可以累积的。

第四，朴槿惠政府的信任进程政策同时还强调原则。“信任”并不意味着无条件的和单方性的信赖，而是要在两个原则下稳步推进，即“朝鲜必须要遵守与韩国及国际社会的承诺，对破坏和平的行为付出确实的代价。”⁷⁾同时，朴槿惠政府强调要打破所谓朝鲜“挑衅-危机-妥协-补偿-挑衅”的恶性循环，若遇朝鲜的挑衅和错误行为，韩国将采取严厉的应对措施，迫使其遵守国际标准和共识。而且信任朝鲜是有红线的。在朴槿惠政府看来，朝鲜仍然是自身安全的最大挑战，必须确保绝对的安全。追求安全感、建立巩固的国防是朴槿惠在对朝政策的制定上首先要考虑的。这也在一定程度上划好了信任朝鲜的红线，即绝对不能危及及国家安全。

3、“朝鲜半岛信任进程”政策的实施

迄今朴槿惠政府上台执政已一年有余，信任进程政策实施的效果如何呢？依据韩国统一部的解释，“朝鲜半岛信任进程包括南北之间的互信、国家与国民之间的互信、韩国与国际社会之间的互信”等三个方面。⁸⁾从朴槿惠政府对该政策运行一年来的效果来看，在构筑国家与国民之间的互信、韩国与国际社会之间的互信这两个方面，朴槿惠政府可谓取得了不错的成绩。在“岁月号”沉船事件发生之前，舆论调查显示韩国民众对朴槿惠政府的支持率一度超越70%，显示出韩国民众对朴政府理政能力的认

3) [韩]朴槿惠. 总统就职演说[N], 2013. 2. 25. http://www1.president.go.kr/president/speech.php?srh%5Bpage%5D=8&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22&srh%5Bdetail_no%5D=1 (检索日期: 2013年11月13日)

4) 韩国统一部. 韩半岛信任进程[Z]. 2013.

5) (韩)郑圣姪:《韩半岛信任进程:构成、认识和接近方式》,载《统一政策研究》,2013年第22卷第2号,第191-213页。

6) [韩]朴仁辉:《韩国新对朝政策与信任进程:特征与问题》,载《世界地域研究论丛》,2013(31):31-53.

7)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J]. *Foreign Affairs*, 90.5 (Sep/Oct 2011):13-18.

8) 韩国统一部. 韩半岛信任进程[Z]. 2013.

可。而执政第一年内朴槿惠总统马不停蹄的海外出访，⁹⁾也构筑了国际社会对其政策的支持。然而在构筑南北之间的互信这一课题上，朴槿惠政府则是难言有建树。朴槿惠政府执政不久，围绕着开城工业园区问题，南北双方就发生了对峙，虽然经过谈判开城工业园区最后得以重启，2014年2月又举行了3年以来的首次离散家属团聚，但总体而言，南北关系没有大的进展。

4、南北信任未能构筑的原因

1) 朝方的谨慎与怀疑

互信的建立是双方的事情，是双方之间进行良性互动的结果。客观而言，朝鲜半岛信任进程政策最重要、最直接的目标对象是朝鲜，而在三个互信中，“南北之间的互信”也是排在第一位的，所以构建南北互信也可以说是朝鲜半岛信任进程政策的核心内容与目标。因此，朝鲜对该政策如何认识和评价、如何反应和应对是十分重要的，因为这直接关系到朝韩之间的互动是否良性、直接关系到该政策的实施效果。朝鲜半岛信任进程政策在2013年8月统一部的小册子出版之前，基本停留在口号状态，具体的内容是什么并不明确。在这一阶段，朝鲜对这一政策的态度是观望，并通过开城工业园区问题进行了试探。随后在2013年10月24日，朝方通过《劳动新闻》发表评论员文章《评朝鲜半岛信任进程》对这一政策正式表态，指出“这一政策与上届韩国政府的‘无核、开放、3000’，没有任何区别，是全面否定北南关系改善、追求体制对决的反统一政策。”¹⁰⁾对此政策，朝鲜的“不配合”可以说给朴槿惠政府这一政策的实施效果提出了严峻的挑战。

9) 2013年5月5日至10日访问美国，6月27日至30日访问中国，9月4日至7日赴俄罗斯圣彼得堡参加G20会议，顺访俄罗斯，9月8日至11日访问越南，10月6日至8日赴印尼出席APEC会议，10月8日至10日出席ASEAN首脑会议，10月10日至12日访问印尼，11月2日至4日访问法国，11月4日至7日访问英国，11月7日至8日访问比利时欧盟总部，2014年1月15日至18日访问印度，1月18日至22日访问瑞士，3月24日至25日出席荷兰核安全峰会，3月26日至28日访问德国。

10) [朝] 评韩半岛信任进程, 劳动新闻[N], 2013年10月24日., http://www.vonhapnews.co.kr/bulletin/2013/10/24/0200000000A_KR20131024075600014.HTML?input=1179m (检索日期: 2014. 3. 8)

2) 朴槿惠政府对朝政策的矛盾性与混乱性

朝鲜之所以对半岛信任进程政策持怀疑态度，一方面由于朝韩间长期的对决历史而形成的心理惯性和心理预期，一方面，也是更为重要的是由于朴槿惠政府对朝政策的矛盾性和混乱性所致。

由于朝韩长期的体制竞争，双方相互猜疑、不信之心日久，即便是进步政府上台，这种猜疑和不信在某种程度上也是存在的，更何况是极右和保守性色彩浓厚的朴槿惠政府呢，朴槿惠政府保守性的背景色彩很容易使朝方对朴槿惠政府的对朝政策形成先入为主的心理预期，做出朴槿惠政府的对朝政策不会是进步性的判断，因此防范、怀疑之心难免。而朴槿惠政府外交安保统一政策方面核心决策人士强烈的军方背景色彩也大大加重了这种政策研判预期。

同时，朝鲜半岛信任进程政策本身也存在着一些问题。这一政策一方面提出构筑南北信任，同时又在强调建立牢固的安保，强调坚守原则。“牢固的安保”对韩国而言，一个很重要的措施即意味着强化韩美同盟。就在上台执政三天前的2013年2月22日，朴槿惠访问韩美联合司令部，其政策方向宣示意味强烈，当然访问韩美联合司令部的背景之一是10天前朝方进行了第三次核试验。虽然朴槿惠政府将构筑“南北之间的互信”排在了三个互信中第一的位置上，但朴槿惠政府好像并没有倾注主要的心力构筑南北信任，从朴槿惠政府执政第一年的用力上看，顺序完全相反，即通过努力构筑“韩国与国际社会之间的互信”博取韩国民众对政府的支持，构筑“国家与国民之间的互信”，然后借助于国际社会和韩国民众对其政策的支持，包抄朝鲜，迫使朝方让步，构筑“南北信任。”朴槿惠总统执政后频繁的海外访问日程安排，而对朝则强调坚持原则。从这一点来看，不难看出上述的逻辑。一味强调坚持原则，在相当程度上加重了朝鲜对该政策的怀疑。

3) 美国因素的介入

南北互信未能构筑的另外一个原因是美国因素。在朝鲜半岛和东北亚地区，南北关系不是一个单纯的双边关系。美国对南北关系的发展状态具有重要的影响力和很强的操控能力，虽然它不能完全决定南北关系是否能够得到改善，但是只要它不愿意看到南北关系取得进展，只要它希望南北关系紧张，它只需要拉一拉手中的操控线即可做到，即是处于正在取得进展的发展势头也会立刻停滞或回到原点。

朴槿惠政府的朝鲜半岛信任进程政策提出后，奥巴马政府表示了该政策的支持，但它并不是真正关心南北互信是否能够构筑、南北关系是否能够得到改善，是否会取得进展，它是出于支持朴槿惠政府的角度表态支持信任进程政策的，其出发点是出于强化韩美同盟的需要。2014年4月底，奥巴马在东亚之行的韩国站强调的也是这一点。

上述的朴槿惠政府上台后对牢固的安保的强调，除了朴槿惠政府保守性色彩和核心决策圈人士的强硬军方背景之外，另一个重要的原因恐怕就是朝鲜在朴槿惠执政的10余天之前进行了第三次核试验。虽然朝鲜进行第三次核试验的背景因素十分复杂，但美国则难逃干系。奥巴马执政以来，对朝核问题越来越明显地采取了维持现状的政策，美朝之间正式的官方对话渠道基本停止。然而就在奥巴马准备第二任期的竞选之时，美国国家安全委员会成员直飞平壤，对朝方提出要求，做出承诺，但奥巴马在当选后又不兑现承诺，于是朝方则以核试验回敬美国。于是局势所形成的演变逻辑是：朝鲜撒气的对象是美国，受到挑战的是朴槿惠政府，受到影响的是南北关系。这就是朝鲜半岛地缘政治的特性。

5、展望

“牢固的安保”、“南北互信”、“坚持原则”、“朝鲜的不确定性”、“统一大博”、“统一准备委员会”、“德累斯顿构想”，这些术语和词汇是朴槿惠政府执政一年多来在对朝政策上使用过的关键词。透过这些关键词，我们是拼读出朴槿惠政府对朝政策的一些逻辑和信息。构筑“南北信任”反映出朴槿惠政府试图吸取李明博政府对朝政策失败的教训，扭转李明博政府在南北关系上“失去的五年”所形成的颓势，推进南北关系取得进展，但朝鲜进行核试、朴槿惠政府本身的保守性色彩以及独立应对朝鲜的自信心不足、东亚国际体系转型和美国亚太再平衡战略对韩国外交安全政策的制约等因素的影响，朴槿惠政府又提倡构筑南北互信的同时，又在强调“坚持原则”、构筑“牢固的安保。”

之所以强调“牢固的安保”，另外一个重要的原因是韩方认为朝鲜存在着“不确定性。”2013年底发生的张成泽事件更加重了朴槿惠政府对处于领导体制转变和权力交接过程中的朝鲜政权的这种认识。更为重要的是，对“朝鲜不确定性”的夸大解读

还直接与统一时代即将来临这样一种预期判断联系在一起。于是，为了统一国民特别是年轻人在民族统一问题上的思想和认识，针对民众层面，朴槿惠政府提出了“统一大博”概念，强调这种一个可以造福于全体国民的事业。而在政府层面，宣布成立统一准备委员会。张成泽事件之后朝鲜政局并没有如一些学者预判的那样将出现混乱。“统一大博论”和成立统一准备委员会等在韩国等引起热议，并出现一些质疑之声。此后3月28日，朴槿惠总统在德国德累斯顿大学发表演讲，在所谓的“德累斯顿构想”中，提出了解决人道主义问题、构建民生基础设施、恢复民族同质性等三大课题。客观而言，朴槿惠总统在“德累斯顿构想”中提出的三大课题对于南北关系的发展、实现民族的和解和统一所急需推进的事业，对这些问题的强调与此前强调的“不确实性”等也形成了发差比较明显的对比，但问题是这种提议是只停留在口号倡导的层面、还是要采取措施实际落实。如果要落实，是不是需要附加条件？如何处理与5.24措施以及朝鲜无核化问题的关系。这些方面，韩国都还没有明确的表明态度。

客观而言，朴槿惠政府上台执政的环境十分困难，但朴槿惠总统仍然在努力寻求着突破，提出了一些有价值的政策思想。执政一年多来，朴槿惠政府的对朝政策之所以存在的一些矛盾和混乱，正是由这种艰难的决策环境与试图寻得突破主观努力两种因素的相互作用造成的。如今已经进入朴槿惠总统执政的第二个年头，这也是南北关系能否摆脱目前的僵持与对持、取得突破和进展的关键性一年。若想在推进南北关系上取得建树，朴槿惠总统需要在包括政府人事重组、放弃一些原则等问题上从维护民族大义和地区和平的角度出发做出重大的政治决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센동 (중국정법대학)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등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2012년 2월 28일에 열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었던 박근혜의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그 전에 앞서 박근혜는 미국의 유명 잡지〈포린 어페어스 (foreign affairs)〉에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 (A New Kind Of Korea)’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기고문에서 박근혜는 “신뢰의 부족은 오랫동안 남북한 사이의 진정한 화해를 어렵게 만든 기본적인 요인이다.”라며 한국이 ‘신뢰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규범을 준수하여 남북한은 한반도를 끊임없는 갈등의 공간에서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된 글은 박근혜가 외교, 안보 전문가들과 토론을 가지고 난 후 직접 작성한 것이며, 외교부 장관인 유병세 서강대학교 교수, 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는 유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국가안보대사에 이정민 연세대 교수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내각 조직에 속한 몇몇 학자들이 해당 기고문 작성의 준비과정에 참여했다. 그 후 2012년 7월 10일, 박근혜의 대선출마 선언 당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재차 거론했다.

박근혜가 처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제시했던 때에는 “우리의 대북정책은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도로만 언급되었다. 당시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원칙 정도였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은 없었다. 2013년 2월 25일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확실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을 했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6개월여의 시간 동안의 준비와 연구를 거쳐 지난 2013년 8월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과 추진 배경, 목표와 원칙, 그리고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책자를 발간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타이틀을 내 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내용과 특징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 추진,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쌓기,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할 여건 조성, 국민적 신뢰와 국가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한 정책 추진 등의 추진 기초가 있다. 추진 과제로는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 기반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방향 모색 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통일부에서 발행한 책자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에는 다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미연합 군사력을 포함한 국가 전체적 국방을 강화시켜야 하며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 단단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명박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2.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아이들과 임산부에게 제공했던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이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산가족과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 관련 조건이 완비된 후에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고려 하겠다는 점 등을 봤을 때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진보 성향 정권의 대북정책에서 장점을 취한 것으로, 타협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3. ‘신뢰’라는 개념 하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점이 바로 “박근혜 표” 대북정책의 신선향이다.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신뢰’는 단 한 번도 목적이나 전략이 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에게 있어 북한은 절대 믿어서는 안될 존재가 아니며, 신뢰는 쌓아갈 수 있는 것이다.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가 결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또 신뢰는 “북한이 반드시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정부는 북한의 “도발·위기·협상·보상·도발”의 악순환을 타파해야 하며 만일 북한이 도발을 해 올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제적인 기준과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지키게끔 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또한 북한을 신뢰하는 일에는 일종의 경계선이 존재한다. 박근혜 정부에게 북한은 여전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안전을 추구하고 견고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대북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국가 안보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의 경계선을 긋고 있다.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시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일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지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어떤 성과를 이루어 냈나? 대한민국 통일부에 따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는 “남북간의 신뢰,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간의 신뢰” 이 세 가지 신뢰를 포함한다. 일년 여 동안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되돌아 보면,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는 주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에 육박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취임 후 첫 1년 동안의 끊임없는 해외 순방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또한 얻어냈다. 하지만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북한과 대립하였던 바 있다. 비록 지금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었고 지난 2월에는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북관계에 특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남북간 신뢰구축 방해 요소

1) 북한의 신중과 회의

신뢰란 양자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북한이다. 3가지 신뢰 중에서도 “남북간의 신뢰”가 역시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는 남북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시행의 성과와 역시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2013년 8월 통일부가 정식으로 책자를 발행하기 이 전에는 그저 슬로건에 불과하였고, 그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역시 불분명했다. 당시 북한은 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개성공단 문제를 통해 한 차례이 정책을 시험해 본 바 있다. 직후 2013년 10월 24일 북한은 <노동신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평함>이라는 논평을 게재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은 논평을 통해 “이 정책은 이 전 남한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과 전혀 다름이 없으며 북-남 관계 개선을 전면 부정하는 반 통일 정책”이라며 지적했다. 북한의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시행에 있어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다.

2)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모순과 혼란

북한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이토록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다음 두 측면의 원인이 있다. 첫째는 양국간 오랜 시간 동안의 대치를 통해 형성된 심리적 관성과 기대감이며, 더욱 결정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혼란이다.

남북간의 오랜 체제 대립으로 남과 북 사이의 근거 없는 의심과 불신이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였을 때에도 항상 일정 수준 자리잡고 있던 의심과 불신은 더욱이 현재의 보수정권에 대해서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이 북한으로 하여금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진보적일 수 없을 것이라 속단하기 쉽기 때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북한의 경계와 의심을 타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관련 핵심 인사들이 모두 짙은 군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북한이 더욱 남한을 의심하게 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자체에도 몇몇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는 한국에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한미동맹관계의 강화를 의미한다. 대통령 취임 3일 전인 2013년 2월 22일 박근혜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방문하였는데, 그 의미는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이유 중 하나는 열흘 전 있었던 북한의 3차 핵 실험 강행이다. 비록 박근혜 정부가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세 가지 신뢰 중 가장 첫 번째 순위로 매겼다고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남북 신뢰 구축에 주력을 다 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박근혜 정부의 첫 1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보았을 때, 그 우선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한국과 국제사회간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국민과 국가간의 신뢰를 구축한 후에,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북한에게 한 걸음 물러나게끔 강요하고 억지신뢰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끊임없이 해외 순방을 하고, 북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 등을 통해 앞서 말한 바를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의심하고 우려하게끔 하고 있다.

3) 미국의 개입

남북이 서로 신뢰를 구축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미국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남북 관계는 단순히 남과 북 양자간의 일이 아니다. 미국은 남북 관계 발전에 막대한 영향력과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비록 미국이 남북 관계의 개선 여부를 완전히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미국이 남북 관계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저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 만으로도 남북간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고조시킬 수 있다. 설사 남북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등장한 후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사실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남북관계나 신뢰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라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튼튼한 안보에 대해 강조를 하는 데에는 박근혜 정부의 강한 보수 성향, 핵심 결정권을 가진 인사들이 가진 짙은 군사적 배경 등 원인 외에 또 한가지 결정적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이 박근혜의 취임 열흘 전 강행한 3차 핵 실험이다. 물론 북한이 핵 실험을 진행한 배경은 복잡다양 하지만 미국과 아무런 관계가 다고는 할 수 없다. 오바마 정권은 취임 이래로 북핵문제에 대해 점점 더 “현상유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 통로는 사실상 거의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오바마가 재임 선거를 준비하던 시기에 미국의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이 평양으로 직접 방문해 북측에 요구를 제시하고 상호 합의를 이끌었지만 오바마가 당선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북측이 핵 실험을 통해 미국에 응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대상은 미국이지만, 위협을 느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이고, 영향을 받는 것은 남북관계’ 라는 논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것이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특징이다.

5. 전망

“튼튼한 안보”, “남북 상호신뢰”, “원칙 준수”, “북한의 불확실성”, “통일 대박”, “통일준비 위원회”, “드레스덴 구상”. 이 용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가 집권 1년 동안 대북정책에서 사용해온 키워드들이다. 이 키워드 들을 봤을 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련의 이해를 할 수 있다. 남북 간 신뢰를 쌓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습득하여,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의 잃어버린 5년을 되찾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박근혜 정부의 보수적 색채, 독단적으로 북한에 응할 자신감의 부족,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 의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제약을 받는 등의 요소 등이 맞물리면서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 신뢰의 구축을 말하는 동시에 “튼튼한 안보”, “원칙 준수” 등의 기치를 또 다시 강조하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2013년 말 장성택 처형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현재 변화중인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하면서 통일이 곧 올 것처럼 예상한다는 것이다. “통일 대박론”을 통해 통일이 국민전체에 이익이 되는 이벤트라고 강조하고, 정부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 시키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장성택 처형 후의 북한 정국이 혼란스러운 것은 아니다. “통일 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 등, 한국에서는 통일에 대한 화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의 구상을 제안하였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 및 그에 앞선 준비작업 등은 앞전의 북한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안과 구상을 하나의 구호로써 외치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구체화 작업을 할 것인지 이다. 만약 실행에 옮긴다면, 부가적인 세부사항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5.24 조치와 비핵화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국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상황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현재 그 돌파구를 찾는 중에 있고, 가치 있는 정책사상들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모순과 혼란이

존재하는 것은, 현재 순조롭지 않은 환경에서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올 한해는 남북관계가 긴장과 대치국면에서 벗어나 돌파구를 찾고, 보다 진전된 관계로 발전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남북관계의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현재 고수하고 있는 원칙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족대의(民族大義),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다.